

성과관리 전략계획

(2025 ~ 2030)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성과관리 전략계획, 2025.10.

산업통상부 혁신행정담당관 (044-203-553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세종청사 604호

목 차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u>1</u>
2. 향후 정책 추진방향	<u>16</u>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27
1. 산업통상부 일반현황	<u>27</u>
2.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	<u>32</u>
III. 세부 추진계획	<u>37</u>
전략목표 I	<u>37</u>
전략목표 II	<u>74</u>
전략목표 III	<u>93</u>
전략목표 IV	<u>107</u>
전략목표 V	<u>119</u>
전략목표 VI	<u>142</u>

1. 그간의 정책성과

① 산업정책 분야

□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AI시대 우리 산업의 전략 모색을 위한 ‘AI 시대 新산업정책 위원회’ 출범(’ 24.5), ‘산업 AX 확산 방안’ (’ 24.9), ‘산업 AI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 (’ 25.1) 수립 등 산업 AX 전환 가속화
- 「기업활력법」 상시화(’ 24.7)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재편 지원,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 (’ 24.7),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24.12) 등을 통해 수출실적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최근 수출액(억달러) : (’20) 5,122 → (’21) 6,444 → (’22) 6,836 → (’23) 6,322 → (’24) 6,838

□ 범국가적 총력 대응을 통한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의 기틀 마련

-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 발표(’ 24.1) 및 ‘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수립’ (’ 24.3) 등을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25.1.) 및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프로그램(K-Tech Pass) 시행(’25.4.), 특성화대학원 개설(총 14개소, ’25년기준) 등 첨단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재 확보 지원

□ 소재부품장비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 ’ 19.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 투자 강화
- 한시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법을 상시법인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법으로 개정(' 19.12), R&D, 생태계 등 소부장 자립 역량 확충

- 핵심광물·원소재 특정국 의존도 완화 및 공급망 안정화 추진
 - 소부장특별법을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으로 확대(' 23.12), 185개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흑연, 요소 등) 선정(' 24.4) · 지원

□ 핵심자원 수급안정 기반 구축

- (자원안보) 자원부국의 수출통제 등 지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24.2월)
 - *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자원안보협의회 구성 및 자원안보전담기관 7개 지정
- (비축확대) 석유, 핵심광물 등 주요 핵심자원의 비축물량 확충
 - * 비축유 90백만배럴, 핵심광물 50일분 이상 비축물량 확보 완료
- (공급 인프라) 저장시설·배관 확충, LPG 보급 등 공급 안정성 제고
 - * (주배관 총연장) 5,205km, (도시가스 보급가구) 2,040만, (LPG 연료비 절감) 34%
- (석탄산업 합리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석탄산업 합리화정책('89) 등 단계적 정리를 위한 구조조정 진행 중
 - * 도계광업소 폐광('25.6월), 광해방지사업 155개소 완료 등

② 산업기반 분야

□ 산업기술 R&D를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육성 지원

-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에너지 R&D 혁신 방안('24.1월), AI+R&DI 추진전략('24.10월) 발표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新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 및 확산 촉진
 - * 승인건수(708건): (19)39 → (20)63 → (21)96 → (22) 129 → (23)160 → (24)221

- 규제특례지원단* 출범 및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24.7월) 신설

* 분야별·기능별 전문성을 가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3개 기관

○ 압도적 기술력 확보를 위한 도전·혁신적 R&D 확대 지원

- 중장기·대규모 R&D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지원('24년, 281억원)

* 예 배양육, 뇌파분석을 통한 무선 의사소통(Brain to X), 면역거부반응이 없는 인공장기 등

- 후속사업인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추진('24.8월 예타 면제 확정)

* 기간 / 규모 : '25~'34(총 10년) / 총 9,786억원(국비 7,250억원) → 적정성 검토 진행중

○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역량 강화 및 기술협력 확대 지원

- 해외 최우수 연구기관에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구축('24 6개소)

- 양자·다자 협력 강화를 통해 협력 대상국·분야 확장

* (양자) 美 加 英 獨 佛 등 14개국 / (다자) 범유럽 R&D 협의체 유레카, 유로스타 등 활용

○ 사업화 촉진을 위해 융자형 R&D 신설 등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24.4월, 기술금융투자전략회의)

* '24년 첨단전략산업분야 900억원 지원(기업당 최대 50억원, 1.3% 금리)

□ 지방투자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관련 지침('24.3월 제정完) 및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모든 14개 비수도권 시·도 지정 완료(투자계획 80조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 상향(100→200억원/기업당),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의 지방투자와 일자리 창출 촉진

* '24년 2,109억원(국비) 지원, 2조 4,783억원의 지방투자 유치, 2,998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고 지방이 주도하는 산단' 조성을 위해 3대 입지 킬러규제(입주업종, 토지용도, 임대·매매 제한) 혁파*

* 산업집적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 완료('24.7월)

- 스마트그린산단 3개소 신규지정('24.6월) 및 관계부처 합동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 마련('24.9월) 등 산업단지 혁신 지속

* '24년 신규 : 강원 후평산단, 경남 사천 1,2산단, 전주 1,2산단

-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지역 소통·협력 노력(비수도권 14개 시도 현장 방문 및 애로해결 추진) 지속

*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등 사업 추진('24년 1,358억원(국비))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992명) 및 기업 매출액(4,727억원)

□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금융·인력·수출·기술개발(R&D) 등 지원강화 및 유통산업의 발전 지원

-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24.6월) 등 정책 수립·시행*을 통해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 재정 지원 강화

* 맞춤형 기업금융지원 방안('24.2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24.6월) 등

- (금융) “중견기업 혁신펀드”, “라이징 리더스 300” 우대 금융 프로그램 등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확대*(20조원)

* (산업부) 라이징 리더스(4조원, 우리은행 저리용자), 중견혁신 정책펀드(1조원) 등 5조원 (범부처) 중견저리용자(6조원), 중견펀드(5조원), 보증(2.3조원) 등 15조원

- (인력) 中堅 일자리 박람회*(年1회→2회), 뿌리업종 中堅 외국인 고용 허가제(E-9) 확대, 지역중견-지역대학 석·박사 채용연계** 확대

* 年1→2회 개최로 확대 및 '24년 역대 최대 실적인 1,500여명 채용연계 달성

* 중견-지역 혁신 얼라이언스(R&D) 사업을 통해 지역별 中堅 맞춤형 연구인력 양성

- (수출)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中堅 수출바우처, 무역 보험 확대 및 이용료 감면 등 중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 中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발족('24.2월), 18개 유관기관과 합동 지원(年 40개사)

- (R&D) 성장의지 및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견기업에 기술개발* 및 개방형 혁신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24년 45개사 지원), 중견기업상생혁신,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 챌린지, 중견기업 DNA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 개방형 혁신 지원

- (유통산업 발전) 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한 전략수립·제도운영
및 유통 AI 확산, 유통업계 글로벌시장 진출, 내수활성화 추진
- (발전전략 수립) 제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25~' 29) 수립을
통해 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유통산업의 성장을 지원 예정
- * '23→'24년 온라인 유통성장(연 15%) 및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의 성장 부진(연 2%)
- (유통규제 합리화) 새정부의 기조를 반영하여 대·중소유통 상생
및 지역상권 회복에 부합하는 의무 휴업체, 출점규제 등 운영
- (AI·디지털 확산) 유통·AI 얼라이언스를 통해 유통단계별 AI활용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고, 디지털유통물류 표준모델 확산*
- * 디지털유통물류 표준모델 확산을 위해 '25년 24.0억원, '26년 16.8억원 정부예산 투입
- (해외진출 지원) 한류 선호도가 높은 글로벌 사우스 시장 선점과
선진국 유통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통기업의 글로벌화* 추진
- * (사업명)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 (기간) '26~'28년, (예산) 연 500억원(국비)
(주요지원 내용)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마케팅, 컨설팅 등) + 역직구 활성화(수출·통관 등)
- (코리아세일페스타) 10주년 계기 역대 최대규모·할인을 추진하고
지방 개막, 지역특산물전을 통해 지방중심 소비행사로 업그레이드

③ 통상정책 분야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 (韓美 관세협상) 한미 관세협상 타결(7.30)에 따른 미국의 관세조치
인하 합의*로 우리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하고, 주요
경쟁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의 경쟁여건을 조성

* 상호관세 25%에서 15%로 인하, 對美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키로 합의

- 통상정책자문위원회, 통상추진위원회 등 업계·전문가·관계부처와의 소통 및 의견수렴을 활성화해 정책·협상에 반영

○ 주요국과의 전략적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추진

- (미국) 한-미 정상회담(8.25) 및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통한 조선협력 등 양국간 제조업 협력방안 구체화 및 산업·통상·에너지 장관급 회담 개최로 상호간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 장관급 회담 : 상무장관, USTR 대표, 국가에너지위원장(6.22~6.27), USTR 대표, 상무장관(7.5~7.7), 에너지장관, 국가에너지위원장, 상무장관, USTR대표(7.22~7.30) 등

- (캐나다) 한-캐 정상회담(6.17),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고위급 회담(5.16) 등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포괄적 경제·통상 협력 기반 구축
- (EU) EU 및 EU회원국과의 양·다자 협의채널을 통한 EU 산업·환경 법안에 적극 대응 및 우리 기업 입장을 대변
- (중남미·대양주) 진출기업 현황, 자원 보유 등 국가별 특성에 맞춘 MOU 체결, 협력채널 운영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활동 지원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

□ 동북아, 동·서남아, 중동·아프리카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경제협력 강화로 우리기업의 신흥시장 개척 지원

- 투르크멘⁶⁰ 60억불 규모의 해외플랜트 사업 수주지원, 카자흐·우즈베크⁶¹ 핵심 광물 공급망 MOU 체결 등 상대국 경제개발, 협력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산업협력 추진

- 신산업·고부가가치 분야로의 협력 다양화·다각화*,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협력채널* 적극 운영

* 그란공급망기술 분야로 ODA 지원 확대 상대국과 철강반도체 등 주요 분야로 협력 확대

* 동서남아 경제협력 행사 13회, 중동아프리카 경제행사 20회 등

□ 신통상 대응체계 기반 마련

- 공급망·디지털·기후 등 신통상 전담조직과 양·다자 협의플랫폼을 신설·운영하여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기반 마련
-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CRN^{*}) 의장국 활동, 한-싱 디지털 동반자 협정 체결, 한-호 그린 EPA 체결^{**} 등 성과 통해 신시장 진출 기회 확대

* Crisis Response Network : 공급망 위기·교란 발생시 15일 이내 긴급회의 개최

** Green Economy Partnership Arrangement: 기후·에너지·공급망 분야 기술, 무역·투자, 표준·인증 협력 및 탄소규제 대응 등을 포괄하는 협약

□ 4 통상교섭 분야

□ 세계 2위 수준의 FTA 네트워크 확보

- 전세계 GDP 85%(59개국과 22건의 FTA)에 달하는 경제운동장 구축
- * 1위 싱가포르(88%), 2위 한국(85%), 3위 칠레(83%) 順 ('23년 GDP 기준)
- 美·中·EU·아세안 4대 경제권과 모두 FTA 체결한 유일한 국가
- 그 외 중동·중남미 등 글로벌사우스 지역으로 통상협정 확대

□ FTA 교역 확대를 통한 시장 다변화 및 통상환경 안정 기여

- 최근 5년간 FTA발효국과 교역비중은 71.1% → 77.1%으로 증가
- 보호무역주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FTA 네트워크 적극 확대하여 안정적 교역 기반 확보 및 우리 기업의 시장다변화 효과

< 최근 5년간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 > (출처 : 무역협회)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중(%)	71.1	71.5	77.2	78.2	77.1

□ 격화되는 보호무역주의 下 다자무역체제에 주도적 참여 및 對韓 수입규제 총력 대응

- APEC·WTO·G20 등 다자회의체 적극 참여, 다자간 협력 성과 도출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외교 위상 강화 도모

* ▲WTO 투자원활화협정 타결('24.2월), ▲APEC 통상장관회의 성공 개최('25.5월), ▲APEC 정상회의 주간 경제인 행사 준비 만전 등

- 트럼프 2기 행정부發 주요국의 수입규제 확산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업계 맞춤형 규제 대응지원책** 가동

* 수입규제 법무교육, 통상법무카라반, 통상법무포럼 등 관련 설명회를 통한 업계 인식 제고

** ▲중소기업 맞춤형 법률·회계 컨설팅 제공, ▲美 수입규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25.1월~), ▲신규 수입규제 법무지원 전담팀(무협통상법무대응팀) 운영('25.3월~)

5 무역투자 분야

- G2 패권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 애로 해소 및 총력 지원으로 수출 성장세* 유지

* 연간 수출액(억불) : ('20) 5,125 → ('21) 6,444 → ('22) 6,835.8 → ('23) 6,322 → **(24) 6,836.1**

** '24년 수출 6,837억달러('23년 대비 +8.1%)로 역대 최대 수출 달성 및 무역수지도 '18년(+697억달러) 이후 최대 규모인 +518억불 흑자 기록

-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24. 총 5회), 산업부 장관 주재 범부처 수출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범부처 수출지원 역량 결집 및 이해관계자 의견 지속 수렴

- 특히, 정부·수출유관기관 합동, 지역별로 찾아가는 수출현장지원단*, 수출현장방문단** 운영을 통해 현장 맞춤형 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 정부·수출유관기관 합동, 지역별로 찾아가는「수출현장지원단」운영('22.9월~, 총17회)

** 하반기 수출플러스 조기전환을 위해 장관이 직접 수출애로를 청취·해결('23.9월 출범)

***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23.10월 출범)

- 이와 함께, 수출기업의 3대 애로사항인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인증 등에 대해 정부부처 및 지원기관의 수출지원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출체질 개선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

- 유동성 공급확대, 보험·보증료 할인 등 역대 최대 중소기업 무역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수출 안정망 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 중소·중견 무역보험 지원실적(조원) : ('20) 59.6 → ('21) 66.6 → ('22) 76.8 → ('23) 86.7 → ('24) 97

- 외국인투자는 '24년 345.7억불(신고기준)로,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신고기준) 경신

* (FDI 신고) ('21년) 295.1억불 → ('22년) 304.5억불 → ('23년) 327.1억불 → ('24년) **345.7억불**

- 또한, 외투기업의 매출('23년 628조원, 국가 전체 대비 11.6%)·고용(834천명, 국가전체 대비 5.5%)·수출(1,317억불, 국가전체 대비 20.8%)을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 적극 기여중

* 연도별 FDI 실적(신고액, 억불) : ('21) 295.1 → ('22) 304.5 → ('23) 327.2 → ('24) **345.7**

- 국가전략기술·공급망 핵심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위해 글로벌 대규모 행사와 연계한 ①전략적 IR, ②인센티브(현금지원, 입지지원) 강화
- 고위급 간담회·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한 ③현장으로 발굴 및 제도 개선, ④외투기업 전용 R&D 사업, ⑤채용박람회 개최 등 적극적인 IR 활동 추진

- 또한, 유턴 활성화를 위한 “유턴 지원전략 2.0 발표('24.5)” 및 국내외 IR(135회) 등을 통해 유턴 투자규모 역대 최대치(147조원, 전년대비 27.8%↑) 달성 및 5년 연속 연 20개 이상 유턴기업 유치 성과 달성

- 한국형 SMR 기술개발 착수, 고준위 특별법 제정 및 원전수출 성과 등 우리 원전의 미래 경쟁력 강화

- (원전 수출) 루마니아 설비개선 사업 수주('24.12월) 등에 이어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 최종 계약('25.6월) 등 원전 산업 쏠 주기에 걸친 원전수출 성과

⑥ 기술표준 분야

□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부터 국민 생활 편의까지 기여하는 표준정책 활동 추진

○ 첨단산업 분야 국가표준화 전략 수립

- (표준화전략)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24.5) 등 산업정책을 반영한 민관 합동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 수립·발표(' 24.5)

* (첨단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미래차, 미래선박, 로봇, 첨단 제조, 양자, 핵심소재, 원자력, 청정에너지

- (포럼운영) 분야별 표준포럼(1,000여명 전문가 참여)을 통해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성과 점검을 위한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 운영

* ISO 회장(조성환)과 임채민 고문을 공동의장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리더 18명 참여

○ 핵심 신기술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 마련

- (양자기술) IEC 백서발간 등을 통한 IEC/ISO JTC 3(양자기술) 기술 위원회 설립 주도·초대의장 수임*(' 24.2), 창립총회 서울 개최(' 24.5)

* IEC/ISO JTC3 의장 : 전주대학교 이해성 교수

- (MVDC) ‘25년 IEC의 중점 추진 표준화 주제로 우리나라의 MVDC* 기술이 선정(' 24.5), SEG 17(표준화평가그룹) 신설(' 24.10) 및 컨비너 수임**

* MVDC : 중전압 직류배전(28, 19조원 시장), ** SEG 17 컨비너 : 전기연구원 김슬기 전문위원

○ 글로벌 표준 리더국으로 도약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표준제안) ISO 정책 주도('24~' 25 조성환 회장), ISO/IEC 국제 임원(의장·간사·컨비너) 수임* 및 첨단산업 분야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제안** 확대

* 임원수임(명) : ('22)250→('23)263→('24)277, ** 표준제안(건) : ('22)81→('23)82→('24)93

- (표준협력) 미·독·중·일 등 주요 기술표준 강국과 표준화 협력*을 통해 글로벌 표준 경쟁력 제고

* (美) 국립표준기술원^{NIST}과 MoU('24.6), (獨) 표준협회^{DIN·DKE}와 협력분야 확대(청정 에너지, 수소, AI 추가), (中·日) 동북아표준협력포럼을 국장급로 격상, 세계 최초 「25년 국제 AI 표준 서밋」 개최 확정(ISO·IEC·ITU 주최, 한국 주관)

○ 민간 지원을 위한 표준정책 추진

- (R&D 표준연계) R&D 결과물이 표준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표준화 동향 조사 및 표준 연계 지원

* (사례) 「수전해 스택 성능 평가 시험방법」 국제표준안 마련

- (매치업 사업) 중소기업 보유 우수 기술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국제표준* 제안(안) 개발 지원

* (사례) 「메타버스 기반 시각 정보 보호」 등 국제표준안 개발

○ 국민 생활편의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표준화 추진

- (생활편의) 대국민 공모·국민투표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배려, 불편 해소 등에 대한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 도출

* 간병인 서비스, 의류 치수 범위 표시 기준, 생분해성 소재, 공공도서관 시설 이용 등

- (인체치수) 아동·청소년 인체치수 조사·보급, 인체치수표준 증장기 발전 방안 마련 등

□ 제품안전 규제 합리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확보

- (법령정비) 제품안전기본법·전기생활안전법·어린이제품법 등 법령 및 안전기준 정비(63건)

* [제품안전기본법]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운영 및 사업수행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정비로 안정적인 제품안전 사후관리 수행

* [전기생활안전법] 제품 환경변화를 반영한 모터 달린 보드 안전관리 수준 규제 조정에 따른 현행화 등을 위한 법령 정비(9건)

* **[어린이제품법]** 소상공인, 중소기업대상 KC인증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 감액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등(2건)

* **[안전기준 정비]**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및 전자식마스크 안전기준 개정 등 신시장 출시 지원과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제·개정(52건)

○ **(정책수립)** 불합리한 사전규제는 정비하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사후 시장감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품안전 정책 마련

- 제품안전관리 체계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5차 (2023-2025) 제품안전종합계획」 수립('23.4월) 후 정상추진 중

* **[종합계획 기본 4대방향]** ❶기업·소비자 Win-Win을 위한 제도개선, ❷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❸촘촘한 시장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의 디지털 전환, ❹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 기반 조성

- 어린이제품 안전강화를 위한 「제4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 계획(안)」 수립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완료(~' 24.12.), '25.1월 발표

○ **(불법·불량제품 단속)** 국내 유통 제품 및 통관단계 수입 제품에 대해 KC 미인증, 기준 부적합 제품을 적발*, 제품시장 모니터링** 추진

* 불법·불량 제품 2,460건 수입을 차단하고, 4,556건 시중 유통 차단

**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모니터링: ('21) 144,651건 → ('22) 127,847건 → ('23) 161,483건 → ('24) 170,460건

○ **(해외직구 등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 방지)**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신규 추진 등 안전성 조사 강화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

* **[해외직구]** 적극행정 컨설팅 과정을 거쳐 448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 85개 위해제품 판매차단 등 안전조치로 국내 유입 방지

[국내유통] 4,248개 국내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 240개 제품 리콜조치로 시중 유통 차단

○ **(이행점검 강화)** 리콜제품별 전담자 지정 및 리콜이행 Help Desk 운영, 1,598건의 이행점검 실시하여 리콜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

- (위해제품 감시체계 강화) ①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운영매장 확대*, ②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입 차단 등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운영매장: ('23) 259,523(개) → ('24) 265,513(개)

** '24년 조치: 자발적리콜(15건), 구매대행중지(85건), 불법조사의뢰(70건) 등 170건

- (제품사고 조사) 제품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규명 및 동일 유형의 제품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소비자 보호조치 적시 추진

* 전기매트 제품 수리 권고('24.8월), 직류전원장치 제품 수거 명령('24.12월), 불법조사의뢰(22건) 등 조치

- (통관단계 협업검사) 관세청과 협업검사를 통해 시기별 수요 증가 품목 집중 검사*(4회) 및 상시 안전성 검사로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

* 신학기(2월), 가정의달(4월), 여름용품(6월), 겨울용품(11월) 불법·불량제품 774건(58만점) 적발
총 적발건수 2,460건('24년, 245만점) : 전기용품 500건, 생활용품 463건, 어린이제품 1,497건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신뢰성 기반 강화로 국내기업 지원

- (국내인증 지원) 탄소중립·첨단산업 분야 등의 시험인증서비스 발굴 및 제공을 통해 시험인증기관 및 기업의 전문성·경쟁력 강화

* 자동차용 3차원 증강 헤드업 디스플레이 성능 시험인증 서비스 등 유망시험 인증서비스 개발(7개 분야), 항바이러스 시험기준 마련 및 인프라 구축, 다수인증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 (해외인증 지원) 해외인증 원스톱 종합 지원체계 구축('23.4월 지원단 발족) 및 종합지원 전략('23.5월)을 통한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지원*

* ('24년) 상호협약 확대(누적 200건), 설명회·간담회(15회), 상담부스 운영(251社), 기업 방문 자문(61社),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 구축 및 인증정보 제공(136개국 639개)

- (신뢰성 제고) 부정성적서 유통 방지를 위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운영 및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홍보

* ('24년) 부정행위 31건 조사(형사처분 의뢰 4건 및 행정처분 5건)

□ 시험인증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신뢰성 제고

- (국제통용성 확보)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동등성평가 수검('24.5.) 및 인정분야 확대('24.11.)를 통한 국제 적합성평가 기반구축
 - * 기존 6개 분야(시험, 교정, 메디컬, 제품인증, 숙련도, 표준물질) + 1개 분야(검증) 확대
- (개발지원) KOLAS 공인기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 * 병리분야(분자유전학 시험), 핵의학분야(종양표지자 시험) 등 숙련도시험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가 적거나, 시료개발에 고비용이 소요되는 분야 등을 선정하여 지원

□ 국내기업의 인증취득 및 융합 신제품 시장출시 지원

- (융합신제품 등 시장출시 지원) 신기술·신제품·우수재활용제품·적합성인증제도를 통한 시장 출시 지원(총1,183건 신청)
- (인증·표준 애로 해결) 1381 인증표준 정보센터의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서비스 품질개선 및 홍보채널 다양화

< 1381 인증표준 정보센터 개요 >



- ◆ (개요) 표준·인증 정보 관련 애로사항을 신속·정확히 해결하는 종합 민원지원창구
- ◆ (상담범위) 해외인증, 국내인증, 표준(권고·강제·국제)
- ◆ (운영채널) 전화, 방문, 인터넷(모바일 지원)

□ 신기술 발전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법정계량 체계 구축 지원

- (법령정비·제도개선) 법정계량기 국제기준* 도입 및 기업·시장 수요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 추진
 - * 계량기 기술기준 개정(4종), K-마크 폐지(법률, 시행령 개정), 저울 규제완화 추진
- (기술력 확보) 전기·수소차 충전기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초격차 계량기술 지원 확대 및 기반조성
 - * ❶ 전기차 충전기 등급화 ❷ 수소계량기반구축 R&D 예산 확보(100억)

- (신뢰성 강화) 시판품 조사*, 법정단위 모니터링·계도, 불법계량기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한 신뢰 강화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 '24년 시판 계량기 조사(40 모델), 정량표시상품 조사(1,000건) 실시

** ('21년) 90건 → ('22년) 151건 → ('23년) 148건 → ('24년) 194건

□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국내 기술규제 개선

- (TBT 대응) WTO TBT 통보문 4,337건, 미통보 규제 1,423건을 발굴 분석하고, 중요규제 1,291여건을 심층 분석하여 산업계에 제공

- (FTA TBT 협상·이행 강화) 신수출시장과 FTA TBT 협상 추진·타결 및 기체결된 FTA의 전략적 이행으로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 (협상) 한-조지아 EPA TBT 타결, 한-몽골, 한-태국 EPA 및 한-EU 디지털통상 협상 추진, (이행) 한-인도, 한-아세안 TBT 공동작업반, 한-중, 한-베트남 FTA TBT 위원회 개최 등

- (규제협력) 기술규제 기업애로가 증가하는 인도, 멕시코 등과 양자 회의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선제적 TBT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기술규제영향평가)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해 사전에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

* '24년도 총 150건의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과도·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의견제시

-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국조실과 협업하여 소부처 257개 인증제도에 대해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마련(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4.2.27.)

* 실효성 낮은 인증 폐지(24), 중복 인증 통합(8), 절차 간소화 등 개선(66) 등

- (대외성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하는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 3개 분야 중 2개 분야*(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 달성

* ①규제영향분석(신설·강화규제 심사 등), ②사후평가(기존 규제 적합성 검토 등)

2. 향후 정책추진 방향

□ 1 산업정책 분야

□ 산업AI 활용 확산을 통한 AI 강국 도약

- 제조AI 및 제조서비스 선도프로젝트 선정·지원
 - 제조 공정에 AI를 적용하는 '제조AI' R&D 지원
 - 제조기업 대상으로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 업종별 '산업AI 혁신센터'를 거점으로, 제조기업(산업AI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AI 솔루션 실증·확산 및 산업AI 생태계* 구축
- * 산업AI 수요기업(제조기업) - 산업AI 공급기업(솔루션기업) - 연구기관·대학

□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을 통한 첨단 산업국가 도약

- 휴머노이드 등 AI 확산으로 제조업을 혁신
 - 휴머노이드 양산 돌입과 산업용 AI로봇 확산으로 공정혁신
 - 유통·디자인 등 제조서비스, 뿌리산업 등 제조업 전반으로 AI확산
- 반도체·이차전지·미래자동차 등 첨단 전략산업 업그레이드
 - 제품 탑재형 AI반도체·초격차 HBM 등 세계 선도형 반도체 기술개발
 -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및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
 - 친환경차·소프트웨어차량(SDV)·AI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혁신 생태계 조성

□ 주력산업 고도화 및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하고, 석유화학 등 위기업종은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 확보
- * (자동차) 자율주행·친환경차, (조선) 암모니아·자율운항선박, (철강) 수소환원철 등
- 자립화, 수입선 다변화, 자원확보를 축으로 공급망 대응 역량 제고

② 산업기반 분야

□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기술 혁신 추진

- 초격차 기술확보 및 신산업 창출 지원을 통해 산업기술 R&D의 전략성 강화와 파급력 있는 성과창출 견인
-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도전혁신적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글로벌 기술역량 강화를 지원
- R&D 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제도개선 및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기술금융 확대 및 기술나눔 활성화 등을 지원

□ 5극3특 균형성장, 지역투자 및 일자리 창출, 산단 고도화 추진

- 수도권 일극 체제를 뛰어넘어 5극3특 중심 균형성장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산업활력펀드 확대조성('24. 260→'25. 1,080억원), 초광역권 연계 기술개발사업 신규 추진 등
- 기회발전특구 추가지정·투자이행 점진 및 인센티브* 강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 추진, 지방투자보조금 한도 확대(100→150억원/건당)
 - * 외투기업 시도별 면적상한 미적용, 기회발전특구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신설('25.上) 등
 - 산업위기대응제도 개선,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등을 통해 지역 주된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제 위기 대응
- 제조지능화^{AX}, 탄소중립^{GX}, 청년친화^{YX} 중심의 K-산업단지 대전환 추진으로 지역 경제거점인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
 - * AX 실증산단(10개소), 탄소중립대표산단(1개소), 문화선도산단(3개소) 신규 지정
 - 산업·지역 융합 핵심정책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담은 특별법 제정 추진

□ 중견기업 기본계획 수립('25), 금융·인력·수출·R&D 등 中堅 맞춤형 지원 강화, 유통업계 상생 생태계 구축

○ 中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성장단계별 지원 기반 마련

- (법·제도) 성장걸림돌 규제 개선 및 초기 중견기업 보호 중심의 「중견기업법」을 中堅 성장지향형 지원체계로 개편*

* 중견기업 소주기 지원, 中堅 성장촉진 기금, 중견기업연구원 설치 등 근거 마련

- (금융) 제1·2·3차 중견기업 혁신펀드*, 라이징 리더스 300 등 지원 확대

* '24년 총 2,030억원 규모로 결성 完 → '28년까지 전체 금액 투자 추진

- (인력) “中堅 일자리 박람회” 개최, 중견기업 맞춤형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 등 인력지원 강화

- (수출·해외진출) 中堅 특화 수출 바우처 지원 확대, 무역금융 지원 확대, 중견기업-유럽 산·학·연간 기술협력 지원 등

- (R&D)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中堅-중소기업·대학·공공연과 공동연구를 지원하여 첨단 산업분야 협력기반 강화

○ 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한 전략수립·제도운영 및 유통 AI 확산, 유통업계 글로벌시장 진출, 내수활성화 추진

- (발전전략 수립) 제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25~' 29) 수립을 통해 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유통산업의 성장을 지원 예정

* '23→'24년 온라인 유통성장(연 15%) 및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의 성장 부진(연 2%)

- (유통규제 합리화) 새정부의 기초를 반영하여 대·중소유통 상생 및 지역상권 회복에 부합하는 의무 휴업제, 출점규제 등 운영

- (AI·디지털 확산) 유통·AI 얼라이언스를 통해 유통단계별 AI활용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고, 디지털유통물류 표준모델 확산*

* 디지털유통물류 표준모델 확산을 위해 '25년 24.0억원, '26년 16.8억원 정부예산 투입

- (해외진출 지원) 한류 선호도가 높은 글로벌 사우스 시장 선점과 선진국 유통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통기업의 글로벌화* 추진

* (사업명)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 (기간) '26~'28년, (예산) 연 500억원(국비)

(주요지원 내용)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마케팅, 컨설팅 등) + 역직구 활성화(수출·통관 등)

- (코리아세일페스타) 10주년 계기 역대 최대규모·할인을 추진하고 지방 개막, 지역특산물전을 통해 지방중심 소비행사로 업그레이드

□ 안정적인 수급기반 확보 및 자원안보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 제고) 석유·가스, 핵심광물 등 핵심자원의 통합 관리를 통한 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역량 강화
- (유·가스 수급 안정) 비축유 확보, 도입선 다변화, 가스 저장 시설 및 배관망 지속 확충, 천연가스 직수입자 제도 개선 추진
- (석탄산업 합리화) 산업 구조전환과 취약계층 보호 병행
-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비축·재자원화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통한 이차전지, 전기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③ 통상정책 분야

□ 美 관세조치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고, 북미지역 국가(美·加)와의 산업·통상·에너지 협력 네트워크 강화

- 트럼프 정부 관세조치 등 주요 통상 현안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재외공관 및 업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대응전략 마련
- 한미 고위급 회담, 주정부 및 의회 주요인사 면담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우리 업계의 우려·애로 해소
- 한미 FTA 이행위 등 채널을 활용하여 對美 통상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한미 간 상호호혜적 통상관계 구축

- 한-캐 고위급 회담 개최 등을 통한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신규 프로젝트 발굴 추진으로 우리 기업 진출 및 사업기회 확대

□ 주요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시장 다변화 추진

- (중남미·대양주) FTA, 무역·투자 MOU 등 협력수준별 맞춤형 통상 네트워크 확대로 수출 다변화 및 핵심광물·청정에너지·수소 등 협력 분야 확대
- (EU) EU와 신통상 분야 실질 협력을 추진 및 EU 시장 진출시 규제 해소 등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적극 지원

□ 협력채널을 다변화·다각화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교역·투자 환경 변화 및 협력수요를 고려하여 협력 관계 고도화

- 공관·무역관 등 현지 무역·투자 인프라, 고위급 경협위 및 국장급 핫라인 등 활용한 한국기업 애로 해소 지원

□ 신통상 협력 확대 및 미래산업 경쟁력 제고

- 美 관세협상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 개편과 자국중심적 신통상 규범 도입 확산에 대응하여, 양다자 협력 확대 등 글로벌 연대 강화
- 기후클럽, IPEF* 등 공급망·디지털·기후 규범 논의에 선제 대응하고 CBAM**, CSDDD*** 등 신통상규범 대응 부담을 최소화하여 우리 기업에 유리한 여건 조성 및 수출 경쟁력 확보에 기여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탄소국경조정제도)

*** Corporate Sustainability on Due Diligence Directive(공급망 실사 지침)

□ 4 통상교섭 분야

□ FTA 확대 및 기체결 FTA 개선·활용을 통한 통상 新항로 확보

- **(신규 FTA)** 글로벌사우스 지역으로의 통상협정 확대를 통해 거대 경제권 진출 및 경쟁국 대비 상품·서비스 경쟁우위 실현
 - 아프리카·남미·서남아 등 신흥국 대상으로 통상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다변화 지원
 - RCEP 외연 확대·내실화 주도 및 CPTPP 가입 추진 검토 등 메가 FTA를 활용한 유사입장국 연대 강화
- **(FTA 이행)**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 발굴 및 FTA 상대국과의 협의채널(공동위 등)을 통해 애로 개선 요구, 규범 현대화 추진
- **(FTA 활용)** 원산지 증명 간소화 및 자율발급 확대, 서비스·디지털 분야 활용 지원, 피해기업 종합지원 체계 확충 추진

□ 다자무대 속 국가위상 제고 및 수입규제 대응체계 고도화

- **(다자협력 강화)** ^{26년}MC-14 주도적 성과창출, AI·기후변화·산업정책 등 新이슈 논의 적극 참여 등 다자무대 주도
 - 2025 APEC 경제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투자 촉진, 수출 확대 등 실질적 경제성과 창출 및 국가위상 제고
- **(수입규제 대응)** 트럼프 2기 행정부 下 지속될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비하여 민관합동 대응체계 구축 및 기업지원 강화
 - * 고위급 민관합동 무역장벽협의회 개최, 수입규제 법무교육 지속, 중소기업 컨설팅 강화확대 등
- **(통상분쟁 대응)** WTO 분쟁해결 기능 약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분쟁 및 통상현안 관련 법적 이슈에 적기 대응

5 무역투자 분야

□ 수출모멘텀 유지를 위한 품목·시장·주체 다변화 추진

- (품목 다변화)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토대로 차세대 수출 유망 품목 적극 육성
- (시장 다변화) 특정 시장 의존도 축소를 위해 글로벌사우스 해외무역관 확대, 전시회·무역사절단 집중 지원 등을 통한 신흥·대체시장 개척
- (주체 다변화) 내수·초보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수출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글로벌 강소·중견 기업을 육성하여 탄탄한 수출저변 구축
- (인프라 확충) AI를 활용한 무역 인프라 고도화, 글로벌 수준의 지역 전시회 육성, 무역금융 확대 및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강화

□ 수출·투자·중소기업 등 보호무역 애로기업 적극 지원

- (피해기업 지원) 美 관세조치 등 보호무역주의 피해 완화를 위해 무역금융지원, 대체시장 발굴, 물류 지원, 정보제공 등 종합 지원
 - (무역보험) 피해 중소·중견 대상 보험료·보증료 할인, 한도 상향, 재무 악화 중소·중견 대상 제작자금 대출 특례보증 지원 확대
 - (대체시장 발굴) 수출 바우처 등을 통해 피해기업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인증, 인허가 등 지원 강화
 - (물류) 피해기업 수출 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비 지원 및 현지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 추진
- (국내복귀) 美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유턴 선정요건 완화 및 보조금 지원 확대

□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와 유턴 지원으로 국내 투자유치 확대 추진

○ (외투) 첨단산업(AI, 바이오 등), 핵심공급망 등 주요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美·獨·日 등 핵심 타겟국가 중심 현지 IR 추진

- 업종별 공급망 분석*을 통해 국내생산이 어려운 ‘아킬레스 분야’를 발굴하고, 공급망 빈틈을 채우는 외투유치 추진

*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항공·드론, 콘텐츠·IT, 금융, 2차전지, 에너지, 석유화학, 로봇 등

- 또한, 외투기업 및 주한상사와 상시 소통과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통해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유턴) 美 트럼프행정부 관세 및 주요국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피해 우려 해외진출기업 대상으로 유턴 지원활동 강화

-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턴하는 기업 대상으로 세제지원 확대 및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인센티브 확대

□ 체코 후속호기 등 원전 추가 수주 노력 및 한·미 원전협력 강화*, 설계·시공·기자재 등 쏘주기 분야 원전수출 지속

* 트럼프 행정부의 ‘원자력 행정명령’ 서명(5.23) 등 美 원전확대 정책 기조에 대응하여, 글로벌·미국내 시장에서의 원전 프로젝트, 핵연료 협력 등 강화

⑥ 기술표준 분야

□ AI 시대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선도

○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분야 우리 우수기술을 차별화하고, AI 등 신산업 기준 정립에 우리 기업 의견을 반영하는 표준화

* 중점 추진 15대 표준화 분야 : AI·양자·첨단제조·이차전지·반도체·미래차·미래 선박·디스플레이·로봇·핵심소재·청정에너지·원자력·첨단바이오·메타버스·항공우주

- AI·디지털 전환, 트럼프 2.0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첨단 산업 분야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범부처 전략 마련

* 과기부 등 19개 부처 참여 「제6차 국가표준 기본계획(‘26~’30)」 수립

- 배터리 등 우리 수출품에 적용되는 탄소발자국, 자원효율성 평가결과 공개 의무 등 탄소규제 대응 지원 표준 개발·보급
- AI, 미래차, 수소 등 주요 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국제표준 컨설턴트를 매칭하는 등 기업의 표준화 활동 참여 확대
- 생활 속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생활편의 표준을 지속 개발하고 책·결상 등에 활용되는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보급

* 제9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 (‘25~’26)성인 → (‘27)고령자 → (‘28)아동청소년 → (‘29)장애인

□ 글로벌 표준 리더국 도약을 위한 표준협력 강화

- IEC 이사국 선임 및 표준화관리위원회 임원수입, ISO·IEC 의장·간사·컨비너 수입 증가 등 국제표준화 리더십 강화
- AI,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포럼, 한독·한미·한중일 표준협력 채널 구축 등 국제표준화 협력 기반조성
- UL, IEEE 등 주요 사실상표준화기구와 표준협력(MOU, 양자회의 등) 강화하고 R&D와의 연계를 통해 사실상표준 개발 지원 확대

□ 융복합·신기술 제품 출시 등 기술발전에 적극 대응하고, 온라인 시장 확대 등 제품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

- (신수요 대응) 기술발전 및 시장 니즈에 따른 신유형 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마련(안전기준 마련 등 제품출시 지원)
- (규제 합리화) 제품안전은 지속적으로 제고하되, 제품안전 규제

방법은 합리화* 추진(안전관리 규제수준 조정, 모델구분 단순화 등)

* 품목별 위해도, 안전성조사 등 제품사후관리 결과 및 국제적 규제수준 등을 종합고려

- (안전성조사 확대) 해외직구 등 온라인 시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로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

*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 확대(24년 448개→1,000개), 온라인 안전성조사 비중 70%이상 유지 등

- (위해제품 유통 감시강화) 불법제품 기획단속, 온라인 시장 모니터링 강화, 통관단계 협업검사 확대 등 추진

* 온라인 기획 단속,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 운영매장 수 확대, 소비자단체와 협업을 통한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

- (제품 사고확산 방지) 제품 사고 조사 시 위해·사고 정보 수집·분석 기능 확대 및 제품 리스크평가 활성화로 제품 사고 확산 방지 강화

* 기업 스스로 제품 설계 단계 또는 시장 출시 전 자체적으로 리스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품 리스크평가 기업지원 플랫폼'을 제공하여 제품 사고 예방 활성화

□ 글로벌 인증환경 변화와 新수요에 대응하는 시험인증 서비스 경쟁력 확보로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지원 확대

- 유망 수출품목 해외인증 지원 강화, 신산업 분야 시험인증서비스 선제적 개발, 시험성적서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로 기업 지원 강화

- 국제표준 기반 KOLAS 공인 메디컬 시험기관·숙련도 운영기관 전환평가 추진 및 공인기관 성적서 등의 지속적인 국제통용성 확보

- 유망기업 전주기(발굴-기술평가-판로-수출) 지원 등 인증제도 개선 및 인증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지원

- 미래모빌리티 등 글로벌 산업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계량 제도 개선 및 경쟁력 확보, 면밀한 사후관리를 통한 상거래 신뢰성 강화

□ 기술규제 혁신으로 기업부담 완화 및 수출 진흥

- 주요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략 수립 및 인프라 구축으로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발굴·해소 강화

* 해외 주요국과 기술규제 협력 확대, 지능형 해외기술규제 정보제공 등

- 기체결 FTA 분석에 바탕한 맞춤형 전략으로 FTA TBT 협상 추진 및 주요 TBT 유발국(EU, 중국 등)을 중심으로 TBT 이행 강화

- 불합리한 기술규제 신설·강화를 방지하고,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을 검토*하는 등 국내 기술규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기업부담 경감

* 3주기('25~'27)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실시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산업통상부 일반 현황 (작성 중)

(1) 조직

○ 본부 : 장관, 차관, 1본부, 1차관보, 6실, 3국 · 18관, 70과 8팀

- 기획·직속 분야 :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3관 9과 1팀

- 산업 분야 : 산업정책실 4관 16과 3팀, 산업기반실 3관 9과 1팀

- 자원·원전수출 분야 : 자원산업정책국 4과 1팀, 원전전략기획관 2과

- 통상 분야 : 통상정책국 1관 6과 1팀, 통상협력국 4과,
통상교섭실 3관 11과 1팀

- 무역·투자 분야 : 무역투자실 3관 9과

○ 소속기관 : 1위원회, 8원, 5소, 1기획단

* 무역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자유무역지역관리원(7개원), 광산안전사무소(4개소),
광업등록사무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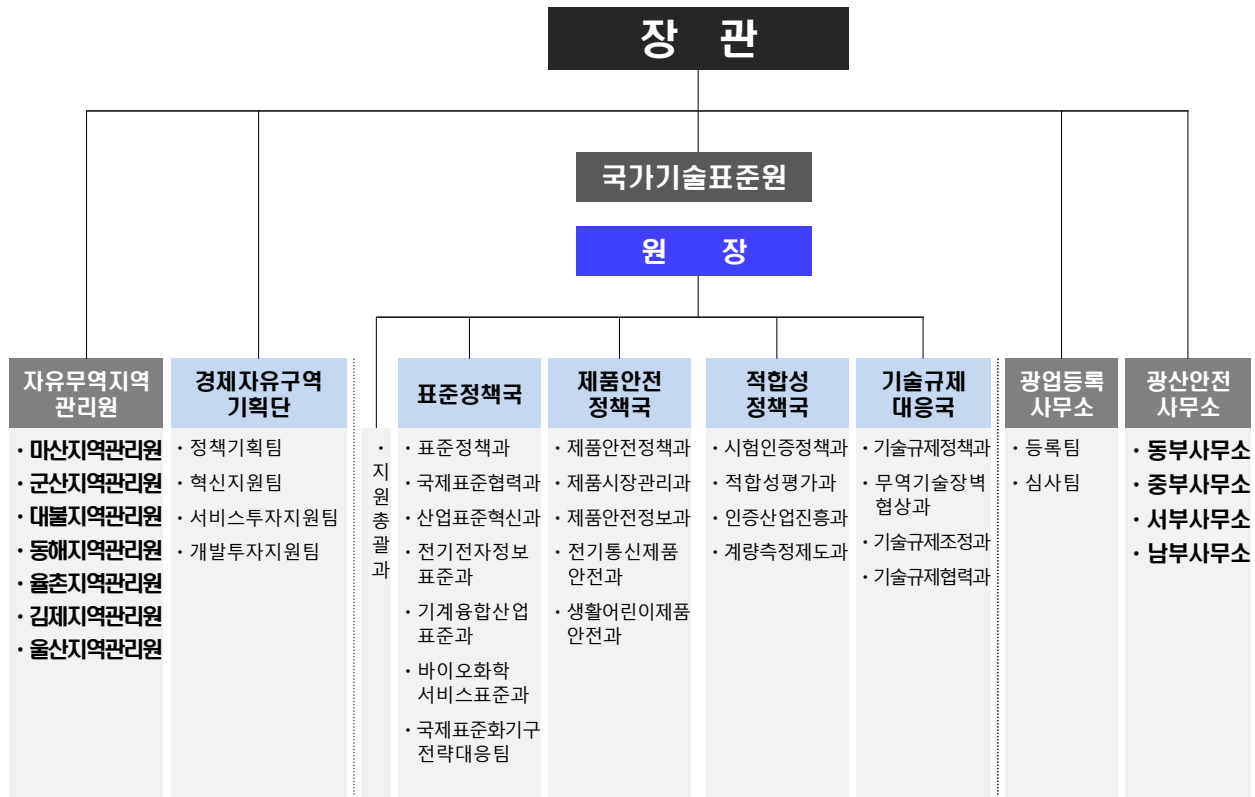
○ 정원 : 1,214명 (본부 787명 + 소속기관 427명)

구 분	계	정무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관리 운영	연구직	전문직	전문 경력관
계	1,214	3	37	25	76	97	368	481	23	78	23	3
본부	787	3	29	22	49	86	283	288	5	1	18	3
소속	427	0	8	3	27	11	85	193	18	77	5	-

산업통상부 조직도 (2025. 10월 기준)



산업통상부(소속기관) 조직도 (2025. 10월 기준)



- * 공통 : 관리과, 수출산업과
 * 투자홍보과(마산), 투자유치과(군산)
 * 동해, 울촌은 하부조직 없음
- * 경자단 내 팀은 비직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무역조사실

- 무역구제정책과
- 산업피해조사과
- 덤핑조사과
- 덤핑조사지원과
- 불공정무역조사과
- 판정지원과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4	'25	'26	'27	'28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115,188	114,336	142,219	154,048	154,297
(전년대비증가율, %)	4.0	△0.7	24.4	8.3	0.2
○ 총계	308,790	318,816	366,216	395,978	417,032
(전년대비증가율, %)	1.5	△0.7	14.9	8.1	5.3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1,419	1,423	1,523	1,629	1,743
(전년대비증가율, %)	3.2	0.3	7.0	7.0	7.0
○ 기본경비	313	325	338	347	358
(전년대비증가율, %)	10.2	3.0	4.0	2.7	3.2
○ 주요사업비	113,457	112,588	140,359	152,072	152,197
(전년대비증가율, %)	4.0	△0.8	24.7	8.3	0.1
□ 예산					
○ (총)지출	90,651	90,841	113,668	123,475	126,118
(전년대비증가율, %)	7.3	0.2	25.1	8.6	2.1
○ 총계	113,339	115,843	142,017	154,632	162,567
(전년대비증가율, %)	4.2	2.2	22.6	8.9	5.1
【일반회계】					
○ (총)지출	35,232	39,013	51,889	54,810	54,146
(전년대비증가율, %)	△13.7	10.7	33.0	5.6	△1.2
○ 총계	55,455	60,843	77,009	81,938	84,630
(전년대비증가율, %)	△12.5	9.7	26.6	6.4	3.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총)지출	12,259	11,878	14,000	16,391	18,005
(전년대비증가율, %)	46.0	3.1	17.9	17.1	9.8
○ 총계	12,260	11,879	14,000	16,392	18,006
(전년대비증가율, %)	46.1	△3.1	17.9	17.7	9.8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 (총)지출	17,390	18,228	20,293	21,803	24,761
(전년대비증가율, %)	2.6	4.8	11.3	7.4	13.6
○ 총계	17,390	18,228	20,293	21,803	24,761
(전년대비증가율, %)	2.6	4.8	11.3	7.4	13.6

구 분	'24	'25	'26	'27	'2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총)지출	159	57	134	155	176
(전년대비증가율, %)	순증	△64.2	135.1	15.7	13.5
○ 총계	159	57	134	155	176
(전년대비증가율, %)	순증	△64.2	135.1	15.7	13.5
□ 기금					
○ (총)지출	24,822	23,494	28,552	30,573	28,179
(전년대비증가율, %)	△6.6	△4.2	21.5	7.1	△7.8
○ 총계	195,450	202,973	224,199	241,346	254,465
(전년대비증가율, %)	0.0	3.8	10.5	7.6	5.4
【산업기술진흥및사업촉진기금】					
○ (총)지출	1,129	1,421	3,249	3,871	1,983
(전년대비증가율, %)	176.0	25.8	128.6	19.1	△48.8
○ 총계	2,024	2,352	4,027	4,857	3,171
(전년대비증가율, %)	9.4	16.2	71.2	20.6	△34.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총)지출	2,283	1,990	2,147	2,623	2,336
(전년대비증가율, %)	24.1	△10.3	7.9	22.2	△10.9
○ 총계	92,907	104,062	109,693	120,275	130,200
(전년대비증가율, %)	7.9	12.0	5.4	9.6	8.3
【무역보험기금】					
○ 총계	55,510	57,807	67,845	73,025	78,068
(전년대비증가율, %)	△8.2	4.1	17.4	7.6	6.9

* 무역보험기금은 금융성기금으로 총지출에서 제외

2.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

(1) 전략계획의 주요 특성

산업정책 분야

- (전략목표) 산업구조 혁신, 첨단·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소부장 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 (산업정책) 첨단산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지원, 주력산업 대전환, AI 시대의 新산업정책 추진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력 회복
- (공급망) 기술개발, 다변화, 비축 등으로 핵심품목 공급안정성 강화, 소부장 특화단지에 R&D지원,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공급망 강화
- (제조산업)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혁신전략을 수립·추진하고 R&D, 제도·인프라 확충 및 시설 투자 등 지원 강화
- (첨단산업) 민간의 신속·과감한 투자와 경쟁국 수준의 범부처 지원으로 첨단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자원산업) 적극적인 핵심광물 확보, 석유비축 등 안정적인 국내 석유·가스 수급 관리를 통한 에너지·자원 공급망 강화

산업기반 분야

- (전략목표) 기술기반의 산업혁신 생태계 강화를 통해 지역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한다.
- (기술융합)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기술 혁신 추진
- (지역경제) 5극3특 중심 균형성장 지원체계 마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산업위기 대응, 노후산단의 경쟁력 강화 및 RE100산단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중견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육성 및 유통업계 발전 지원

통상정책 분야

- (전략목표) 산업-통상 연계로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전략적 경제 협력을 고도화한다.
- (통상정책)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통상역량을 강화하고, 산업-통상 간 전략적 연계 강화로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활동 지원
- (통상협력)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상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
- (신통상전략) 공급망, 디지털, 기후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

통상교섭 분야

- (전략목표) 수출 시장 확대 및 글로벌 통상의 연대 구축을 위해 양자·다자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자유무역협정정책·교섭)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층적인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략적인 FTA 이행·활용 추진
- (다자통상법무)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협약체에 적극 참여 및 논의 주도를 통해 우리 경제 외교 위상 제고 도모

무역·투자 분야

- (전략목표) 수출구조 혁신 및 외국인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 (무역정책)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무역보험 지원 확대로, 수출역량 확충 및 수출저변을 확대

- **(투자정책)**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외투유치 및 유턴 촉진 등을 통해 투자유치 모멘텀 유지·확대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 **(무역안보)** 수출통제 적시 대응 및 산업기술보호를 통한 우리 기업의 무역안보 리스크 최소화
- **(무역위원회)**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무역구제 시스템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무역구제 조치를 추진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 무역질서 확립에 기여
-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의 혁신성장 전략을 적극 지원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및 신규일자리 확대에 노력
- **(원전수출)** 글로벌 원전 수요 증가의 기회를 살려 수출 확대 및 해외 진출 지원

기술표준 분야

- **(전략목표)** 표준·인증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 사회와 안전하고 풍요로운 국민의 삶을 지원한다.
 - **(표준정책)** 기업의 신시장 창출 및 수출 지원에 기여하고 국민 생활 편의를 확보하는 표준정책 추진
 - **(제품안전)** 융복합신기술 제품 출시 등 기술발전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시장에 대한 감시 확대 등 제품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
 - **(적합성정책)** 글로벌 인증환경 변화와 新수요에 대응하는 시험인증 서비스 경쟁력 확보로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지원 확대
 - **(기술규제대응)**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술규제 혁신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2) 전략계획의 목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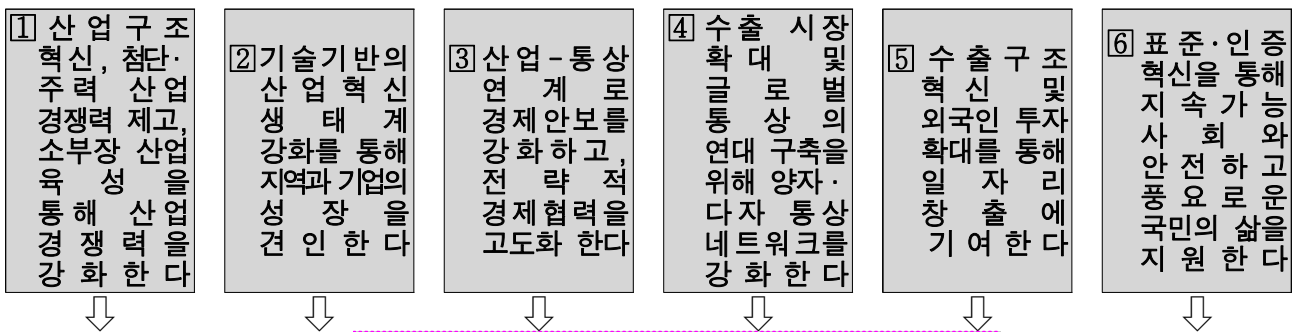
임무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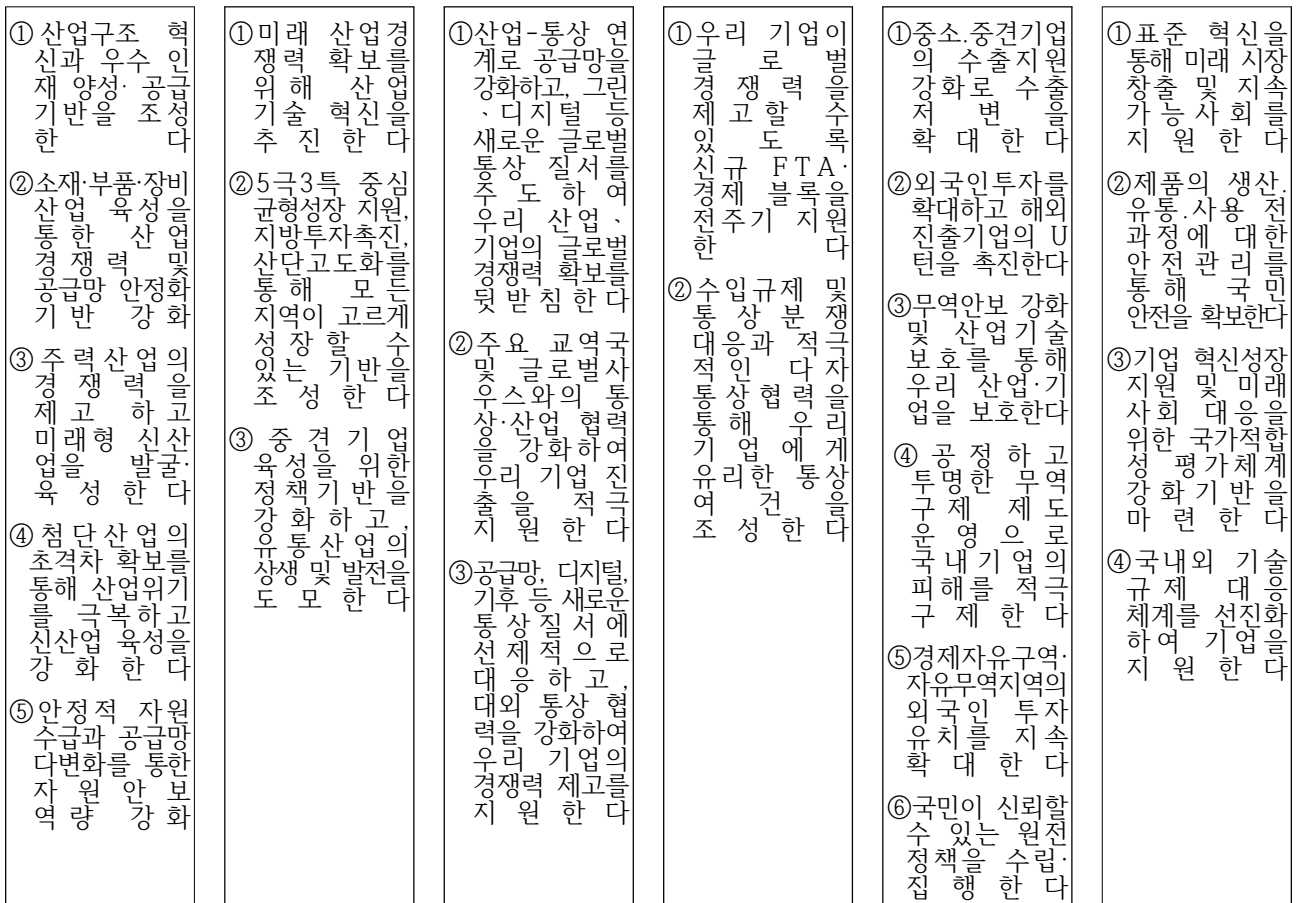
비전

수출 · 투자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
- 역대 최고 수출 달성,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확보,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지역 경제 및 투자 활성화 -

전 략 목 표



성 과 목 표



(3) 대표 성과지표

대표성과지표	현재	목표치	'3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5	'30			
주력산업 R&D 사업화 매출액(억원)	3,667	4,251	주력산업 R&D(기계장비, 자동차, 로봇 및 조선해양 등)의 '21~'24년 평균 매출액 3,560원을 '24년 목표치로 설정하고 매년 3%씩 상향된 수치를 목표치로 산출	Σ 2025년 지원한 R&D의 사업화 매출액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KEIT) 및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
GDP대비 무역규모 비중(%)	집계중	73.5	5년간 평균 실적(70.6%)을 감안 하여, 5% 상향된 73.5%를 목표로 설정	· 무역규모(수출액+ 수입액)/ 국내총생산 × 100	· 무역규모 : 무역협회 · 명목GDP : 한국은행
연간 수출액(억불)	집계중	7,218	' 25~' 26년 목표치는 美 관세 등 어려운 대외여건을 고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5.8.)」上 수출성장률 +0.2%(' 25), △ 0.5%(' 26) 반영, ' 27~' 30년 은 ' 10~' 26년 기준 회귀분석 결과로 산출 ($y_{\text{수출액}} = 112.9x^{\text{연도}} - 221,972$) * 목표치(억불) : (' 25) 6,850 → (' 26) 6,816 → (' 27) 6,879 → (' 28) 6,992 → (' 29) 7,105 → ('30) 7,218	연간 수출금액 합계	관세청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

산업구조 혁신, 첨단·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소부장 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기 본 방 향

◇ 산업구조 혁신과 우수 인재 양성·공급 기반 강화

- 첨단산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지원, 주력산업 대전환,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 추진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력 회복

◇ 공급망 위기 대응력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선도

- 기술개발, 다변화, 비축 등으로 핵심품목 공급안정성 강화, 소부장 특화단지에 R&D지원,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공급망 강화

◇ 주력산업 혁신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제조강국 실현

-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혁신전략을 수립·추진하고 R&D, 제도·인프라 확충 및 시설 투자 등 지원 강화

◇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으로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 확보

- 민간의 신속·과감한 투자와 경쟁국 수준의 범부처 지원으로 첨단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전략목표 I

산업구조 혁신, 첨단·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소부장 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통상·산업환경 급변, 중국 등의 저가공세로 인한 글로벌 공급과잉 등 수출여건 악화, 韓-中 산업기술 격차 지속 감소 등 주력산업 위기감 확산
 - 주요시장 중심으로 보호무역 조치의 연쇄적 확산 우려, 공급망 분절화 및 블록화 심화로 인한 시장 위축 전망
-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주력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을 지원하고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
 -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주력산업 대전환, 산업 AI 확산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력 회복
 - AI를 산업정책의 핵심축으로 산업AI 확산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
 -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의 인센티브 중심의 산업 그린 전환 추진을 통해 산업 성장지향형 그린전환 추진
 - 제2차 소부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R&D·인프라·생태계 등 전방위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
 - 통상 리스크 대응, 그린 철강 전환, 핵심·고부가 R&D 투자 등을 반영한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 기계, 자동차, 조선 등 우리 주력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형 신산업 발굴
 - 기술·산업간 융합을 통한 기계·로봇·방위산업의 구조 고도화 추진,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
 - 무탄소 선박, 스마트 선박 등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인프라 구축, 엔지니어링·디자인 역량 고도화를 통한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 투자환경조성 및 규제개선, 핵심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경쟁력 및 생태계 강화
 -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에 필수적인 전력·용수·인프라 구축 지원, '30년 소부장 자립화율 50% 등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 차세대배터리, LFP, 미드니켈 등 중저가 배터리 등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 바이오 파운드리시스템 지원을 통한 연구혁신 가속화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3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24	'30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100	102.3	101.8	101.9	102.8	106.3	최근 글로벌 무역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도 '21~'24년 연평균 증가율 0.69% 목표로 도전적으로 설정	비교시 생산가능량 / 기준시 생산가능량 × 100	통계청 발표 승인통계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25.1월) 기준, 지수기준연도 2020=100기준이며 23.3월 변경·공표(기준 2015=100)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24	'25	'26	'27
사업재편 승인·지원기업수(건)	93	57	90	95	100
석박사 배출 인원수(R&D)(명)	1,307	1,535	1,485	1,541	1,695
주력산업 R&D사업화 매출액(억원)		신규	3,667		
첨단산업 R&D사업 사업화 매출액(억원)	1,152	1,295	1,362	1,431	1,502
비축유 확보(백만B)	98.5	99.5	100.1	100.6	101.1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산업 AX 대전환 대응, 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제조업 혁신 및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요구 확산
 - 성공적인 산업 AX 대전환을 위해 관계부처(ex. 기재부, 과기부, 중기부) 간 협업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제조 현장의 생산성 강화 및 산업 생태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전문 인력양성으로 산업 혁신 기초 강화 필요

(4) 기타 : 해당 없음

(1) 주요 내용

-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 자국우선주의,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실물경제 성장 위협
 - ☞ ‘위기 대응’과 함께 ‘미래 성장’을 통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산업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 필요
 - 산업경쟁력강화회의, 산업투자전략회의 등을 통해 산업·금융·고용 등 경제·산업활력 회복을 위한 범정부 종합 지원책 적기 마련
 -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 구조 전환기 주력산업 대전환을 위해 ESG 확산, 사업재편 등을 지원
 - 실물경제 어려움 및 기업애로 해소 등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 산업부’로서 민간과의 접촉·연대·협력 강화
- 국내산업은 양적추격형 전략의 한계와 생산성 향상의 둔화로 인해 혁신·성장이 정체
 - ☞ AI 기술 활용을 통해 생산성 증대와 혁신 제품·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바 산업AI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한 전면적 지원 필요
 - 산업AI 활용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핵심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등 산업AI 확산 지원
 - 민관 거버넌스 구축,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산업AI 확산 기반 마련
-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인재 확보를 위해 주요국 정부 및 기업은 인재양성 투자 및 해외 인재유치 노력 강화중

☞ 첨단산업 주도권 쟁탈전 속에서 인재 양성과 더불어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하는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도 부각

○ 산업계 주도 인재양성, 인력생태계 조성 등 기존 교육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체계적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 주력·첨단 분야 중심의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및 재직자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및 적기 공급

☞ 우수인재 양성 → 첨단산업 발전 → 좋은 일자리 창출 → 우수인재 수요 증가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주요국들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공격적인 탄소중립 전략을 추진중인 바, 그린전환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

☞ ▲산업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에너지 확보에 역점을 둔 '성장지향형'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 협력 그린전환으로 대전환 필요

○ 현실적·실현가능한 '산업부문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과 연계하여, 산업 주도의 자발적 그린 전환 지원책 마련

○ 재생·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CFE) 사용인증 기준 마련 및 국제확산을 통해 안정적·비용효율적 에너지 확보 지원

○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시스템 운영 및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공급망(scope3) 탄소중립 역량 강화

○ 그린 전환 정책추진 전반에서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긴밀한 소통·협력채널(정부+기업+협단체+전문가 등) 운영

(2) 세부 추진계획

- 글로벌 경제 악화에 따른 우리 제조업의 동향 변화를 적시에 분석하고 민간과 소통을 통한 애로 해소와 산업 활력의 의견 수렴
 - (민간 소통) 기업, 경제단체, 전문집단 등 민간과의 정기 또는 수시로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 집행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의견을 수렴
 - (동향 분석) 글로벌 경제 악화로 인한 우리 산업의 동향 변화를 민·관 협력 강화, 산업통계 분석 시스템 확충을 통해 적시 분석
 - (활력제고) 주력산업의 활력 제고 및 유망 신산업 진출 가속화를 위해 기업의 선제적·자율적 사업재편을 신속히 지원
- 주력산업의 제조공정·서비스에 AI를 접목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데이터·법령 등 산업AI 확산을 위한 핵심 기반 조성
 - (AI 전환) 기술개발(R&D) 사업 추진, 산업AI 성공사례 발굴 등을 통해 기업들이 AI 전환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 (AI 확산) 데이터 전처리 방법론 개발, 산업디지털전환위를 산업 AI위로 개편, 법 개정* 등을 통해 산업AI 확산 위한 기반 공고화

* (現)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안) 마련
-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인력 수요·공급 미스매치 해소 및 우수한 혁신인재 적기 공급
 - (산업혁신인재양성) 첨단전략산업, 주력산업 분야의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프로젝트를 통한 석박사급 전문인재 양성

* '25년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 3개 신규지정, 58개 교육훈련과제 지원 등

- (창의융합형인재양성) AI 등 융복합 산업을 견인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공대학부생 대상 창의·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친환경 산업사회 구축 및 자원효율성 제고

- (청정생산) 에너지·자원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기업내, 기업간 에너지·자원 공유 활성화 방안 마련
- (자원효율성 제고) 산업계 자원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표설정 및 도시광산·재제조 산업 육성을 통한 핵심자원 수급관리 강화 추진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산업)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AI, 로봇 등 유망산업의 생태계도 여전히 취약

- 각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파격적으로 지원중이며, 캐즘 등으로 전기차·이차전지 사업여건 악화

* (美) CHIPS Act('22), IRA('22) 시행, TSMC(66억달러)·삼성전자(47억달러) 보조금 지급
(日) AI·반도체에 10조엔 지원('24.11) (中) 반도체펀드 조성 통해 3,440억위안 지원('24)

- 또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경쟁력의 핵심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지속

- 철강, 유화 등 공급과잉 업종의 리스크 확대

* '25년 글로벌 생산능력/수요 전망 : (철강) 26억톤/18억톤 (에틸렌) 2.4억톤/1.9억톤

- 글로벌 AI패권경쟁에 따른 대규모 AI투자 확대

* (美) 5,000억불 규모의 '스타케이트' 프로젝트 발표('25.1), (EU) 'AI기가팩토리' 프로젝트 포함 300조원 투자('25.2), (佛) 'AI데이터센터' 163조원 투자('25.1)

-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글로벌 탄소규제 적극 대응 긴요

* 무역의존도 : 韓 79%, 獨 84%, 英 62%, 伊 60%, 中 35%, 日 30%, 美 20%

- 다만, 제조업(多배출) 중심 산업구조에서 과도한 목표설정은 부담

* 제조업 비중(GDP比) : 韓 28%, 中 27%, 獨 22%, 日 21%, 伊 17%, 美 12%, 英 10%

□ (경제) 美 관세정책 추진, 국내정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수출·내수 모두 위축되며 '25년 우리 경제 성장률 둔화 전망

○ 올해 우리 경제는 작년보다 위축된 1% 중반 ~ 2% 성장 예상

* 韓 경제성장률 전망('24→'25, %): (한은) 2.0 → 1.5, (OECD) 2.3→ 1.5, (IMF) 2.2 → 2.0

- 다만, 2분기 이후 국내정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며 하반기
중 경제심리가 이전 수준 회복 예상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 1-2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및 공급망 안정화 기반 강화

(1) 주요 내용

□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지속 강화

-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도입으로 高 위험 경제 안보 품목 (공급망 안정 품목)의 자립화·다변화·비축 등 수급 안정 지원

* 범부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5~’27)」 (‘24.12, 제3차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예시) >

① 자립화	· 타국 대비 열위한 생산 경제성 보완(보조 등)으로 핵심 공급망 품목의 근본적 수급 역량 확충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 추진)
② 다변화	· 제3국과의 거래 관계 선제적 구축 지원(차액 보조 등)으로 공급망 위기시 수입선 즉시 대체 역량 확충 * 차량용 요소 : 중국 外 제3국 장기계약시 수입 단가차액 지원(‘25년, 30억원)
③ 비 축	· 공급망 위기 발생시 긴급 구매를 위한 긴급조달자금 도입*, 기업별 요구 규격 상이 등 공공비축에 한계가 있는 품목에 대해 민간 비축 지원 등 * 공급망 위기가 발생한 1등급 경제안보품목의 긴급 비축확대 지원(‘25년, 100억원)

- ‘공급망 핵심 품목’ 3R R&D 예타 추진(‘25.上)

↳ 대체(Replace), 저감(Reduce), 재활용(Recycle)

- 中 수출통제, 美 新행정부 출범 등 변화된 대외적 여건 등을 고려, 공급망안정품목 추가 지정·해제 등 정비

- 소부장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추진

* 자립화(투자 프로젝트, R&D), 다변화(대체 후보국), 비축량(공공 및 민간) 등 수집 정보 확대

□ 소부장·공급망 핵심 품목 기술개발 투자 확대

- 글로벌 공급망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신산업 공급망을 선점하기 위해 소부장 기술개발 투자 강화(‘24년 2.17조원→’25년 2.28조원)

- (소부장 기술혁신) 우주항공, 방산, 수소 등 첨단산업 유망분야 선점 및 주력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한 핵심기술 R&D 지원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 '24년 11,410억원 → '25년 11,780억원(+3.2%)

- (민간투자 연계) 민간(VC)과 정부의 협업으로, 차세대 공급망 선점을 위한 투자유망품목 발굴 및 R&D 지원

- (산업원천소재 자립화) 대외 高의존 원소재의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산업원천소재 R&D 예타 신청

* 핵심 원소재의 대체(Replace), 저감(Reduce), 재활용(Recycle) 기술 개발(7년간, 1조원 내외)

□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 (으뜸기업 육성) 체계적·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및 밀착지원을 통해 미래 新산업 대응역량을 갖춘 차세대 기술 특화기업 육성(30년까지 200개)
- 기선정 87여개 으뜸기업에 대해 으뜸기업 지원 협의회('22년 구축)를 통해 부처협업으로 전폭적 지원 추진하고, 연내 13개사 추가 선정
- (글로벌 M&A) 공급망 핵심기술 보유 글로벌 기업 등에 대한 M&A, 기술제휴 등 다양한 개방형 기술확보 전략 지원

□ 연대와 협력 생태계 구축 확산

- (협력모델) 10대 분야 · 200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모델 지속 발굴 및 확산
- * 선정된 협력모델에는 R&D, 세제, 금융, 규제특례 등 범정부 패키지 지원
- (공급망 완결형) 기존의 단일 품목별 지원에서 밸류체인 상 연계된 복수의 품목을 포괄해 동시에 지원하고, R&D 종료 2년전 양산 설비 확충을 위한 투자 계획도 수립하여 공급망 조기 자립화를 지원

- (인프라 확충) 자체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을 위해 시험·성능평가, 인력 파견, 장비 공동 활용 등을 지원
- (미래혁신기반) 미래 新산업 소부장 선점을 위해, 신성장·고위험 분야의 혁신·도전형 R&D 관련 혁신 기반 마련 추진
- 미래혁신기술* 3대 분야(AI, 첨단바이오, 미래소재) 신규 지원
 - * 3대 게임체인저 기술,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연계를 통한 미래기술 분야 도출
- (사업화 연계) R&D 완료 후 실장 테스트를 위한 수요 기업과 매칭 및 공공연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혁신으로 사업화 속도를 가속
- (양산 성능) 개발이 완료된 소부장 품목이 수요기업의 실제 양산 라인에서 성능 평가·검증되도록 지원 → 소부장 성능·수율 신속 확보
 - * 핵심전략기술 개편에 따라 기존 7대 분야 → 10대 분야(우주항공, 방산, 수소 추가)로 지원 확대
- (융합혁신지원단)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용화 단계의 각종 애로 기술에 대해 공공연구소가 기술애로분석 및 기술을 밀착 지원

□ 첨단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

-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에 R&D지원(차세대 기술 확보),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여 소부장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 * 2차 지정(23.7.) : 충북 오송(바이오), 광주(미래차), 대구(미래차), 부산(전력반도체), 경기 안성(반도체 장비)
- 첨단 소부장의 핵심기지로 거듭나기 위해 앵커 대기업의 역할을 강화*
 - * 예시) 공공 장비를 통해 소부장 품질 데이터를 도출 → 앵커기업의 실증 절차 단축

□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 (기술개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 등 다양한 수요산업 적용을 위한 공통 핵심뿌리기술 및 공정효율화기술 개발 추진

- (플랫폼 구축) 뿌리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제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공정·기술 고도화 등을 위한 실증환경 기반 마련
- (공정 지능화) 뿌리기업의 생산성, 에너지 효율, 안전성 향상을 위한 AI 기반 혁신공정 시스템(연속·연계 공정 지능화) 구축지원
- (특화단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공동활용시설 구축 및 입주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지역 연계 기능을 강화(협업형과제 확대)

□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 (철강·금속) 코로나19 이후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 마련, 친환경·고부가 전환 등 추진
 - (친환경 전환) 수소환원제철 실증을 위한 R&D 예타(또는 적정성 재검토) 추진, 철스크랩 활용 제고 방안 수립
- (희소금속)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소금속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확보 체계 구축 및 재활용·R&D 등을 통한 자급여력 확충
 - 국제협력·비축을 통한 수급 다변화 및 안전망 확보, 기술역량 제고를 통한 국내 산업생태계 기반구축과 핵심기업 육성
- (세라믹) 내수시장의 성숙기 진입으로 인한 수요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핵심소재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지원
 - (기술개발) 핵심소재 기술 국산화 지원, 소재·부품·장비 소단위 기술에 연계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등

□ 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방안(24.12월)의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글로벌 공급과잉 등에 따른 동 업계 위기 극복 지원 추진

- 요소, 무수불산 등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화학제품의 공급망 안정화 지원 추진
- 글로벌 친환경 규제가 화학산업(석유화학, 플라스틱 등)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 검토 추진
- 국제협약(몬트리올의정서, 화학무기협약)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간담회, 세미나, 교육·홍보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지원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 제2차 소부장 기본계획 수립('25.4Q)

- 과거 대응 중심의 단기적 정책에서 벗어나, 소부장 경쟁력 중장기 로드맵 수립 → R&D·인프라·생태계 등 전방위 역량 강화

□ 소부장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전문기업 육성

- 공급망 선점을 위한 시장 선도형 R&D 투자 확대
 - * 소재부품기술개발 : ('24) 11,410억원 → ('25) 11,780억원 → ('26) 12,910억원(정부안)
- '30년까지 으뜸기업* 200개사 선정 및 세계 1등 소부장 기업을 목표로 15개 「슈퍼 을(乙) 프로젝트**」 추진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보유한 성장 유망기업, '20~'25년 100개사 선정

** 세계 최초, 최고 기술 소부장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확보

- 시간·비용 소요가 크고 자체개발이 어려운 첨단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한 글로벌 핵심기술 M&A 지원* 확대

* ①출자형R&D: 고난도 첨단기술(AI·반도체·탄소중립 등)에 대한 출자형 R&D 도입,

②기술투자: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대규모투자를 유인하여 신속한 민간투자 촉진

□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 차액 지원

- KOTRA(수행기관)에서 분기별 생산실적에 따라 정산 후 예산 집행
* '25년 예산 146억원 ('25년 1차 추경으로 신규 도입)

□ 수요-공급기업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 생태계 강화

- 협력모델의 지원 내용 확대*하고 및 유형을 다변화**하여, 신규 협력모델을 30년까지 50개 발굴 및 지원

* 예시)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통한 구매 자금 융자 지원 / ** 지역참여형 모델 등

- 기업 투자 확대, 지방 정부 역할 강화 등을 포함한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화단지를 지역 협력 및 혁신 거점으로 육성

□ (철강)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 철강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 계획('25.3Q)

- (친환경 전환)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25.6 예타 완료, 8.1천억원) 본격 추진('26~'30) 및 그린철강 수요기반 마련
- (고부가 혁신) 미래 유망 산업과 연계한 특수탄소강 기술 확보

□ (희소금속) 희소금속 경쟁력 강화 방안 시책 발표('26)

- (공급망 안정화 품목 확대) 희소금속 등 비철금속 공급망 안정화 품목 확대 및 선도사업자 지정(선도사업자 '24년 10개 → '30년 100개)
- (희소금속 시책 TF 운영)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F 구성을 통해 전략희소금속 확정, 기술로드맵 구축 및 시책 마련(연2회 운영)

□ (세라믹) 세라믹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라믹산업 도전·혁신 R&D 로드맵' 수립·발표 계획('25.4Q)

- (R&D 전략) 차세대 선도, 공급망 안정화, 저탄소·친환경 기술 영역에서 '슈퍼스타' 프로젝트 발굴(~'30년)
- (기반구축) 세라믹 R&D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전·후방 수요-공급 협의체 구성·운영(연2회)

□ 석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편 추진

- (구조개편) 과잉설비 감축, 고부가 스페셜티로의 전환 등 유인
- (정부지원) 업계의 사업재편계획의 타당성 및 자구 노력에 따라 금융, 세제, R&D,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 검토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대외 환경 요인 >

-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부각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이슈로 부각
 - 시장 중심의 자율적 국제 분업이 정착된 자유무역시대와 달리, 경제 안보 시대에 각국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적 개입 확대
- 한편,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핵심광물·원소재를 수입에 고의존하는 구조적 공급망 취약성 보유
 - 특히 美 新 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통상 정책 변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

< 대내 환경 요인 >

- 안정적 공급망, 산업 혁신을 위한 소부장 산업 중요성 지속

- 수출의 경제성장기여도, 수출 중 소부장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상존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서 **공급망 안정화 지속 필요**

* 조선업 대비 소부장 산업 수출비중 55%, 수입비중 36%, 무역수지 1,098억불

- 中 수출절차 강화조치('21.10월) 이후 발생한 요소·요소수 수급 부족 사태로 소규모·범용 제품에 대한 범부처적인 공급망 점검 강화 등 노력 필요
-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 개정 시행 계기,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산업공급망 3050 전략」 발표 ('23.12.13)

(4) 기타 : 참고자료

- 소부장 특별회계 →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 및 일몰기한 5년 연장(~'24.12.31 → ~'29.12.31)

*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 개정('24.12)

-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안정사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체계 구축

(1) 주요 내용

□ 기술·산업간 융합을 통한 기계·로봇·방위산업의 구조 고도화 추진

- (기계·장비)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산업용기계의 친환경 동력원 적용 및 AI, 로봇기술 접목을 통한 스마트 기계·장비 개발 추진
- (AI 자율제조)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로봇·장비 등을 제조공정에 결합하는 첨단 제조기술인 AI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
- (로봇) 제조·서비스현장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로봇 도입 확대 및 로봇 확산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선 추진
- (방산) 민군 소통·협업 플랫폼 구축(첨단 민군협의회, '25.2월 출범), 범부처 민군기술협력사업 등을 통한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 자동차산업의 차세대 경쟁력 제고

-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 법·제도 기반 확충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핵심기술개발)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차의 부품 성능 고도화 및 가격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R&D 집중 지원
- (사업화 지원)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기술조사 및 시제품 제작, 부품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등 사업화 지원 강화
- (법·제도 확충) 미래차부품 산업 전환을 위한 미래차부품산업법 시행('24.7월), 친환경자동차법 운용 등 미래차 지원 및 이용자 편의 기반 마련

□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기반강화

- 무탄소 선박(암모니아·수소·전기), 스마트 선박 등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 본격화
- (인프라 구축) 연안선박 실증선 프로젝트, 중장기 병커링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등을 통한 한국형 실증 프로젝트 및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보
- (차세대 기술 개발) 무탄소 추진 선박 및 차세대 운반선 상용화, 선박 설계·생산 등 전 공정의 디지털화, 무인 자율운항 선박 기술 등 세계 최고 수준 기술 개발 추진

□ 엔지니어링·디자인 역량 고도화를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련 제·개정 필요성 및 우선순위를 검토 하여 조사연구, 심의 등 표준품셈 마련 절차에 따른 인가 추진
- (디자인) 4차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하는 디자인 혁신기업 육성, 디자인 디자인 프로세스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핵심기술 개발(K-디자인 선도 플래그쉽 프로젝트) 등 추진
- (지식서비스) 생산성·효율성 등 국내 제조업계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제조업-서비스업 융합 고도화를 위한 지식서비스 R&D 기술로드맵 수립

(2) 세부 추진계획

□ 기술·산업간 융합을 통한 기계·로봇·방위산업의 구조 고도화 추진

- (기계·장비) 제조AI·로봇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산업기계·제조

장비 및 고효율·친환경 에너지기계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등 산업계 현안 과제 대응 및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등 R&D 사업을 통해 관련 정책 및 업계 수요 등을 반영하여 기술개발 추진
- (로봇) 제조·서비스 현장의 AX전환 촉진을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 등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로봇 개발 및 보급 확산체계 마련
 - '로봇산업기술개발' 등의 R&D사업과 'K-휴머노이드 연합' 등의 민·관 협의체를 통한 정부정책 추진
- (제조AI) 인구·생산성 감소 등 제조위기 극복을 위해 제조 현장에 AI 도입, 업종별 AI 특화모델 개발 등 제조AX 추진
 - 'AI자율제조 SDM플랫폼 기술개발' 등과 같은 R&D사업과 'AI팩토리 얼라이언스' 등의 민·관 협의체를 통한 정책 추진
- (방산) 민군기술협력사업 투자규모 지속 확대('30년까지 3,000억원), 첨단민군협의체 운영으로 민·군겸용 R&D 발굴, 사업화 등 지원(계속)
 - * 민군기술협력사업 투자 현황(억원) : ('23년) 2,289 → ('24년) 857 → ('25년) 1,134
 - **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실용화율 '20~'24년 18.2% ⇨ '30년 25%까지 확대

□ 자동차산업의 차세대 경쟁력 제고

-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22.9.), 「초격차 로드맵」(24.5.),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24.9.)을 통한 미래차 전환 핵심기술개발 집중 지원
 - (전기·수소차)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①충전 편의·화재안전, ②주행성능 향상, ③가격경쟁력·공급망 확보를 위한 R&D 추진
 - * ① 충전속도 향상 및 고속무선충전, 화재대응 BMS 성능 고도화
 - ** ② 구동모터 출력 향상, 수소차 내구성 향상 등 추진
 - *** ③ 성능 개선을 비롯한 단가인상 및 모터소재 등 공급망 위협 품목 자립화

-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차를 수출 전략차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부품 성능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금융·인증 등 사업화 지원 강화

- 차량용 반도체 신뢰성 설계 및 인증 지원,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구축, 미래차 전환 기술조사 및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미래차 전환 설비 투자 및 M&A 자금 대출 시, 금리의 2%를 보전하는 금융 지원사업 추진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 충전방해행위 기준 개선을 통한 충전시설의 효율적 이용 도모 및 친환경차 이용자 충전편의 제고
- 민간부문 대규모 차량수요자 대상,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기반강화

○ 세계 선도기술 확보 로드맵, 신기술 확산을 위한 시험기반 구축

- 무탄소 선박기술 조기확보 연도별 계획 수립, 개발된 신기술의 선박적용에 앞서 육상시험을 통한 기술 안전성 및 성능평가 선행

○ 한국형 실증 프로젝트 시행 및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보

- 연안선박 실증선 프로젝트 및 이를 기반으로 한 Scale up 연구 진행, 암모니아 등 중장기 벙커링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 친환경·디지털·스마트 3대 분야별 세계 최고 수준 기술 개발 본격 추진

- (친환경선박) '40년 무탄소(암모니아·수소·전기) 추진 선박 및 차세대 운반선(액화수소.CO2 등) 상용화 및 세계 1위 기술력 확보
- (디지털 생산) 선박 설계·생산 등 전 공정의 디지털화로 '40년 50% 자동화(설계 40%, 생산 60%) 달성 및 무인 조선소 시범 운영
- (자율운항선박) '40년 선박에 탑승한 승선원의 업무를 시스템이 대신 할 수 있는 완전 무인 자율운항선박 기술 세계 선도

□ 엔지니어링·디자인 역량 고도화를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수요분석 및 심의위원회 구성

- 제·개정 항목 선정 및 조사연구, 표준품셈 심의·공표(연내)

○ (디자인) 디자인 유망기업 지원 등을 통한 디자인 혁신기업 육성, 디자인 프로세스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핵심기술 R&D 추진

-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전문디자이너 지원 및 국내외 전시회, 투자유치 등 연계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디자인-제조 특화 멀티모달 AI 에이전트 개발 등 '30년까지 디자인-제조 과정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AI 기반 8대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 ①소비자·트렌드분석, ②인공지능 디자인생성, ③인간공학설계, ④CMF 디자인 구현, ⑤에코디자인패키징, ⑥프로토타이핑, ⑦디자인-생산연동, ⑧디자인협업·워크플로우

○ (지식서비스) 첨단기술을 활용, '30년까지 6大 지식서비스업종*과 新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요소기술 개발 및 BM 발굴 추진

* 엔지니어링, 산업디지털, 시험인증, 제조생산물류, 산업훈련, 제조컨설팅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및 탄소중립 대응) 미·중 기술 패권경쟁,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 글로벌 新경제 질서로 대두
 - 국내·외 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핵심기술개발 및 산업계 수요 기반 탄소저감기술 상용화 등 추진
- (제조업 혁신 요구 증대) 글로벌 산업 트렌드의 전환(DX·AX)으로, AI·로봇·IoT 등의 기술이 적용된 제조공정 자율화 및 디지털·SW 플랫폼 구축 등 산업경쟁력 확보 필요
 -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산업 기반과 ICT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AI의 융합을 통한 제조AX 추진

(4) 기타 : 해당없음

(1) 주요 내용

□ 차세대 핵심 반도체 산업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투자환경조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지원, 규제 혁파 및 투자인센티브 확충
-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소부장 자립화율 제고, 경쟁력 있는 팹리스·소부장 기업 육성 등
- (초격차 기술) 첨단반도체 구현에 필요한 핵심 패키징 기술개발 지원 및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확대·공급

□ 안정적인 국내 배터리 생태계 조성

- (공급망 자립화) 민관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대내외 이슈를 점검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 제정으로 국내자원활용 기반마련
- (기술개발지원) 배터리시장 게임체인저인 차세대배터리, LFP, 미드 니켈 등 중저가 배터리, 소형 배터리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 민간의 국내투자를 전방위로 지원하고, 정책 금융 및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자금수요 대응

□ 바이오 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 (바이오 제조) 바이오 소재 개발을 자동화, 고속화, 표준화하는 AI·로봇 기반 혁신 연구 인프라(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 제조 혁신
- (신산업 육성) 첨단 바이오 초격차·신격차 융·복합기술 확보 및 상용화 추진,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 및 기반 마련

- (소부장 육성)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R&D·실증 지원
- (기반 조성)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 조성 및 바이오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 섬유·패션산업의 재도약 및 차세대 탄소·나노 산업 육성

- (섬유·패션) 디지털·친환경 전환, 산업용 섬유 분야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생태계로의 재도약을 추진
- (탄소·나노) 우주·항공, 배터리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 및 시장 외연 확장을 통한 수요·공급 간 네트워크 촉진

□ 미래 디스플레이·가전 산업의 경쟁력 강화

- (디스플레이) OLED 시장 확장을 위해 롤러블 등 다양한 폼팩터 구현 및 OLED 기술 초격차 확보, 차세대디스플레이(iLED) 핵심기술 확보
- (가전·XR)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전기업 지원사업 확대 및 XR산업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실증 인프라 지원

(2) 세부 추진계획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지원, 전고체 등 차세대배터리 개발 등 R&D 확대
- 반도체 생태계 펀드 확대, 첨단전략산업기금 활용 배터리 정책금융 강화 등 금융지원 기반 확충

□ 미래형 혁신기술 개발 및 첨단 생산기반 강화

- 탄소섬유·비건섬유 등 첨단·자원순환섬유, 3D 디스플레이 등 미래 신수요 대응 기술개발

- 국내 중소·중견 반도체·바이오기업의 제품화 등 지원을 위해 자금출자·장비보급 등으로 파운드리 구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 용인 실증팩(트리니티팩) 구축으로 반도체 대·중소기업의 협력강화

□ 기후대응 산업 성장동력화

-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등 순환경제에 기여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배터리 서비스산업(BaaS) 기반 마련

* 사용후배터리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 (외부요인) 트럼프 2.0으로 관세전쟁 발발 및 무역장벽 확대, 미·중 패권분쟁, 중국의 급격한 투자·생산 확대로 우리와의 경쟁심화
 - 美·EU·日 등 우리의 경쟁국은 첨단산업 주도권 회복을 위해 수출 규제, 대규모 보조금 등 가능한 수단 총동원
- (향후계획) 첨단산업기금조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조특법 개정을 통한 세제혜택 등 주도권 확보를 위한 총력대응
 - 첨단산업 투자 확대 및 규제개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韓-美 동맹강화와 다자협상으로 돌파구 마련

(4) 기타 : 주요 정부 정책 참고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 발표('24.1)

-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및 인센티브 확충 등 투자환경 지속 개선

- 소부장 경쟁력 강화, 팹리스 육성 등을 통한 반도체 밸류체인 완성
- AI, 화합물, 차세대 소자 등 반도체 초격차 기술개발
- 기업이 필요한 글로벌 수준의 인재 확보 총력

□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발표('24.6)

-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및 반도체 생태계 펀드 확대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3년 연장 및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반도체 R&D·인력양성 등 재정지원 확대 ('22~'24년 3조원 → '25~'27년 5조원)
- 국도 45호선 이설·확장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지속

□ 「사용후배터리 산업육성 방안」 발표('24.7)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 제정
-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 사용후 배터리 유통체계 마련

□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발표('25.1)

- 인프라 대전환
 - * ①한국형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②클러스터기반 일자리창출, ③현장중심 인재확보
- R&D 대전환
 - * ①바이오+X 기술융합, ②데이터기반 R&D 혁신, ③R&D 추진체계 혁신
- 산업 대전환
 - * ①기술사업화 지원, ②메가펀드 조성 등 기업성장촉진, ③바이오 신시장 창출 등

□ 「섬유판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24.8)

- 첨단 산업용 섬유 육성을 통한 구조 고도화
- 섬유�판션산업 밸류체인의 친환경 전환
- 섬유�판션산업의 AI·디지털 적용 확산
- 섬유�판션산업의 기반 강화

□ '25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25.1.8)

- 2025년 산업부 비전 :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
- ① 반도체 : 반도체특별법 제정 및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가속화
- ② 이차전지 : 사용후배터리법 제정 및 중저가 배터리 기술개발
- ③ 바이오 :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사업으로 연구제조 혁신기반마련

(1) 주요 내용

-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 핵심자원 통합 DB 구축,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 등 선제적·종합적인 자원안보위기 관리체계 마련
- (석유·가스 안정적 공급) 전략 비축유 확충, 수급 다변화, 도시가스 인프라 확대 등 안정적인 석유·가스 공급기반 유지
- (석탄산업 전환) 공공부문 석탄생산 종료 등 국내 석탄산업의 단계적 정리를 위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방안 도출
- (핵심광물 공급망 역내화)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진흥, 비축물량 상향, 양자·다자협력 확대 등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 (자원안보) 제1차 자원안보 진단·평가(‘25),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26), 핵심자원 통합DB 구축(‘27) 등 자원안보 관리체계 확립
- (석유) 제4차 비축계획 기간 종료에 따라 제5차 계획(‘26~‘30)을 ‘25년 내 발표하고 비축유 추가 확보(‘30 103.6백만B) 추진
- (가스) ‘27년 내 도시가스 주배관망 5,657km 설치를 완료하고 포트폴리오 기업 계약 확대 등을 통한 특정국·권역 의존도 관리
- (석탄) 탄광 퇴직근로자의 전업·재취직 교육, 폐광지역 경제 진흥 정책 등을 통해 국내 석탄산업 종료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 예방
-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TF, 포럼 등 개최, ‘27년 내 96일분 비축 달성 및 중동·호주 등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공급망 불안) 자원부국의 수출통제, 러-우 전쟁 장기화, 중동전쟁 발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심화
- (탄소중립과 산업전환) 에너지·자원 패러다임이 탄소중립으로 전환됨에 따라 석탄 등 고탄소배출 업종 정리 필요성 증가
 - 다만, 이는 해당 업종 종사자 대량실업, 지역경제 쇠퇴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원·안정 대책 병행 필요
- (에너지 가격과 사회적 갈등) 국제가격 변동이 전기·가스요금 변동으로 이어져 취약계층 부담과 요금정책 갈등 증폭

(4) 참고자료

- 에너지통계연·월보
- 에너지수급브리프, 에너지수급동향, 에너지수요전망
- 주간 국제유가 및 시장 동향
- 소재·부품 통계 종합정보망 : www.mctnet.org
- 산업통계분석시스템 : www.istans.or.kr
- 에너지정보통계시스템: www.kesis.net
- 한국석유공사: www.knoc.co.kr
- 한국가스공사: www.kogas.or.kr
- 한국에너지공단: www.energy.or.kr
- 한국광물자원공사: www.kores.co.kr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www.kigam.re.kr
- 해외자원개발협회: www.emrd.or.kr
- 한국가스안전공사: www.kgs.or.kr

- 한국전기안전공사: www.kesco.or.kr
- 한국에너지재단: www.koref.or.kr
- 에너지바우처 전용포탈: www.energyv.or.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www.ketep.re.kr

1. 사업 개요

- (목적) 자원안보 위기로인 및 공급망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수급정책 설계,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 위기 예방·대비체계 마련
- (추진근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25.2.7 시행 예정)
 - * 근거조항 : 제8조(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제10조(국가자원안보의 진단·평가), 제11조(공급망 점검·분석)
- (내용) 핵심자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 주기적인 공급망 점검·분석, 자원안보 진단·평가의 **3단계로 구성**
 - (정보관리) 핵심자원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공급망 점검·분석) 공급기관별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 결과를 취합하여 국가 차원의 취약점 도출 및 공급기관에 시정·보완 요청
 - (자원안보 진단·평가) 공급망 점검·분석 결과, 향후 수급 전망 등을 종합하여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 실시 및 자원안보 정책방향 결정

< 국가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 구축·운영(안) >



2. 내역사업별 설명

가.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목적) 인공지능 기반(AI-based)의 국가 자원안보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핵심자원 수급 동향 등 자원안보 관련 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 (주요기능) ①빅데이터 기반 조기경보, ②공급망 점검·분석 및 자원안보 진단·평가 빅데이터 제공, ③사용자 맞춤형 자료·분석 리포트 제공
 - ① 국내외 핵심자원 수급 동향, 자원안보 정책, 공급망 점검·분석 결과 등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핵심자원별 이상징후 사전 포착·알림
 - ② 핵심자원별 국제 가격 동향, 국내외 수급현황, 정책동향 등 공급망 점검·분석, 자원안보 진단·평가의 기초자료 제공
 - ③ 사용자 맞춤형 데이터 추출·분석, 시각화된 분석 리포트 등 제공
- (향후계획) '26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이후 '27년 시스템 구축·운영 계획

<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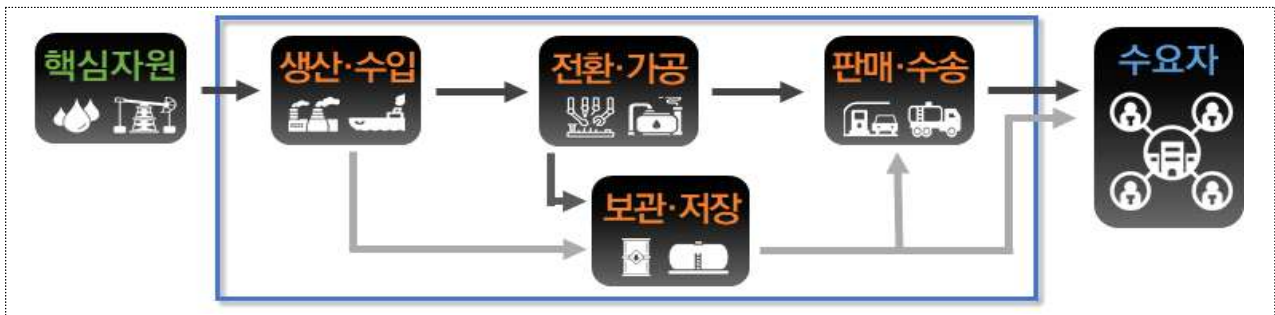


나. 공급망 점검·분석

□ (목적) 핵심자원 공급기관별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필요시 공급기관에 시정·보완 요청 및 이행상황 점검

- 관리하는 핵심자원의 종류(석유·가스·광물 등), 공급 유형(생산·수입·전환 등) 등을 고려하여 점검이 필요한 공급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 핵심자원의 공급망 흐름도 >



□ (점검절차) ①공급기관별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 실시 → ②공급기관별 점검·분석 결과 종합·평가 → ③자원안보협의회 상정·심의 → ④공급기관에 시정·보완 요청 및 이행상황 점검

①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요 공급기관에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 실시 및 결과보고 요청

* (점검사항 예시) 비축물량, 재고, 수급 현황·전망, 공급원, 공급 위험요인 등

② 개별 공급기관의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 전체 차원의 공급망 취약점 분석 결과 도출

③ 종합적인 공급망 취약점 분석 결과를 자원안보협의회* 상정·심의 및 필요시 자원안보위기 정보 발령

* 자원안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

- (위원장) 산업부 장관, (위원)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필요시) 민간 자문단 운영

④ 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기관에 시정·보완 요청, 지원 및 이행상황 점검

- (향후계획) 공급망 점검·분석지표 개발('25년), 점검·분석 실시('26년~)
 - 업계 현실에 부합하는 점검·분석 지표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 등 핵심자원별 공급기관 협의체와 소통 지속
 - 공급망 점검·분석 지표를 고도화·최신화하기 위한 공급기관 소통창구 상설화

다. 국가 자원안보 진단·평가

- (목적) 공급망 점검·분석 결과, 국내외 정책 동향 등을 종합한 국가 위기대응역량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자원안보 정책 수립에 활용

- (절차) ❶자료 수집 → ❷자원안보 진단·평가 → ❸자원안보협의회 상정·심의 → ❹자원안보기본계획 등 반영

❶ 그간 축적된 공급망 점검·분석 결과, 기술발전에 따른 핵심자원의 중장기 수급 전망 등 정량·정성적 정보 취합·가공

❷ 취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 자원안보 진단·평가 실시

* 위험성(risk)과 그에 대한 대응력(resilience)을 축으로 하여 종합적인 위기대응역량 평가

❸ 자원안보 진단·평가 결과는 자원안보협의회에 상정·심의

❹ 또한, 그 결과를 자원안보기본계획(매 5년 수립)에 반영하고 향후 자원안보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

- (향후계획) '25년 내 제1차 자원안보 진단·평가 완료 → 그 결과를 기반으로 '26년 제1차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

- 핵심자원별 수급 특성, 위기유형 등을 고려하여 진단지표 등 평가방법 개발

* 정성평가 수행, 취약점 진단 등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위원회 구성

□ (목적) 자원안보위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위기대응체계 구축

□ (주요 내용) ①핵심자원별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관리, ②정례적 위기 대응 훈련, ③위기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긴급대응조치 등 발령

① (위기대응 매뉴얼) 국가 차원에서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자원별로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관리하며,

- 핵심자원별 주요 공급기관을 핵심공급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의무 부여 및 연 1회 이상 매뉴얼 점검

② (위기대응 훈련) 위기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국가·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개선점 발굴

* 위기대응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기관 위기대응 매뉴얼 보완 예정

③ (긴급대응조치 등) 자원안보위기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정보 발령,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 설립 및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 실시

- 위기의 지속기간, 심각성 등에 따른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정보 체계 운용 검토
-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대응 등이 필요한 경우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 구성·운영
- 긴급대응조치계획 수립, 위기대책본부 심의 등을 거쳐 해외개발 핵심자원 반입, 비축자원 방출·사용 명령 등 긴급대응조치 발령

<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 종류 >

· 해외개발 핵심자원 반입	· 비축자원 방출·사용
· 비상동원광산 채굴	· 핵심자원 판매가격 최고액 설정
· 핵심자원 할당, 배급, 양도·양수 제한, 유통경로 조정 등 수급안정조치	

1. 포럼 개요

- (명칭)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
- (회장)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박현철 회장 (SJ코퍼레이션 대표)
- (사무국) 한국광해광업공단(재자원화사업팀)
- (회원사) 정부·협회·기관·기업 등 81개社(‘24.10월 기준)
- (목표) 민·관·공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 제안, 정보 교류 등

2. 조직 : 의사결정기구(총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단 및 사무국으로 구성

- (회장) 총회 및 운영위원회 주재 (임기 : 2년)
- (총회) 최고의결기구로서 포럼의 체계와 중요 운영사항 등 결정
- (운영위원회) 포럼 목표·운영방향 결정, 포럼의제 발굴 등
- (자문위원단) 포럼 운영 및 추진사업 등에 대한 자문 수행
- (사무국) 광해광업공단이 포럼 간사 및 사무국 기능 수행

3. 주요 연혁

□ 국내 재자원화산업 발전을 위한 최초의 민·관·공 소통·협력 기구로서 ‘22.11월, 정부·기업·전문기관 등 총 52개 회원사로 출범해 총 2차례 개최

- ‘22.11월, 창립총회 개최

- ▶ (일시/장소) ‘22.11.18.(금), 13:30~17:00 / 여의도 글래드호텔
- ▶ (주관) KOMIR,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 ▶ (참석자) 차관님, 국회의원 등 52개 포럼 회원사 약 130여 명 참석
 - * (축사) 차관님,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현장), 송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현장) 등
- ▶ (내용) KOMIR 등 7개 기관 간 K-재자원화얼라이언스 협약 체결, 창립총회, 세미나 등
 - * (K-재자원화얼라이언스)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원리사이클링학회(이상 7개 기관)

- ‘23.11월, 제1회 정기총회 개최 * 회원사 규모 확대(52개 → 71개)

- ▶ (일시/장소) ‘23.11.28.(금), 13:00~17:00 / 여의도 글래드호텔
- ▶ (주관) KOMIR,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한국자원리사이클링학회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 ▶ (참석자) 차관님, K-재자원화얼라이언스, 포럼 회원사 등 약 130여 명 참석
 - * (축사) 차관님,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축전), 송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상),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영상),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상)
- ▶ (내용) 핵심광물재자원화산업 발전 유공 포상식, 정기총회, 세미나 등

기 본 방 향

◇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기술 혁신 추진

- 압도적 기술력 확보 및 신산업 창출 지원
- 도전적·혁신적 R&D 투자 확대 및 R&D 분야 국제협력 강화
- 파급력 있는 성과 확산을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 5극3특 중심의 균형성장 지원, 지방투자촉진, 산단 고도화를 통해 모든 지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5극3특 균형성장 지원체계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투자 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위기 적기 대응
- 노후산단의 경쟁력 강화 및 RE100산단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육성 및 유통업계 발전 지원

- 中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및 규제 해소로 기업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 R&D, 인력, 금융, 수출 등 지원을 통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 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한 전략수립·제도운영, 유통 AI 확산, 유통업계 글로벌시장 진출, 내수활성화 추진

(1) 주요내용

□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기술 혁신 추진

- 초격차 기술확보 및 신산업 창출 지원을 통해 산업기술 R&D의 전략성 강화와 파급력 있는 성과창출 견인
-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도전혁신적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글로벌 기술역량 강화를 지원
- R&D 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제도개선 및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기술금융 확대 및 기술나눔 활성화 등을 지원

□ 5극3특 중심 균형성장 지원, 지방투자촉진, 산단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모든 지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5극3특 균형성장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혁신기반조성, 지방시대 엑스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투자 지원 등으로 지방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주된산업 위기에 대해 적기 대응
- 제조지능화^{AX}, 탄소중립^{GX}, 청년친화^{YX} 중심 K-산업단지 대전환 추진으로 지역 경제거점인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

* AX 실증산단(10개소), 탄소중립대표산단(1개소), 문화선도산단(3개소) 신규 지정

- 산업·지역 융합 핵심정책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담은 특별법 제정 추진

□ 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성장지향형으로 개편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성장 역량 제고

○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립, 「중견기업법」 개정 등 중견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기반 마련

* 후보-초보-도약-선도중견 단계별 지원

○ 서비스 중견기업 육성 체계 마련 및 AI·그린전환 등 환경변화 대응

- 중견기업정책위원회 산하 ‘서비스산업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여 서비스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부처간 협업의 컨트롤 타워로 활용
- AI, 그린전환,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중견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환경변화 대응 지원센터 신설 추진

○ 中堅 혁신펀드 활성화, 中堅 채용박람회 개최, 내수 中堅 수출 기업화 등 금융·인력·수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시책 확충

○ 中堅-산·학·연간 기술협력 지원 등 R&D 역량 강화, 우수 역량 보유 중견기업 집중 육성 등 추진

○ 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한 전략수립 등을 추진*하는 한편 유통 AI 보급,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방 중심의 내수활성화 추진

* 제6차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25~’30)

- AI 등 디지털기술 적용을 통한 유통산업 디지털 역량 강화
- 10주년을 맞은 「국가대표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역대 최대 규모, 역대 최대폭 할인으로 개최 추진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3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24	'30			
연구개발 사업화율(%)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51.73	연구개발 성과 중 산업기술 혁신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사업화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최근 5년 평균 경제성장률을 상향하는 목표치 설정	사업화 목적 과제 중 경제적 성과 (매출, 비용절감, 기술이전)를 창출한 과제 비율	전문기관(KIAT·K EIT·KETEP) 성과활용 현황보고서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24	'25	'26	'27
연구개발 사업화율(%)	신규	신규	50.70	50.91	51.11
지역 일자리 창출 개수(명)	4,217	3,677	3,721	4,177	4,06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유통산업 혁신 정책 수립 건수 및 법 제도개선 건수 등	4	4	2	2	2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구분	주요내용
정책환경	- 정부 전반에서 성과 중심의 R&D 정책 기조 강화 - 사업화 성과 확대 요구에 따라 후속지원, 연계지원 강화 필요
산업환경	- AI·그린 전환 가속화로 신산업 기술 수요 급증 - 기술의 융복합화로 인해 기존의 단일 기술 중심 접근의 한계 도출
경제환경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 통상환경 변화
사회·기술환경	성과의 공공적 환류 요구 증가 (지역, 국민체감)

□ 갈등요인

갈등요인	설명	주요 이해관계자
① 성과 책임 소재 불명확	◦ 기술개발은 성공했으나 사업화 지연/포기 시 주체 간 책임전가 가능성	정부, 주관기관, 민간기업
② 평가의 일관성 문제	◦ 사업화의 정의 및 측정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	평가기관, 연구기관
③ 수치 중심의 과도한 압박	◦ 정량지표 위주 성과관리로 인해 단기적 성과에 치우칠 우려	수행기관, 연구자
④ 기술가치 산정 갈등	◦ 사업화 가능성 있는 기술의 가치평가 어려움	기술이전기관, 수요기업
⑤ 지원 불균형 문제	◦ 수도권 대기업에 유리한 사업화 인프라 집중	지역기업, 중소기업

□ 갈등관리계획

관리전략	세부내용
1. 정의 및 지표 기준 표준화	◦ “사업화”의 범위 및 성공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정의 ◦ 통일된 성과지표 매뉴얼 배포 및 교육 실시
2. 단계별 성과 책임 연계	◦ 기술개발, 검증, 사업화 각 단계별 주체 구분 ◦ 공동책임제 또는 성과 연계형 체계 도입
3.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 민간·공공 합동 협의체 구성 ◦ 현장 의견 반영 및 중간 피드백 수렴 절차 마련
4. 성과 외 다양한 정성지표 병행	◦ 사업화율 외에 기술 파급력, 사회적 파급효과 등 정성지표도 병행 평가
5. 지역 형평성 보완조치	◦ 지역기반 사업화 거점(테크노파크 등) 연계 강화 ◦ 비수도권 가점제 또는 후속 연계 지원 프로그램 마련
6. 갈등 발생 시 조정 프로세스 운영	◦ 사전 분쟁조정 기준 수립 ◦ 외부 전문가 중심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매뉴얼 마련

□ 수도권 경제력·인구가 비수도권을 역전하고, 경제성장 기반 및 잠재력 모두 지방이 불리한 구조

- 생산('15) → 일자리('17) → 인구('19) 순서로 수도권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국토 11.8%에 불과한 수도권으로 경제력 집중 가속화
- '03년 참여정부 이래 20여년간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지역 산업기반 확충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1극 중심 성장전략 한계

- AI 기술, ESG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견기업 현장 방문, 간담회 개최 등 현장소통 추진
 - 권역별 기업 현장 방문 및 기업애로 청취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반영 추진
- 새정부 기조를 반영해 대·중소유통 상생 및 지역상권 회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제도 운영
 -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근로자 건강권, 사회적합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현안 유지(지역자율) 또는 규제완화 검토
 - * ①온라인 중심 유통환경 변화, ②1인 + 맞벌이 가구 증가로 주말 장보기 수요 증가, ③주변상권 활성화 효과(평일 전환 후 지역상권 매출이 증가) 등 종합 고려
 - 대형마트 출점규제를 지역 유통환경에 기반하여 상권영향평가서 공정성,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력이 확보되도록 이해관계자와 소통

(4) 기타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 sandbox.kiat.or.kr
-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1) 주요 내용

- 압도적 기술력 확보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 실질적 성과 창출 위해 초격차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고, 산업기술개발 기반 구축 지원
 - R&D 과정에 AI 활용을 확대하여 R&D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 규제샌드박스제도 운영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확산을 촉진
-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진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R&D의 전략성 강화
 - 도전적 R&D 확대를 통해 미래 新전략산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그린전환(GX)을 통한 기존 주력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 우수 기업연구소 육성과 글로벌 기술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GVC 진출을 지원
- 기술과 시장을 연결하는 기술이전·사업화를 활성화하여 성과를 창출
 - 기술사업화를 위한 ‘생태계-지원체계-지원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책발굴, 제도개선,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
 - 기술기업의 ‘진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자(Tech-Push) 중심의 기술이전에서 시장(Market-Pull) 중심의 사업화로 전환

(2) 세부 추진계획

□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초격차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

- * 例)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 * 투자 프로젝트의 목표(신규 예산 70% 이상) 및 성과 점검, 투자 목표내용 등 조정 추진

○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시험 및 평가 장비 등 연구개발 인프라를 조성*하고, 연구기반 활용도 제고와 사용 편의성 강화**

- *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26~'28) 수립('25) 및 이행
- ** 불용정보, 처분정보, 소재지 변경 등 수시로 변경되는 장비 정보의 현행화

○ 산업현장의 연구 설계·실험 등에 AI 도입 확대

- * 연구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R&D 과제 지원 (매년 100개 과제 목표)

○ 유망산업 정보제공, R&D 세액공제 지원*, 여성의 산업현장 진출 촉진, 혁신문화 확산 등 산업기술 혁신환경 조성

-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투자 기업대상 R&D 세액공제여부 기술 심의

○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등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및 규제혁신** 촉진

- * 특례기간 연장, 규제개선 의무 강화 등 추진
- * 현장정책 수요를 고려해 특례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운영

□ 압도적 기술력 확보와 미래 新시장 창출을 목표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는 도전혁신적 R&D 확대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테마 계속 지원('25년 16개 테마*, 481억원) 및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본격 착수('25년 50억원)

- * 면역거부반응이 없는 인공장기 개발, 뇌파분석을 통한 무선통신 의사소통, 노화역전 등 주요 산업의 판도를 바꿀 테마를 지원 중

□ 우수기술을 보유한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글로벌 기술 협력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 기술혁신 역량 제고

- 우리 기업의 차세대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연구기관에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구축(~'27년, 12개)

* 협력수요 발굴·분석, 최적 파트너 연계·매칭, 과제 공동기획·수행, 韓연구자 지원 등 수행

** ('24) 美예일, 존스홉킨스, 퍼듀, 조지아텍, MIT, 獨프라운호퍼 → ('25년) 加토론토대, 英UCL 선정

□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 추진

- R&D·기술을 실증-규제해소-산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기업의 '진짜 성장'을 밀착 지원
- VC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연계형 R&D 매칭사업*을 확대
 - *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R&D, CVC투자연계 대중견중소 협력, 민관협력P전략지원 등

□ 기업 스케일업을 밀착 지원하는 기술금융 확대

- (정부투자)성장단계별 모태펀드, R&D 금고은행 지원 포트폴리오를 체계화 하고 (민간투자)검증된 기업의 주식거래시장 개설, 엔젤투자 등 성장자금 지원
 - * 정책자금은 R&D 단계, 민간자금은 사업화 검증 이후인 성장·성숙 단계에 집중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의를 통한 갈등 해결

-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 및 규제법령 정비를 위해 규제부처 협조 및 이해관계자 갈등 해결이 필수
 - 신규 신청과제에 대해 관계부처/기관·신청기업·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 및 안건별 회의를 개최하여 특례 부여 관련 의견 조율
 - 기존 특례 부여 과제에 대하여는 실증 데이터 제공 및 법령정비 TF 등을 통해 규제부처의 규제법령 정비 지원 및 협조 유도

(4) 기타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 sandbox.kiat.or.kr

성과목표Ⅱ-2

5극3특 중심 균형성장 지원, 지방투자촉진, 산단고도화를
통해 모든 지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1) 주요 내용

□ 5극3특 균형성장 지원체계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후보산업군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유관기관·지자체 협의

- 초광역권 연계 기술개발사업* 신규 추진 등 초광역권산업 육성

* (예) A광역권 내 대학 - B광역권 내 기업간 공동 R&D 추진 등

- 지역산업활력펀드 확대조성('24. 260→'25. 1,080억원), 지자체·부처간 협업을 통한 지역R&D 프로젝트* 추진 등 지역 혁신역량 결집

* 지역 앵커기업(산업부)-지방대학(교육부)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종합적 혁신역량 제고

□ 지방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 기회발전특구 투자이행 점검·추가지정 및 인센티브* 강화

* 외투기업 시도별 면적상한 미적용, 기회발전특구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신설('25.上) 등

- 투자이행 점검 및 애로 해소 등 사후관리 강화(권역별 간담회 개최 등)

- 지방투자 시책의 체계적 추진,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 제정 추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추진

* 건별 지원한도 확대(100 → 150억원), 기존사업장 유지의무 완화 등

- 산업위기대응지역 신청·지정 요건 현실화 등 제도정비*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지원 통한 지역경제 위기 대응

*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5.上)

□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및 RE100산단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제조지능화^{AX}, 탄소중립^{GX}, 청년친화^{YX} 중심 K-산업단지 대전환 추진으로 지역 경제거점인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

- 전략업종별 AX 실증 선도산단* 조성, 주요 거점산단에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 입주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지원

* '25년 10개소를 시작으로 '30년까지 25개소(누적) 선정·지원 추진

- 산단 내 재생에너지, ESS, 마이크로그리드 등 에너지전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입주기업의 RE100 대응역량 강화 지원

* 전력다소비 산단을 대상으로 '30년까지 탄소중립 대표산단 20개소 구축('25년 1개소)

- 문화선도산단* 선정, 산단 내 문화·편의시설 확충,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 조성

* 문화브랜딩, 랜드마크 조성, 문화 프로그램 등 지원('25년 3개소 → '30년 20개소, 누적)

○ (RE100 산단)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산단을 조성하고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계획' 마련

- 재생에너지 공급, 산단 개발 절차 간소화, 기업유치 인센티브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담은 특별법* 제정 추진

* ❶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❷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정주여건 조성, ❸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재생e 공급제도 등

(2) 세부 추진계획

□ 5극3특 균형성장 지원체계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5극3특 지원 강화)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후보산업군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핵심 기술개발 과제* 지원

*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 사업('25~'27년, 국비 232억원)

- (지역 성장거점 고도화) 기존 거점과 신규 거점(기회발전특구 등)간 연계방안을 마련,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 및 2기 사업 지속
 - (지역산업활력펀드* 확대) 지역 유망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성장·고용 촉진
- * 총 1,080억원 규모의 지역펀드 결성 및 투자('25.1월~'28.12월)
- (지역 인력 양성)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지원 및 지역 앵커기업(산업부)-지방대학 (교육부) 간 협업을 통한 지역 R&D
 - (법·제도 지원)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에 따른 '25년 부문별 시행계획 마련,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 지방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창출

-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지역내 성장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규제·R&D·인력 등 인센티브 확대 추진
- (법안 제정) 지방투자 시책 체계적 추진,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 제정 추진
- (지방투자 유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건별 지원한도 상향, 신청 제한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 촉진

* (지원한도) 건별 지원한도를 (現) 100억內 → (改) 150억內로 상향
(신청제한완화) 선행투자(투자금액 또는 고용인원) 달성률 70% 미만(3년이후) → 자연재해, 대외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1년이후)

- (산업위기지역 지정) 산업위기대응지역 신청·지정 요건 현실화 등 제도정비*, 선제대응지역 지정·지원 통한 지역경제 위기 대응

*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5.上)

□ 노후산단의 경쟁력 강화 및 RE100산단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제조지능화^{AX})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
 - AX 실증 선도산단* 10개소 선정하고, 산단환경개선펀드 등 활용, 주요 거점산단에 AI데이터센터 유치

* '25년 10개소를 시작으로 '30년까지 25개소(누적) 선정·지원 추진

- (탄소중립^{GX}) 에너지多소비, 탄소高배출 산단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
 - 탄소중립대표산단을 선정하고, 산단 내 재생에너지 연계 ESS, 마이크로그리드, 자원순환 등 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운영

- (청년친화^{YX}) 산업단지·문화 융합으로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 조성
 - 문화선도산단 3개소 신규 지정('25년 3개소 → '27년 10개소, 누적), 산단환경개선 출연사업 확대('24년 898 → '25년 998억원) 등

- (산단 안전) 산단 내 디지털 안전 인프라 및 안전문화 확산

- (RE100 산단) 재생e 풍부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계획' 마련 및 특별법* 제정 추진

* ❶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❷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정주여건 조성, ❸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재생e 공급제도 등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수도권 경제력·인구가 비수도권을 역전하고, 경제성장 기반 및 잠재력 모두 지방이 불리한 구조

- 생산('15) → 일자리('17) → 인구('19) 순서로 수도권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국토 11.8%에 불과한 수도권으로 경제력 집중 가속화

- '03년 참여정부 이래 20여년간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지역의 산업기반 확충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1극 중심 성장전략 한계

* R&D('18~'24)·기반구축('20~'23) 사업으로 총 1조 4,038억원 매출 발생

□ 산업단지 노후화* 등으로 인한 활력 저하

*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 495개('24년) → '25년 526개 이상 전망

- 산단 입주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인공지능·저탄소 전환 역량이 부족하고, 산업재해·안전사고* 등도 지속 발생중

* 유형별 사고건수 ('20: 26개 → '24: 23개), 인명피해 ('20: 31명 → '24: 23명)

- 또한, 문화·편의시설에 대한 고려없이 공장 위주로 구성된 산단 환경은 청년층의 취업 기피요소로 작용해 구인난이 심화

- 탄소중립, ESG 등으로 RE100이 글로벌 공급망 필수조건이 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대응력 부족

- 재생에너지는 서남해권 등 지방에 풍부하나, RE100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큰 비효율(재생e 출력제어, 송전망 확충) 발생

(4) 기타 : 해당없음

(1) 주요내용

□ 중견기업 성장지향형 정책 기반 구축을 통한 중견기업 육성 및 유통산업 상생 협력을 통한 유통업계 발전 지원

○ (중견기업 성장) 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성장지향형으로 개편하고, 금융·인력·수출 등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

- (법·제도)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5~’29) 수립 및 「중견기업법」 개정 등 中堅 성장 기반 마련

- (금융) 중견기업 혁신펀드 활성화*, 민관합동 中堅 전용 융자 지원 프로그램 등 직간접 금융 지원 확대

* '27년까지 중견기업 혁신펀드 3천억원 규모 조성 및 투자 확대

- (인력)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중견기업 석박사 연구 인력 채용 지원 등 중견기업 맞춤형 인력 확보 지원

* 중견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25년 6억), 디지털 솔루션 보급지원(‘25년 15.3억) 등

- (정책 인프라)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구축, 중견기업 홍보 방송 등 중견기업 지원 기반 확충 및 인식 개선 추진

- (R&D) 월드클래스+ 지원* 및 ‘중견·중소상생형혁신’, ‘중견-지역 혁신얼라이언스’ 등 중견기업 맞춤형 R&D** 지원 강화

* (월드클래스+) ‘25년 유망 중견기업 41개社 대상 R&D 지원(기업당 40억원)

** (상생) ‘25년 155.87억원, (얼라이언스) ‘25년 57억원, (공공연) ‘25년 20억원

○ (인력·수출) 중견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과정 지원, 해외 진출 및 디지털전환 등 중견기업 역량 강화 도모

* (아카데미) 6억원, (수출역량) 250억원, (세계일류) 7억원, (디지털솔루션 보급) 15억원 등

- (유통산업 발전) 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한 전략수립·제도운영 및 유통 AI 확산, 유통업계 글로벌시장 진출, 내수활성화 추진
- (발전전략 수립) 제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25~'29) 수립을 통해 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유통산업의 성장을 지원 예정
 - * '23→'24년 온라인 유통성장(연 15%) 및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의 성장 부진(연 2%)
- (유통규제 합리화) 새정부의 기조를 반영하여 대·중소유통 상생 및 지역상권 회복에 부합하는 의무 휴업체, 출점규제 등 운영
- (AI·디지털 확산) 유통·AI 얼라이언스를 통해 유통단계별 AI 활용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고, 디지털유통물류 표준모델 확산*
 - * 디지털유통물류 표준모델 확산을 위해 '25년 24.0억원, '26년 16.8억원 정부예산 투입
- (해외진출 지원) 한류 선호도가 높은 글로벌 사우스 시장 선점과 선진국 유통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통기업의 글로벌화* 추진
 - * (사업명)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 (기간) '26~'28년, (예산) 연 500억원(국비)
 - (주요지원 내용)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마케팅, 컨설팅 등) + 역직구 활성화(수출·통관 등)
- (코리아세일페스타) 10주년 계기 역대 최대규모·할인을 추진하고 지방 개막, 지역특산물전을 통해 지방중심 소비행사로 업그레이드

(2) 세부 추진계획

□ 中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및 규제 해소로 기업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 (중견기업 성장) 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성장지향형으로 개편하고, 금융·인력·수출 등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
- (법·제도)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5~'29) 수립 및 「중견기업법」 개정 등 中堅 성장 기반 마련

* 중견기업 성장단계별 구분 : (후보中堅) 中企 졸업유예기업, 성장형 기업,
(초보中堅) 매출 3천억원 ↓, (도약中堅) 매출 3천억~1조원, (선도中堅) 매출 1조원 ↑

- (금융) 제1~3차 「중견기업 혁신펀드*」 투자 본격화* 동 「라이징 리더스 300**」 융자 지원 프로그램 지속 지원 등 정책금융지원 확대 추진

* 1차 1,050억원, 2차 560억원, 3차 420억원 등 총 2,030억원 규모

** '25년 우수 중견기업 대상 8천억원 이상 규모 융자 지원(최대 △1.0%p 우대)

- (인력) 중견기업-우수인력 일자리 매칭 지원을 위해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상·하반기 개최(上-서울, 下-부산)

* 상하반기 총 150개社 이상 참여, 구직자 1,600명 이상 채용연계 목표

- (정책 인프라) 중견기업 해외진출지원, 통계시스템 구축, 중견기업 홍보 방송 등 중견기업 지원 기반 확충 및 인식 개선 추진

□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및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추진

- (기술경쟁력) 혁신역량 보유 기업을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력 강화 및 DX 전환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상생협력) 중소기업, 지역사회, 대학, 공공연 등 혁신주체와의 공동기술혁신 등 협력을 지원하여 상생협력 생태계 기반 구축
- (수출지원) 수출 멘토링·바우처 제공, 무역금융 지원 등 관련 제도 연계를 통해 중견기업의 수출 저변 강화 추진
- (인력양성) 대학 등 지역 혁신주체와 협력하여 인재양성 및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인적 경쟁력 제고 기반 확보
- (유통산업 발전) 변화된 환경대응을 위해 유통 혁신성장을 지원

-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유통규제 운영과 소외계층 소비 지원* 및 대규모 소비진작 행사를 통한 내수 활성화, 대중소 상생 강화**

* 식품사막지역 이동식 소매점포 지원, 고령층·장애인 비대면 소비활동 지원

** 디지털 유통물류센터 고도화 및 보급확산, 지역 맞춤형 상생협력 강화

-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유통 현안 범정부 공동대응을 위한 「유통산업발전위원회(가칭)」 신설

** 김스편의점, 식자재마트 등 우회적 형태의 운영 방지 등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유통 AI·디지털 기술 도입·활용 지원 및 해외진출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 마련

* 유통분야 AI 활용 표준 매뉴얼 마련, 유통데이터 확충, 유통 특화 펀드 조성 등

** '26년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추진을 통하여 유통기업의 해외진출과

- 現 월2회 공휴일 휴무 원칙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근로자 건강권 사회적 합의가능성을 감안하여 현안 유지(지역자율) 또는 규제완화 검토

* 규제 강화 법안(의무휴업 공휴일 의무화)과 완화 법안(공휴일 원칙 삭제)이 동시 발의

** 지자체별 대형마트 외 슈퍼마켓·전통시장 등 분포 현황, 주변상권 활성화 효과, 1인·맞벌이 가구 구성비율, 주말 휴식공간으로서 대형마트 역할 등 고려하여 자율결정

- 지역 유통환경에 기반한 규제 적용을 위해 상권영향평가서의 공정성과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력이 확보되도록 제도개선 검토

* 형식적 제도 운영 및 조성된 상생기금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분쟁 발생

- 유통·AI 얼라이언스*를 통해 유통단계별 AI 활용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유통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펀드 운영 추진

* 유통사-AI 기술기업-스타트업 등이 참여, 유통 AI 생태계 육성을 위해 발족('25.4월)

** 판매, 마케팅, 스토어, 물류·배송, 고객경험 등 5대 유통단계별 AI 활용 매뉴얼 마련

- 중소유통물류센터의 풀필먼트화*를 통해 중소유통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고 중소유통에서 활용가능한 생성형 AI 개발·보급

* 디지털 유통물류 표준모델 확산('25년 신규, 24억원), '28년까지 10개소 전환

- 유통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주요시장 컨설팅, 현지 파트너 발굴,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K-소비재의 해외 역지구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 현지화, 수출·통관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 지원

- 코리아세일페스타 10주년 계기 역대 최대규모·할인을 추진하고 지방 개막, 지역특산물전을 통해 지방중심 소비행사로 업그레이드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 AI 기술, ESG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견기업 현장 방문, 간담회 개최 등 현장소통 추진
 - 권역별 기업 현장 방문 및 기업애로 청취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반영 추진
- ☐ 새정부 기조를 반영해 대·중소유통 상생 및 지역상권 회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제도 운영
 -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근로자 건강권, 사회적합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현안 유지(지역자율) 또는 규제완화 검토
 - * ①온라인 중심 유통환경 변화, ②1인 + 맞벌이 가구 증가로 주말 장보기 수요 증가, ③주변상권 활성화 효과(평일 전환 후 지역상권 매출이 증가) 등 종합 고려
 - 대형마트 출점규제를 지역 유통환경에 기반하여 상권영향평가서 공정성,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력이 확보되도록 이해관계자와 소통

(4) 기타

- ☐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기 본 방 향

- ◇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통상역량을 강화하고, 산업-통상 간 전략적 연계 강화로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활동 지원
 - 통상 역량 제고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업 활동으로 산업과 통상을 연계하고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
 - 북미·중남미·대양주 지역 국가 및 유럽과의 통상현안 해소 및 협력 강화
- ◇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상·산업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
 - 시장별로 특화된 전략적 경제협력으로 협력 관계 고도화
 - 협력채널 다변화·다각화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ODA 등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개척 지원
- ◇ 공급망, 디지털, 기후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
 -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기후·에너지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신통상 이슈 관련 양·다자 협력을 강화

(1) 주요내용

- 글로벌 통상질서 개편 속 산업-통상이 연계된 통상정책 추진으로 공급망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
 - 통상 역량 강화 및 공급망, 양자 현안 등 통상 쏠분야에서의 업계 및 전문가 소통·협력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
 - 북미, 중남미·대양주, 유럽 등 주요국 대상 아웃리치 및 한-미, 한-EU 등 FTA의 안정적 이행을 통하여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강화
-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별로 특화된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
 - 고위급 외교 연계 성과 확대, 분야별 파트너십 공고화 등 권역별로 특화된 전략적 경제협력으로 협력관계 고도화
 - 협력채널 다변화·다각화 및 플랜트·ODA 등 지원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확대 기반 조성
- 공급망, 디지털, 기후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다자 통상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
 -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양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신통상 질서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대응 기반을 구축
 -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 및 국내 통상인프라를 구축하고 기후에너지 규범 조성에 적극 참여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3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24	'30			
GDP대비 무역규모 비중(%)	59.6	69.3	84.6	69.3	70.4	73.5	5년간 평균 실적(70.6%)을 감안하여, 5% 상향된 73.5%를 목표로 설정	· 무역규모(수출액+수입액)/ 국내총생산×100	· 무역규모 : 무역협회 · 명목GDP : 한국은행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24	'25	'26	'27
통상전략 마련 및 이행을 위한 소통·협업 실적	53	50	55	58	61
양자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협력 활동 및 관련 기업 지원 건수	257	230	280	285	290
공급망·디지털·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협력 활동 건수	57	63	70	73	76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주요국의 공격적인 산업정책 추진 등에 따라 국익·실용 중심의 유연한 통상전략 마련 필요
 - 현지 동향과 국내 업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대응방안 모색
- ☐ 러-우 전쟁 장기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와 중앙아·아세안 등 신흥국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요인이 상존
 - 주요 신흥국과 협력 아젠다 적극 발굴, 상시적 실무접촉 등 협력채널 원활히 운영 및 협력사업 확대
- ☐ 글로벌 탄소규제 도입,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새로운 움직임 확대에 따라 선제적 대응 필요

- EU·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민관 공동 대응하고, 기후 관련 국제 동향에 적시 대응 및 신설 다자체제(기후클럽 등) 적극 참여
- 안정적, 예측 가능한 디지털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주도

(4) 기타

☐ 외국의 통상환경보고서, FTA 홈페이지 등

성과목표 III-1

산업-통상 연계로 공급망을 강화하고, 그린·디지털 등 새로운 글로벌 통상 질서를 주도하여 우리 산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한다.

(1) 주요 내용

□ 산업계와의 소통·협력 활성화를 통한 산업-통상 연계

- 미·중 갈등 심화, 보호무역주의 확대, 산업정책의 부활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통상역량 강화** 추진
- 보호무역, 공급망, 양자협안, FTA 등 통상 전 분야에 걸쳐 **범부처, 업계, 학계 등과 소통·협력**하여 산업-통상 시너지 제고

□ 북미지역 통상·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및 한미 FTA의 안정적 이행

- 트럼프 정부 관세 조치 등 산업·통상정책 대응, 미·중 갈등 지속 모니터링, 주요 통상협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 강화
- 북미지역 국가와의 **산업·에너지 협력 기회 확대** 및 네트워크 활성화, 신규 프로젝트 발굴 추진
- 한미 FTA 이행위원회 및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해 양국 통상협안의 안정적·지속적 관리

□ 중남미·대양주 국가와 통상협력 강화 및 수출확대 기반 조성

- 맞춤형 협력 채널 구축·운영을 통한 상호 관심 분야 프로젝트 발굴 및 우리 기업 비즈니스 기회 창출
- 중남미, 대양주 주요국과의 **아웃리치 활동 확대**를 추진하여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한 **민·관 교류 활성화**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유럽과의 전략적 경험 강화, 한-EU FTA 이행 및 통상현안 대응

- 한-EU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그간 이행 상황 점검 및 우리 기업 애로 해소 지원
- EU 및 주요 유럽국가와의 아웃리치 확대를 통한 산업·에너지 협력 기회 확대, 네트워크 활성화, 우리 기업 시장진출 지원

(2) 세부 추진계획

□ 보호무역, 공급망, 양자현안, FTA 등 통상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소통·협력 활동으로 산업-통상 시너지 제고 및 보호무역 대응

- 통상추진위원회 등 범부처 협의체 활성화, 상시 민관 소통 채널 운영, 통상정책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통상이 연계된 통상정책을 마련·추진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 강화 및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 美 행정부, 의회·업계 등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지속하며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산업·에너지 협력 네트워크 강화

□ 구주·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구주) 對유럽 통상이슈 대응, EU 보호무역 조치 지속 모니터링 및 정례적 FTA 이행위원회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 수출 등 지원
- (중남미·대양주) ^{핵심국} FTA, ^{유망국} 무역·투자 MOU 등을 통해 통상·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증대 및 우리 기업의 안정적 기업활동 지원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주요국의 공격적인 산업정책 추진 등에 따라 국익·실용 중심의 유연한 통상전략 마련 필요
 - 현지 동향과 국내 업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대응방안 모색
- ☐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 등에 따라 공급망 다변화·안정화 등 선제적 대응 필요
 - 주요국과의 맞춤형 협력 채널을 운영하며 산업·자원·에너지 분야의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를 도모

(4) 참고자료

- ☐ 외국의 통상환경보고서, FTA 홈페이지 등

성과목표 III-2

주요 교역국 및 글로벌사우스와의 통상·산업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1) 주요 내용

□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별로 특화된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고위급 외교 연계 성과 확대, 분야별 파트너십 공고화 등 권역별 특성에 맞춘 전략적 경제협력으로 협력 관계 고도화
- 협력채널 다변화·다각화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플랜트·ODA 등 지원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신흥시장 개척을 지원

□ (신북방) 非제재품목 중심 對러 수출 회복 및 중앙아 등 신북방 협력 확대로 新시장 수출·수주 기회도 확보

- (러시아) 한-러 경협 관계 안정적 관리를 통해 화장품·식품·의약품 등 위주로 수출 확대 및 러 진출기업 리스크 관리
- (중앙아) 「C5+韓」 협력채널 구축* 및 DX, 재생e 등 신규 ODA 과제 발굴, C5 인근 코카서스 3국**과 협력 확장

* 그간의 주요국(카우투) 양자 협력채널 확대하여 중앙아 5개국(C5)+韓산업부 다자 협력채널 구축

** EPA 추진 중인 조지아를 기점으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와 협력 방안 모색

□ (동북아)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中, 日과 협력채널 활성화를 통해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응한 협력 기반 구축

- (중국) 중앙·지방 정부와의 다층적 소통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애로해소 등 中진출기업 지원과 실질적 경제협력 추진

* (중앙) 韓산업부 - 中상무부, 공업정보화부 등 / 수출통제, 공급망, FTA 등

(지방) 韓산업부 - 광둥성, 산둥성, 장쑤성, 랴오닝성 등

- (일본) 한·일 정부 간 통상·산업·에너지 등 전분야 소통을 통한 협력성과 확보 및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전략적 공조 추진
- (동남아·서남아) 아세안·서남아 지역 주요 양·다자 협력채널 및 교류 행사를 통해 공급망·기후변화·디지털 등 경제성과 확대
 - (다자) 아세안+α 회의(SEOM, AEM, Summit) 논의 주도 및 성과발굴
 - (양자) 주력 협력국과의 경험 심화 + 경험 잠재국과 고위급 경제협력 플랫폼 신설·강화
- *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장관급}, 한-베트남 산업·FTA공동위^{장관급}, 한-필리핀 경제협력위^{3분기/차관급} 운용 및 양자 회의 추진
- (중동·아프리카) 사우디, UAE 등 주요국과의 협력채널 활성화로 경제협력 강화 및 정상 경제외교 성과 지속 도출
 - (중동) 중동 주요국과의 양자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에너지·신산업·디지털·첨단제조 분야 등 전방위적인 경제협력 촉진, 경제외교 성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성과 지속 도출
 - (아프리카)주요국과 통상협력 기반을 적기 확충하고 에너지, 제조업, 서비스, 문화 등 교류 확대 및 시장 진출기반 마련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러-우 전쟁 장기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와 중앙아·아세안 등 신흥국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요인이 상존
 - (유리한 여건) 주요 신흥국이 자원 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산업다각화를 추진함에 따라 산업 발전 경험이 풍부한 한국과의 협력수요 증대

- (불리한 여건) 글로벌 경기 둔화, 러·우 전쟁 장기화 및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 가중

- 상대국 상황에 따라 협력채널 운영여부 및 개최시기 등이 영향을 받으나, 협력 아젠다 적극 발굴, 상시적 실무접촉 등을 통하여 주요국과의 협력채널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 III-3

공급망, 디지털, 기후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다자 통상협력 강화로 우리 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1) 주요 내용

□ 전략적인 공급망 연대 협력과 신통상 기반 구축

- (촉촉한 공급망 통상) 미-중 전략경쟁, 러-우 전쟁 등 공급망 교란 상시화 대응 위해 양·다자 간 협력 채널 다층화,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 기여
- (신통상 대응 기반구축)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신통상질서 대응 위해 민관합동 간담회 등 소통채널 강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 기후·에너지 규범 논의에 선제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신시장 창출 기여

- (탄소무역장벽 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새로운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확보 지원
- (기후 규범 선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기후클럽 등 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 활성화 및 관련 규범 논의 주도
- (신시장 창출) 국제협력을 통한 청정경제 전환 가속화, 탄소시장 등 신사업 분야 활성화를 위한 소다자 협력 플랫폼 구축

□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대응 및 국내 정책기반 강화

- (디지털 협상) 양자·복수국·다자 차원의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협상에 적극 참여
- (디지털 통상 기반 구축) 국내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해관계자 소통 및 의견수렴 등 민관 협력체제 구축

(2) 세부 추진계획

□ 공급망 통상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위기대응 역량 제고

- (양다자 협력 채널 확대) IPEF, MSP 등 다자협약체 참여 강화, 자원부국 등과 파트너십 통해 기술·ODA 등 협력기반 마련
- (위기대응 협력 고도화) 공급망 교란 발생시 양다자 긴급회의 소집, 주요국들과 핵심품목 대상 모의훈련 정례화로 대응력 강화
- (산업계 소통·대외협력 증진)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교역국과의 다층적 소통·협력 채널을 통해 우리기업 부담 경감

□ 기후·에너지 통상 규범 논의 선제 대응 및 우리 기업 수출 경쟁력 확보

- (글로벌 탄소무역장벽 대응) 對EU·영국 협상* 및 국내지원 정책**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CBAM 부담 최소화 추진

* 고위급면담, 정부의견서 등 지속 협의를 통해 우리 업계의견 반영 추진

** 산학연·관계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등 지원

- (기후·에너지 규범 및 표준 선도) 기후·에너지 규범 및 표준 등을 논의하는 기후클럽, COP 등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산업계 의견 반영
- (기후·에너지 분야 신시장 창출) 주요국과 국제탄소시장 소다자 포럼 신설 추진 등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여 신시장 창출

□ 디지털 통상 규범 선도 및 국제협력 기반 강화

- 한-EU 디지털 통상 협정의 발효 추진 등을 통해 유사 입장국과의 디지털 통상 협력 강화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추가 가입 협상을 통해 아시아·대양주·중남미·중동 등 주요국과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

- WTO JSI 전자상거래 협정의 WTO 체제에 법적 편입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확립에 기여
- 디지털 통상 특화 석·박사과정 개설·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통상 대응반 운영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와 자국중심 규범 확산에 기업부담 가중

- 미-중 전략경쟁, 러-우 전쟁 장기화, 중동 지정학 리스크 등으로 원자재·핵심광물 확보 불안정성이 심화
- 미국 관세정책, EU CSDDD·CRMA·CBAM 등 자국우선주의적 규범이 확산되며 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 증대
- 전략 품목의 공급국 편중으로 인해, 자원부국의 정책 기조에 따라 협력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 존재

□ 글로벌 탄소규제 도입 움직임 확대 동향에 선제적 대응 필요

-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일방 조치를 부과하는 EU·영국 탄소국경조정 제도(CBAM) 등에 민·관 공동대응이 필요
- 美 신(新)정부의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클럽 탈퇴 등 변화하는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대응할 필요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제 규범·표준 논의가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과제 발굴 및 신사업 분야 활성화 필요

- 기후관련 기존 다자체제(유엔기후변화협약, OECD IFCMA 등) 뿐만 아니라, 신설 다자체제(기후클럽 등)에도 적극 참여 필요

- COP29(24.11월)에서 파리협정 제6조(시장) 세부규칙이 타결됨에 따라,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기반 마련 등 필요
- 디지털 기술 혁신에 의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가속화되거나 안정적, 예측가능한 디지털 환경을 위한 디지털 통상규범 미흡
 - 전자상거래 원활화, 기업의 데이터 비즈니스 확대,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 여건 조성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 필요

(4) 참고자료

- 유관기관 통상 보고서, 외국의 통상환경분석서, 국제기구 통상리포트 등
 - EU CBAM 헬프데스크 홈페이지(<https://www.compass.or.kr/eucbam/introduce/outline>), 기후클럽 홈페이지(<https://climate-club.org>)

전략목표 IV

수출 시장 확대 및 글로벌 통상의 연대 구축을 위해
양자·다자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기 본 방 향

- ◇ (성과) 그간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FTA 네트워크 확장 정책을 통해 전세계 GDP 85%에 해당하는 22개 FTA를 체결
 - 또한 적극적인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해 업계 수출을 지원하고, WTO, APEC 등 다자통상 협력을 추진하며 통상 중추국으로 발전
- ◇ (배경) 트럼프 취임 이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WTO 다자체제의 약화로 인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전략적인 통상교섭 정책 필요
- ◇ (추진계획①)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층적인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략적인 FTA 이행·활용 추진
 - 글로벌사우스 등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신흥국과 신규 CEPA 개시 추진
 - 진행 중인 FTA·CEPA 협상 진전, 개선협상을 통한 규범 현대화 추진
 - FTA 이행위 운영, 국내 보완대책 등을 통한 FTA 활용 촉진
- ◇ (추진계획②)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협약체에 적극 참여 및 논의 주도를 통해 우리 경제외교 위상 제고 도모
 - 美 철강 관세부과 등 해외 수입규제에 적시·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우리 업계의 통상이익을 보호하고, 통상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
 - 2025 APEC 의장국 역할의 성공적 수행 및 WTO, OECD, G20 등 다자협약체 논의 주도를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 성과 도출

전략목표 IV

수출 시장 확대 및 글로벌 통상의 연대 구축을 위해
양자·다자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규 FTA, 경제블록을 전주기(여건 조성-협상-이행·활용) 지원

○ **(여건조성)** 시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협상 후보국을 선정, 대상국과의 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협의를, 국내절차 등 추진

○ **(협상)** 주요 교역국 및 신흥 시장과의 협상 가속화를 통해 조속한 성과 도출 추진, 안정적 교역 네트워크 확충

* 한-말련 FTA, 한-태국 CEPA, 한-영 FTA 개선협상, 한-중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등

** 한-조지아 CEPA, 한-GCC FTA 등 既 타결 협정은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추진

○ **(이행 및 활용)** FTA 이행위 운영, 활용 지원 등을 통해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 「통상협정 국내대책 추진지원」 사업을 통해 FTA로 인한 업계 피해 구제 추진

** 「IPEF 청정경제 촉진펀드」,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 사업을 통해 원활한 이행 추진

□ 무역장벽·통상분쟁 대응 및 적극적인 다자통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통상 여건을 조성

○ **(무역장벽 대응)**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 및 보호무역조치(美 232조 등) 관련 현안별 대응 추진

○ **(다자협력)** 성공적인 2025 APEC 의장국 역할 수행, WTO·G20 등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를 통해 우리 경제외교 위상 제고

○ **(분쟁 대응)** WTO 분쟁 및 통상현안 관련 법적 이슈에 적기 대응하며 우리 업계의 통상이익을 보호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3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24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	71.0	71.7	77.2	78.2	77.1	80.0	· 美신정부 출범으로, 보호 무역주의 확대 및 통상환 경 불확실성이 매우 증가 되는 상황으로, 대외요인 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 는 지표의 특성을 감안, 그간의 목표치 대비 최대 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 ('22년~'24년 목표치) 75%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 FTA 발효국 교역액 /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 * 100	무역협회 (www.kita.net) 통계 및 보도자료 등
통상현안 및 통상분쟁 대응 실적(건)	-	-	121	160	160	175	·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비, 우리 통상이익 보호 및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를 위해 과거 3개년 실적 평균 대비 목표치 상향조정 (120%)	국내 제도 통상법 검토, 통상현안 및 통상 분쟁 관련 협의회, 간담회, 공청회, 현장방문, 의견제출, 패넬회의 참석, 대내외 아웃 리치 등 대응 횟수	추진계획, 결과 보고서, 관련공문, 보도자료 등 자체 실적조사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24	'25	'26	'27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	78.22	77.12	77.10	77.20	77.80
통상현안 및 통상분쟁 대응 실적	160	160	170	170	172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일부 FTA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 제기 가능성

- FTA 체결이 우리나라 수출 확대 등 경제성장에 기여하지만,
단기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산업에서 FTA 추진 반대 예상

⇒ 적극적인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대응

- **(여건 조성)** 관계부처 협의, 국회보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FTA 체결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 필요시 체결 검토중인 FTA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등 실시

- **(협상)**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개방, 규범 수준을 논의하며 최적의 협상 전략을 마련

- **(이행 및 활용)** 주요 이해관계 집단의 애로발생 여부를 점검*, 이행위 운영 및 국내 보완대책 마련 등을 통해 애로 해소 지원

* FTA 활용지원센터, KOTRA 등 유관기관을 활용하여 애로 발생 수시 점검 계획

(4) 기타

□ 관련 사이트

- 우리나라 통상협정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FTA 홈페이지 운영 (FTA강국 KOREA, fta.go.kr) 및 통상협정 추진현황 등 관련 영문 정보 제공(Korea FTA network, motie.go.kr)
-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을 위한 FTA 통합플랫폼 운영(okfta.kita.net)
- 해외 수입규제 개시 및 조사현황 등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운영(antidumping.kita.net)

(1) 주요 내용

□ (신규) 신규 통상협정 여건 조성 및 협상 개시 추진

- **(전략 수립)** 우리나라 경제통상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우선 협상 대상국 및 협정 체결 형식 등 기본전략 수립
- **(협상여건 조성)** 협상 개시를 위해 체결 후보국과 사전협의, 국내절차(관계부처 협의, 국회보고 등) 추진 등 여건 조성

□ (협상)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인 통상협상 전개

- **(신규 협상)** 말련·태국 등 ASEAN 내 핵심 협력국 및 몽골·세르비아·방글라데시 등 신흥경제 국가와 협상 진전 추진
- **(개선 협상)** 영국·중국(서비스·투자) 등 FTA 既 발효국들과의 개선, 후속 협상을 통해 규범수준 제고, 경제협력 강화 추진
- **(후속 절차)** UAE·GCC·에콰도르·조지아 등 타결된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내절차 가속화 및 대외협의 실시

□ (이행) 통상협정의 체계적 이행 관리 및 규범 현대화 추진

- **(협정 이행)** FTA 공동위원회, IPEF·RCEP 이행 등을 통해 추가 자유화 논의, 경제협력 강화방안 등 이슈 대응
- **(규범 개선)** 상대국과 협정문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FTA는 개선 협상을 통해 규범 수준을 제고

□ (활용) FTA 활용 촉진 지원 및 FTA 국내 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활용 촉진)** 권역별 FTA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교육·원산지 관리기반 구축 등 업계 FTA 활용률 제고를 지원
- **(국내보완대책)** 국내산업 보완대책의 수립 및 이행을 통해 FTA로 인한 산업별 피해 최소화, 경쟁력 향상의 계기 마련

(2) 세부 추진계획

□ (신규) 신규 통상협정 여건 조성 및 협상 개시 추진

- **(신규협정 추진전략 수립)** 협상 상대국별 공급망, 산업·인프라, 시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CEPA 등 맞춤형 협정 추진
- **(협상여건 조성)** 아프리카·중남미·서남아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과 신규 통상협정 개시 여건 조성
 - 관계부처, 국회, 이해관계자(농어민 단체, 업종별 협회) 협의 등을 통해 CPTPP 가입을 위한 국내여건 지속 검토

□ (협상)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인 통상협상 전개

- **(신규협상 진전)** 말련, 태국 등 아세안 거점국과의 교역 확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 협상 및 조속 타결 추진
- **(개선협상 진전)** 영국과의 규범 현대화,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개선 등 주요 교역국과의 개선 협상 추진
- **(후속절차 진행)** 중동·중남미 지역과 既타결된 협정 정식서명 및 발효 추진을 통한 산업·자원 공급망 확대

□ (이행) 통상협정의 체계적 이행 관리 및 규범 현대화 추진

- **(양자 FTA)** 공동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업계 통상애로 해소 지원 및 이행 이슈(추가 자유화, 경제협력 등) 대응 추진
- **(IPEF)** 공급망·청정경제 등 기발효 협정의 원활한 이행 지원 및 공정경제 협정('24.6월 서명) 국내 발효* 지원
 - *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발효시킬 수 있도록 국내절차 추진
- **(RCEP)** 회원국 이행상황 평가, 신규 회원국 가입 절차 등을 논의하고, 역내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노력 지속
 - * (협의 채널) 공동위원회 및 산하 이행위원회, 장관회의 등
- **(규범 현대화)** 상대국과 협정문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FTA는 개선 협상을 통해 규범 수준을 제고

□ (활용) FTA 활용 촉진 지원 및 FTA 국내 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FTA 활용 촉진)** 국내외 권역별 FTA 활용지원기관*을 통해 컨설팅·교육·원산지관리기반구축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 추진
 - * FTA·통상 종합지원센터(서울) + 18개 지역지원센터 + 11개 해외지원센터
- **(국내보완대책)**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FTA 체결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국가경쟁력 향상
 - 既발효 FTA 대상 이행상황평가 실시(발효 5년, 10년 후 총 2회), FTA 체결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및 향후 협상 등에 환류
 - FTA 수혜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출연을 통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농어업-제조업 간 상생문화 조성
 - FTA 등 통상협정으로 인한 제조업·서비스업 피해기업 대상 자금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지원을 제공하여 경쟁력 강화 추진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일부 FTA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 제기 가능성

- FTA 체결이 우리나라 수출 확대 등 경제성장에 기여하지만, 단기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산업에서 FTA 추진 반대 예상

⇒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적극 대응 추진

(4) 참고자료

□ 홈페이지 운영

- 우리나라 통상협정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FTA 홈페이지 운영 (FTA강국 KOREA, fta.go.kr) 및 통상협정 추진현황 등 관련 영문 정보 제공(Korea FTA network, motie.go.kr)
-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을 위한 FTA 통합플랫폼 운영(okfta.kita.net)

(1) 주요 내용

□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전략적 대응 체계 구축

- 국가별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 및 보호무역조치 관련 현안별 대응 추진
- 국내 제도(보조금 등)의 통상법적 검토 및 대외 환경변화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WTO, APEC 등에 적극 참여하여 다자무역체제 복원에 기여

- WTO 개혁 논의 참여, 통보 및 투명성 강화, 복수국간 협상 참여 등 WTO 다자무역 체제 복원에 공헌
 - 미국발 관세조치에 따른 각국 관세 및 비관세 조치 증가 등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가 확산 중인 바, 관련 동향 모니터링 및 적기 대응 추진
- APEC, OECD, G20 등 다자협의체에서 다자무역체제 강화 등 新통상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역내 국제공조 주도

□ 통상분쟁에 적극 대응

- 진행중인 분쟁은 유리한 결과 도출을 위해 차질 없이 대응하고, 사전 대응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잠재적 분쟁의 확산 방지

(2) 세부 추진계획

□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전략적 대응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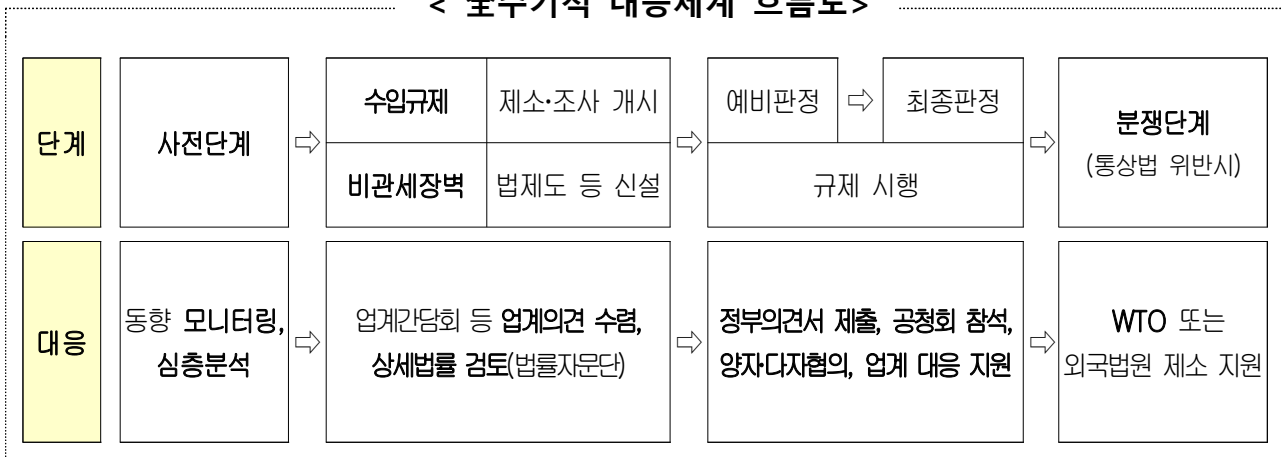
○ 국가별·사례별 무역장벽에 신속·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의 주기적 대응체계 구축·운영 등 정부주도 대응 마련

- ①코트라·무협사전 모니터링·정부·로펌법률검토, ②정부대응 및 업계지원규제 시행단계 밀착지원, ③통상법 위반시 제소 등 분쟁회부 검토

- 조사대상 기업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민관 합동 적극 대응*

* 업계간담회, 정부 의견서 및 서한 제출, 양자 협의, 통상법 검토, 국제무역법원 공동 대응 등

< 주기적 대응체계 흐름도 >



○ 또한, 수입규제 조치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체감형 법무·회계 컨설팅 지원 강화 추진

* 123대 국정과제 중 "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의 보호무역 피해 기업 지원(세부이행과제)의 일환으로, 향후 5년 간('26~'30년) 20억원/년 지원 계획

○ 민간 전문가 교류, 부내 직원에 대한 통상법령 교육 제공 등 통상정책에 대한 정보 교류 및 기본지식 확산 추진

* 수입규제 법무교육, 통상법무카라반, 통상법무포럼 등 관련 설명회를 통한 업계 인식 제고

□ 다자통상 현안 대응 및 협상·협력 강화

【 WTO 】

- WTO 14차 각료회의('26.3월) 계기, 우리 주도 이슈의 성과 창출 도모* 등 WTO 논의 적극 참여를 통한 우리 위상 제고

* ▲우리 주도 타결 투자원활화 협정('24.2월)의 WTO 체제 편입, ▲기후변화·AI·산업 정책 등 신규범 관련 제안서 제출 등 논의 주도를 통해 다자 심의기능 강화에 기여

【 APEC, OECD, G20 】

- 2025 APEC 성공적 개최 및 OECD, G20 각료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자무역체제 강화 등 新통상 이슈 논의 주도

- **(APEC)** 2025 APEC 의장국으로서, 통상장관회의(5월, 제주) 논의 주도 및 성과 제고, 정상회의 주간 경제인 행사* 추진을 통해 실질적 경제적 성과 창출

* ▲CEO Summit 및 부대행사(퓨처-테크포럼, K-Tech 쇼케이스 등), ▲수출·투자 연계 행사(수출 붐업코리아 Week, 인베스트코리아 Summit 등)

- **(OECD·G20)** OECD 각료이사회(6월, 프랑스), G20 무역투자장관 회의(10월, 남아공) 등 다자협의체 적극 참여 등을 통해 글로벌 공조 강화 및 2025 APEC 연계 성과 확대

□ 무역협정상 법적 이슈 대응

-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공조 하에 진행 중인 분쟁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통상분쟁 체제관리를 병행하여 대응역량 총체적 제고

- 신규 피소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 사전에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분쟁 확대를 최소화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
- 제3자 분쟁에의 참여는 우리 기업들에 유리한 쪽으로 입장을 정하여 적극 참여함으로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트럼프 2기 행정부 下 지속적인 관세 무기화 및 이에 따른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예상
 - 규제조치 및 잠재 분쟁 가능성 관련 모니터링 및 정부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 민관 소통 강화 및 업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 지속 · 적극 시행을 통해 우리 업계 피해 최소화 도모

(4) 참고자료

- 홈페이지 운영
 - 해외 수입규제 개시 및 조사현황 등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운영(antidumping.kita.net)

기 본 방 향

-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무역보험 지원 확대로, 수출역량 확충 및 수출저변을 확대
 - 수출 우상향 기조를 확고히 하고,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민관이 수출 원팀코리아로 총력 대응
 - 무역금융 366조원, 수출 마케팅 등 역대급 규모의 수출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등 전부처 역량 결집
- ◇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외투유치 및 유턴 촉진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 첨단산업 외국인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 전략적 아웃리치 전개, 외투 인센티브 확대 및 주요 경제행사 연계 IR 추진
 - 국가전략·공급망핵심 등 첨단업종 중심의 유턴기업 유치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유턴투자 활성화
- ◇ 수출통제 적시 대응 및 산업기술보호를 통한 우리 기업의 무역안보 리스크 최소화
 - 트럼프 2.0기, 미-중 갈등 등 불확실한 여건 속 무역안보 리스크 최소화 및 무역안보 강국 입지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 적시 제공 및 산업기술 보유 기관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로 산업 기술 유출 방지
- ◇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무역구제 시스템 구축하고 엄정한 무역구제 조치를 추진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
- ◇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3~'32) 이행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

(1) 주요내용

□ 수출역량 강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수출구조 혁신

◇ 범부처 역량 결집 통해 3대 수출 애로(무역금융·마케팅·인증) 해소, 수출 유망품목 발굴, 수출지원기반 확대 등 전방위적 수출 지원

- 글로벌 경기둔화, 무역보수주의 확산 등 무역 위기에 신속 대응,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한 해외마케팅·무역금융지원 등 수출 총력지원
- 新시장 개척 및 신규 수출 기회 발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등 수출저변을 지속 확대하고, 무역 금융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기업·유턴기업 유치 확대

◇ 첨단산업 중점 전략적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지속 등을 통하여 양질의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및 유턴 활성화 기반 구축

-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등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 전략적 유치 및 규제혁신 등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병행
- 국가전략·공급망핵심 등 첨단업종 중심의 유턴기업 유치 및 현장의견을 반영한 지원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유턴투자 활성화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3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24				
연간 수출액 (억불)	5,125	6,444	6,836	6,322	6,836	7,218	'25~'26년 목표치는 美 관세 등 어려운 대외여건을 고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5.8)」上 수출성장률 +0.2%(25), △0.5%(26) 반영, '27~'30년은 '10~'26년 기준 회귀분석 결과로 산출 ($y_{수출액} = 112.9 \times \text{년도} - 221,972$) * 목표치(억불) : ('25) 6,850 → ('26) 6,816 → ('27) 6,879 → ('28) 6,992 → ('29) 7,105 → ('30) 7,218	연간 수출금액 합계	관세청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 (억불)	207.5	295.1	304.5	327.1	345.7	307	'22~'24년 對韓 외국인투자금액 (신고기준)이 증가추세였으나, '25.1월 美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며, 고율 관세 부과 등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고 있음. 실제로 외국인투자유치 1분기, 신고금액은 64억불(△9.2%), 2분기는 131억불(△14.6%)로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함. 감소폭 증가에 따라 3분기(△20%), 4분기(△25.4%)를 추정할 때, '25년 의 최종 외국인투자 신고 금액은 257억불(△25.4%)이 예상됨. 다만, 하반기 카라반·FDI 이행지원단 등 적극적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통해 감소 폭을 제한하여 '25년 276억불(△20%)을 달성하고자 함.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28)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되므로, 매해 최근 3년 평균치를 목표치로 산출 * 목표치(억불) : '25(276) → '26(316) → '27(312) → '28(301) → '29(309) → '30(307)	외국인직접투자집계 (신고기준)	외국인투자통계 시스템(INSC)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24	'25	'26	'27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증가(개사)	5,585	5,744	5,634	5,697	5,795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억불)	327	345	276	316	312
수출통제 현안 대응을 위한 국외 협력채널 운영 실적	20	21	25	27	30
무역구제 조사 판정(건)	18	25	30	31	32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 입주수(개)	496	639	670	703	738
원전도입국 수주지원활동 및 주요공급국 협력활동 전개(건)	15	28	30	33	36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수출)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경기 둔화 및 원자재 가격, 공급망 블록화 등 이슈로 수출 확대를 위한 대외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

○ UN, OECD 등 국제기구는 '25년 글로벌 경제성장세 둔화*전망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24→'25, %) : (UN, '25.6) 2.8 -> 2.4 , (OECD, '25.3) 3.2 → 3.1

○ 글로벌 교역은 3% 내외의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금리인하 등이 주요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

○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 고금리 장기화, 공급망 분절화 등에 따른 수출·금융 통제는 생산비용을 상승시키고, 국가 수출에 악영향

○ 이에, 중소·중견기업 지원, 수출역량강화 및 지원기반 확충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한 구체적이고 핀포인트(Pin-Point)적인 수출 지원 확대

- 수출공급망 보증, 문화산업보증 등 中企 육성 프로그램 수출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 유동성 확대 공급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특례지원을 확대하고, 수출패키지 보증도 확대

- 신속한 해외인증을 위한 패스트트랙 신설, 해외-국내 상호인정 지속 확대, 해외인증 취득 소 과정의 현장 맞춤형 밀착 지원 강화 등

□ (투자) 美 트럼프 2기 관세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재편 경쟁 등으로 부정적인 글로벌 FDI 환경이 지속되어 전 세계적으로 투자심리 위축

* ① 글로벌 통상이슈 및 투자불확실성 확대가 글로벌 FDI회복 제약 가능(UNCTAD, '25.1)

② 美 관세정책 발표 및 유예 조치 등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Reuters, '25.5)

** IMF는 미국의 10% 보편관세 부과 시 세계 GDP가 기존 전망보다 △0.3%p 감소할 것으로 전망('25.1)

- 美 트럼프 관세정책과 미국의 제조업 육성·투자 확대 기조가 맞물리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외국인투자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

* 미국 기업 : 자국 투자확대 ⇨ 해외투자 위축(미국은 우리 FDI 1위 국가)
글로벌 기업 : 미국向 FDI 증가(상대적으로 對韓 FDI 감소)

- 또한, 국내 인건비·건축비 상승 및 고물가·고환율 지속적으로 유턴기업의 국내 투자 불확실성 증대가 예상되는 상황
- 이에, 외투·유턴 유치 관련 부처·지자체 간 정기적인 워크숍 개최 등 협력체계 구축으로 외투·유턴기업의 애로사항 적극 해소 및 투자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적극 추진

(4) 기타

□ 참고자료

- 2025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2025.1.2.)
-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25.1.8.)
- 2025년 수출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전략(관계부처 합동, 2025.2.18.) 등

□ 관련 기관 홈페이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www.kotra.or.kr
- 한국무역보험공사 : www.ksure.or.kr

(1) 주요 내용

□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 디지털 무역 확대, 수출 확대 지원, 신규 수출 기회 발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
 -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글로벌 B2B e-커머스 플랫폼 활용한 온라인 수출 지원 등을 통한 디지털 무역 확대 지원 강화
 - 해외전시회, 수출바우처, 수출상담회, 물류센터 등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규모 확대 및 수출 애로 해소 지원
 - 오사카엑스포, 한류박람회, 글로벌파트너링을 통한 한류, 공급망 재편 등과 연계한 신규 수출 기회 발굴

□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장 및 수출동력 확보를 위해 수출공급망 보증, 문화산업보증 등 지원 제도 신설을 통한 무역보험 지원 강화
- 글로벌 고금리 기조 대비 중소기업 특례지원 확대를 강화하고,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확대 등을 통한 유동성 확대 공급

(2) 세부 추진계획

□ 디지털 무역 확대를 통한 온라인 수출 지원 강화

- (디지털무역지원) 중소기업의 디지털 무역을 위해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구축 ⇒ 콘텐츠 제작·마케팅·인력양성 지원
- (BuyKorea) 글로벌 B2B e-커머스 플랫폼 활용한 온라인 수출 지원 등

□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규모 확대 및 수출 애로 해소 지원

- (해외전시회) 수출 성약 효과가 큰 대형 현지 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하여 마케팅 효과 제고
- (수출바우처) 중소기업 수출지원 다변화 및 지원 규모 확대 등

□ 한류, 공급망 재편 등과 연계한 신규 수출 기회 발굴

- (오사카엑스포) 한국의 날('25.5월) 전후 우수상품전, 무역사절단 등 수출행사 및 범정부·기관 협업 한류 문화행사 개최 등 집중 지원
- (한류박람회)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등 한류 확산시장을 중심으로 K-POP 콘서트 연계 판촉·상담회를 통한 신규 판로개척 지원 등

□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 신설

- (수출공급망 보증) 기금 출연 대기업(자동차 등) 납품 협력사 대상 제작자금을 우대 보증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수출 저변 확대 등

□ 중소·중견기업 유동성 확대 공급

- (中企 특례지원 확대) 과거 수출실적이 낮은 수출 초보기업, 단기간 수출 급증 기업도 충분한 수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中企특례지원 강화 등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경기 둔화 및 원자재 가격, 공급망 블록화 등 이슈로 수출 확대를 위한 대외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

- UN, OECD 등 국제기구는 '25년 글로벌 경제성장세 둔화 전망
- 글로벌 교역은 3% 내외의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금리인하 등이 주요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

-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 고금리 장기화, 공급망 분절화 등에 따른 수출·금융 통제는 생산비용을 상승시키고, 국가 수출에 악영향
- 중소·중견기업 지원, 수출역량강화 및 지원기반 확충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한 구체적이고 핀포인트(Pin-Point)적인 수출 지원 확대
 - 수출공급망 보증, 문화산업보증 등 中企 육성 프로그램 수출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 유동성 확대 공급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특례지원을 확대하고, 수출패키지 보증도 확대
 - 신속한 해외인증을 위한 패스트트랙 신설, 해외-국내 상호인정 지속 확대, 해외인증 취득 소 과정의 현장 맞춤형 밀착 지원 강화
 - 디지털 무역 인프라 구축, 청년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확대, 디지털 무역 지원 플랫폼 고도화 추진 등 디지털 무역 확산 지원
 - 글로벌 주요 이슈 모니터링 지속 및 홍해 물류 TF 운영, 러-우 비상대책반 운영 등 주요 리스크 대응 관리 강화

(4) 참고자료

- 2025년 업무보고, 2025년 수출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전략 등

성과목표 V-2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진출기업의 U턴을 촉진한다.

(1) 주요 내용

-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이 심화된 통상여건下 투자유치 모멘텀 유지·확대 및 외투의 질 제고
 - (전략적 투자유치) 첨단·소부장 산단과 연계한 국내 수요 품목, 공급망 재조정* 중인 글로벌기업 등 중심으로 선제적 유치 활동
 - * 美 관세인상 대응, 중국내 공장 이전 등 목적으로 투자검토 중인 기업 발굴·공략
 - (핵심기능 유치) 현금지원 상향('25년 2000억원), 외투지역 입주업종 제한 완화, 외투기업 R&D 등으로 첨단산업 외투 및 R&D센터 집중 유치
 - (투자환경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혁신, 투자가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외투지원체계 개편
 - 외국인투자 신고·심의제도 합리화, 외투 옴부즈만을 통한 애로 해소방안 마련, FDI 이행지원단 및 주한 외국상의 간담회 등을 통해 외투업계 의견수렴 및 투자환경 개선 추진
- 국가전략·공급망핵심 등 첨단업종 중심의 유턴기업 유치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원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유턴투자 활성화
 - 첨단·공급망핵심 등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 제도 개선사항 적극 홍보
 - 유턴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투자이행 수시 점검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원활한 유턴투자 활성화 촉진

(2) 세부 추진계획

□ (전략적 투자유치) 6대 첨단전략 산업*,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 등과 연계된 전략적 투자 유치 추진

* 반도체, 미래차, 디스플레이, 로봇, 이차전지, 바이오

- (국내IR) 외국인투자유치 카라반(지역소재 외투기업 애로 해소), FDI 이행지원단 제도(신고 후 미도착 기업 애로 해소)를 통한 적극적 투자 발굴·이행
- (국외IR) 정상 순방, 고위급 방문 등을 계기로 첨단산업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전략적 유치 활동 전개

□ (핵심기능 유치) 현금지원 상향('25년 2,000억원), 외투지역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으로 첨단 외투기업R&D센터 유치 등 외투의 질 제고

- (현금 인센티브) 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R&D센터 지원한도 대폭 확대 (총 투자액 대비 '24년 50% → '25년 75%) 및 증액기준 상향('24년 40% → '25년 75%)

* 기타 R&D센터('24→'25) : 지원한도 10%(50 → 60%), 증액기준 20% 상향(40 → 60%)

- (입지 지원) 외국인투자 유치카라반 등 상시 면담 등을 기반으로 입주기업의 애로를 확인 및 애로 해소 필요시 지침 개정 검토

□ (투자환경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혁신, 맞춤형 정보제공, 외국인투자 신고·심의제도 합리화 등 수요자 중심 외투지원체제 개편

- 외투음부즈만 제도, 주한외국상의 규제백서와 함께 주요국별 외국상의 간담회 등을 통해 외투업계 의견수렴 강화 등

□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의 유턴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관계 부처·지자체·업계와 소통 강화 및 타겟국가 중심 IR 추진 등

- △정부·유관기관 간 전략적 유치활동 강화, △지자체 합동 권역별 지역순회 간담회, 협단체 간담회, 국내 모기업 방문 등 추진, △유턴 유치 타겟 국가(베트남) 중심 '현지 IR' 전개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요인

- (美 트럼프 2기) 미국의 무역불균형 개선 및 자국산업 육성을 위한 관세 부과 조치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축* 우려

* 세계은행은 트럼프 정부의 10% 보편관세 부과 및 상대 국가의 보복 관세 부과 시, '25년 세계 GDP는 기존 전망(2.7%)보다 △0.3%p 감소할 것으로 전망('25.1)

* 미국 기업 : 자국 투자확대 ⇨ 해외투자 위축(미국은 우리 FDI 1위 국가)
글로벌 기업 : 미국향 FDI 증가(상대적으로 對韓 FDI 감소)

- (국제관계 변화)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 확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경쟁, 통상 분쟁 격화 등으로 글로벌 FDI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 예상

* ① 글로벌 통상이슈 및 투자불확실성 확대가 글로벌 FDI회복 제약 가능(UNCTAD, '25.1)
② 美 관세정책 발표 및 유예 조치 등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Reuters, '25.5)

- (국내 투자환경 불확실성) 국내 인건비·건축비 상승 및 고물가·고환율 지속으로 유턴기업의 국내 투자 불확실성 증대가 예상되어,

- 기업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을 위해 수시 이행점검 및 유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해결방안 탐색 필요

□ 갈등관리계획

- (범부처 협력체계) 외투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외투 옴부즈만과 규제개혁위원회 등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외투기업의 애로사항 적극 해소

- (이해관계자 소통) 주요국 외국상의, 외투기업 대표 등과의 정기적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수립 시 적극 활용

- (지자체·경자청 협조 확대) Invest Korea와 지자체 협력 강화, 경자청과의 협업 확대, 중앙-지자체-경자청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

(4) 참고자료

- 2025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2025.1.2.)

* 3.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 "3. 외국인 투자(FDI) 촉진"

-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25.1.8.)

* ❷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모멘텀 유지 - "외투"

- 경제2분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산업통상자원부, 2025.7.)

* [통상·무역] "3.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적 외투 유치"

(1) 주요 내용

- (국제공조 강화) 트럼프 2.0기, 미-중 갈등, 러-우 전쟁 장기화 등 무역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무역안보 강국 입지 구축을 위해 국제공조 강화
 - (양·다자 협력)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양자·소다자 채널 확대, 협력 강화로 무역안보 모범국 입지 구축
 - (수출통제체제) 우리 산업·기업에 미치는 영향, 국가안보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바세나르 등 수출통제 체제에 주도적으로 대응
- (제도개선)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수출통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핵심기술 선제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
 - (수출통제) 미 수출통제 정책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러-우 전쟁 상황에 따라 대러제재 완화 검토 등
 - (기술보호) 산기법 개정안 후속조치 신속 이행, 국가핵심기술 현황 및 검토체계 개선 등
- (기업지원)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 적시 제공하여 기업 지원 강화 및 산업기술 보유기관 등의 기술보호 역량 개선으로 산업 기술의 유출방지

(2) 세부 추진계획

- 무역안보 강화를 위한 대외 수출통제 적시 대응
 - (역량강화)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개선, 무역안보 아카데미, 제도개선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역안보 신뢰성 제고 및 제도 관리·대응 역량 강화

- (현황조사)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대외 동향 및 기업실태 점검 등 다방면의 정보를 취합·분석

*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 수출허가판정 등 통계 분석, CP기업 현장점검 등

- (기관협력)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수출허가 심사 강화 및 전략물자 안전수출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무허가수출·국제제재 위반수출 등 사후단속 강화

- (기업지원) 우리 기업의 제도 이행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및 국제사회 제재동향 등 정보제공 강화 등

□ 산업기술보호를 통한 기술안보 강화

- (법령정비) 핵심기술 보유확인제·등록제, 보유기관 인센티브 마련 등 산업기술보호법 개정('25.1)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완료
- (규제개선) 산업기술보호위 정기 개최, 기술 현행화, 실태조사 우수기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업계 예측성 제고 및 부담 최소화
- (범정부 정책공조) 대통령실 주재 범정부 기술유출 대응단 참여 및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술보호 정책·제도 총괄
- (산업기술보호의 날 개최) 산업기술보호 인식제고 및 기업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보호 정책 세미나, 유공자 포상 등 추진 등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최근 세계적으로 수출통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무역안보 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되는 추세
 - 무역안보 분야에서의 통제 대상이 다양해지고, 자국 안보를 이유로 산업보호·무역제한 조치 증가
 - 새롭게 부상하는 수출통제 제도들에 대해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 필요
- 급변하는 기술보호 환경, 첨단기술 개발·확보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기술보호의 중요성 대두
 - 지능화·다양화된 기술유출 유형에 대응하고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 필요
 - 기술안보 관련 수출규제 대응 급증에 따라 4대 수출통제체제, MAST 등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현안에 신속 대응

(4) 참고자료

- 관련 기관 홈페이지 : 무역안보관리원(www.kosti.or.kr)
산업기술보호협회(www.kaits.or.kr)

(1) 주요 내용

□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역구제 역량 강화

- 국내산업 피해 적기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을 확대하고, 조사제도 고도화 및 전문성 강화로 국내 안전망 확보 및 공정 무역질서 확립
- 양자·다자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무역구제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역구제 제도 발전에 기여
- 기업체 대상 홍보활동 강화, 수입·산업동향 및 해외동향 등 정보공유 확대 및 업계 상담지원 등 무역구제제도 활용·촉진 활동 강화

□ 무역구제제도의 효과성 제고 및 기반구축 추진

-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 진행 및 조치수준 강화를 위해 면밀한 현지실사를 수행
-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성공적 정착 및 대상범위 확대, 덤핑방지 관세 5년 부과 정착 등 효과성 제고 기반구축
- 또한, 지재권 분쟁, 조사의 기술난이도 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진제도 도입 및 조사제도 정비, 후속조치 이행력 강화 등 규정 정비 지속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 선진 무역구제 기관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

- 국내산업 피해 적기 대응을 위한 조직신설 및 전문인력 확충으로 新조사 수요 대응 및 조사기법 고도화 기반 구축

-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등 다자·양자 협력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현안 논의 및 정보공유 등 협력 공고화
- 기업 대면 홍보를 강화하고, 전문가 학술세미나, 대학(원)생 논문대회,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무역구제 저변 확대

□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산업피해 및 덤핑조사 강화

- 덤핑조사의 시장규모·복잡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신속·공정한 조사를 위한 현장방문, 해외실사 등 현장밀착형 조사 강화
- 예비공정 판정 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통해 조사기간 중 피해발생을 방지하고, 최종판정 시 덤핑방지관세 5년 건의 원칙 정착으로 국내산업 보호 효과성 강화
- 덤핑방지관세 회피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회덤핑 대상 범위 확대, 조사기법 고도화로 반덤핑 조치의 실효성 및 활용도 제고

* 우회덤핑 유형 : (현) 경미한 변경 등 → (검토) 경미한 변경 + 제3국 경유 등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조사·이행 기능 강화

- 지재권 분쟁 심화, 조사의 기술난이도 상승 등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선진제도 도입 및 조사제도 정비 추진
 - 복잡·다양한 분쟁에 대비하여 신속·공정한 조사·판정과 제재 조치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규 체계 및 하위 규정 정비
 - 첨단 기술 관련 표준특허 조사시 침해여부 판단 기준 수립 및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 부과 기준 명확화를 위한 제도 마련
- 조사-분쟁조정·수사 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조사·판정과 제재조치 등의 기법을 고도화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글로벌 교역환경) 글로벌 공급과잉 및 관세전쟁 본격화로 보호무역 조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산 저가 공급과잉제품 등의 시장 유입 증가 우려

- 철강·화학제품 등 저가 수입재의 덤핑조사 신청증가*와 함께 광섬유·로봇 등 新조사 수요도 증가 전망

* 덤핑 조사신청(건) : ('22) 6 → ('23) 8 → ('24) 10 → ('25.7) 10 * 금년 15+a건 예상

- 한편, 이차전지, 바이오, 신소재 등 첨단산업 시장 성장과 함께 국내·외 기업간 경쟁 심화로 관련 기술 분야 특허분쟁도 증가 중

* 특허권 침해 (전체조사/특허조사, 건수) : ('22) 8/5 → ('23) 8/6 → ('24) 15/6

□ (무역구제조치) 덤핑,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 행위로부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역량강화, 효과성 제고 등 추진

- 덤핑조사 증가 및 지재권 분쟁 등에 적기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 확대 및 조사기법 고도화로 관련 조사의 신속·전문성 제고
- 덤핑방지관세조치의 회피 방지를 위한 우회덤핑방지제도를 본격 시행('25.1) 하고, 불공정 무역행위 시정조치 이행 강화를 추진

(4) 기타

-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ktc.go.kr>

(1) 주요 내용

□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3~'32) 이행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

-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요기반 총량관리제* 운영, 민간투자 적기반영을 위한 수시지정 활성화 추진

* 유연한 지정 및 해제를 통해 총면적 360km² 이내 관리(현재 271.4km²)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경제상 필요한 대규모 투자의 경우 경자위 심의를 거쳐 총량 예외 허용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권한,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등 지방 정부의 권한 확대, 첨단·핵심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IR·PR 강화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등 타 특구와의 연계·협업을 통해 입주기업 복합지원 추진 등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경쟁력 제고

- 글로벌캠퍼스를 거점으로 글로벌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 본교와 협력하여 국제공동연구, 글로벌 기술 교류 확대*

* 해외 본교의 부설연구소 국내 설립, 글로벌캠퍼스 석·박사 과정 개설을 통한 Post-doc 양성, 국제공동연구 과제 발굴 및 본교 교수진의 R&D 참여 확대

-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 후속조치로 외투유치, 고용창출을 위한 D.N.A^{Data.Network.AI} 혁신타운* 조성 추진

* 지식기반·정보통신·첨단제조업 입주동(11층)+금융·통관 등 지원업종 입주동(5층)으로 구성

(2) 세부 추진계획

□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구조적 기반 강화

- 대전·세종, 충남 경자구역에 대한 본격적인 신규지정 절차에

착수하고, 추가 지정 수요가 있는 경자구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투자유치의 기반 마련

- 경자구역 지정·개발·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자법령 개정 추진 및 경자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첨단기술·핵심전략 산업)에 입지 인센티브* 제공 확대

* 개발계획변경시 경미한 사항(면적·기간·비용·유치업종) 확대, 조성원가 이하 분양,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전용용지 공급

- 관계부처·유관기관 등 혁신주체 간 상시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

* 규제특례 발굴 협력활동, 규제특례 지원 등 신산업 활성화 규제혁신 분야에 우선 지원 예정

- 경제자유구역만의 강점과 차별화된 전략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홍보 시행계획 수립 및 IR·PR 강화

- 해외 우수 대학의 부설 연구소 집중 육성을 통해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적 발전을 도모

* (수도권)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한 부설 연구소 설립(겐트대, 유타대), 해외 본교에 산학협력단 분원을 설립하여 국제공동연구과제 기획·발굴

** (비수도권) 부산 명지 국제도시에 제2의 글로벌캠퍼스 구축, 세계적인 바이오 बैं크 시스템을 도입한 글로벌 바이오 랩 허브 조성

-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적기 건설을 지원하여 경자구역의 조기 활성화 도모

-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정 후속조치로, D.N.A^{Data.Network.AI}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 지식기반·정보통신·첨단제조업 입주동(11층)+금융·통관 등 지원업종 입주동(5층)으로 구성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경제자유구역 일부 지구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 등의 반발

- (원인분석)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지연
 - 개발 부진 지구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방안 수립, 경자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상이한 이해관계 간의 조정 필요
- (갈등관리계획) 수요기반 **총량관리제**(총면적 360km² 이내 관리) **운영**, 기존 개발사업 지속 추진과 **미개발 지구 구조조정**(전체의 53% 축소) 등을 통해 개발 촉진
 - 중앙·지방 정례적 협의체 운영,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및 갈등 조정 지속 노력

□ 외투기업에 비해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 (원인분석)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기업에는 다양한 특례가 부여* 되고 있으나, 동일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에 대한 혜택은 부족
 - * 지방세 감면, 입지혜택 제공, 노동·수도권 규제 배제
- (갈등관리계획) 지자체, 입주기업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기업의 의견수렴 및 외투기업과 동등한 특례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속 추진

(4) 참고자료

□ 정책목표 이해를 위한 주요 참고자료

-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관련 매뉴얼

- 산업통상자원부, 「2003~2013 경제자유구역 10년사」 (2013)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법령 이해」 (2013)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제자유구역제도 및 외자유치 실무」 (2009)

□ 경제자유구역 운영 관련 기관 홈페이지

-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www.fez.go.kr
- 각 지역 경제자유구역청
 - 인천 : www.ifez.go.kr
 - 부산·진해 : www.bjfez.go.kr
 - 광양만권 : www.gfez.go.kr
 - 경기 : qqfez.qq.go.kr
 - 대구·경북 : www.dgfez.go.kr
 - 충북 : www.cbfez.go.kr
 - 강원 : www.gsfez.go.kr
 - 광주 : www.gjfez.go.kr
 - 울산 : www.ulsan.go.kr/s/uhez

(1) 주요 내용

- ☐ 원전의 안전성·지속가능성·책임성 제고를 통해 원전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여, 원전 활용기반 강화
 - 원전 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원전수출 지속

(2) 세부 추진계획

- ☐ 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 전방위적 원전 해외진출 활동을 통해 원전 수주 활동 추진
 - 원전 수주활동 지원을 위해 세계 원전정책 및 산업동향 파악
 -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원전 공급망 진출 지원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 전 세계적으로 첨단산업 전력공급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동시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원전을 타전원과 조화롭게 활용하는 추세
 - 세계 원전시장 규모확대에 따른 신규 수출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활동 지원 등 원전생태계 강화

(4) 참고자료

- ☐ 관련기관 홈페이지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 www.khnp.co.kr
 - 한전원자력연료 : www.knfc.co.kr
 -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 www.e-kna.org

전략목표 VI

표준·인증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사회와 안전하고 풍요로운 국민의 삶을 지원한다.

기 본 방 향

- ◇ 기업의 신시장 창출 및 수출 지원에 기여하고 국민 생활 편의를 확보하는 표준정책 추진 필요
 - 산업기술 변화와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핵심산업 분야 표준개발 및 국제표준화기구를 통한 전략적 국제 표준협력 추진
- ◇ 융복합·신기술 제품 출시 등 기술발전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시장에 대한 감시 확대 등 제품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
 - 신수요 대응 법령·안전기준 제·개정,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조사 확대, 온라인 불법제품 기획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전기·생활·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추진
- ◇ 글로벌 인증환경 변화와 新수요에 대응하는 시험인증 서비스 경쟁력 확보로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지원 확대
 - 유망 수출품목의 해외인증 지원 강화, 신산업 분야 시험인증서비스 선제적 개발, 유망기업 전주기(발굴-기술평가-판로-수출) 지원 추진
- ◇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술규제 혁신 및 수출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필요
 - 기술규제 합리화 및 애로해소를 통한 기업활력 제고,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 강화 추진

(1) 주요내용

□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표준정책 추진

- 인공지능, 양자기술, 첨단제조,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요구하는 국제표준 선제적 개발
-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표준화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진국·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국제표준 협력
- KS인증 제도 혁신, 중소기업의 표준화 지원 확대, R&D-표준연계 강화 등 민간의 표준화 활동 지원
-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 해소·편의 증대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한 국가표준 개발

□ 융복합·신기술에 빠른 대응으로 제품안전 확보 및 제품시장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제품안전 우려 해소

- 해외직구 확대 등 온라인시장 환경 변화 대응,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 포장방법 개선 등 법·제도 정비
- 안전기준 정비 등을 통한 융복합 신제품 시장출시 지원, 안전 관리 대상의 규제수준 조정 등 제품안전 규제 합리화 추진
- 해외직구 등 급성장하는 온라인 시장 감시강화* 및 수입제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확대 등을 통해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을 선제적 차단

*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 확대(24년 448개 → 1,000개), 온라인 불법제품 기획단속 등 온라인 단속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추진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매장 확대 및 사업자의 리콜이행점검 강화로 리콜제품의 재유통 방지

□ 글로벌 인증환경 변화와 新수요에 대응하는 시험인증 서비스 경쟁력 확보로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지원 확대

- 유망 수출품목 해외인증 획득 지원, 미래 신수요 시험인증 서비스 발굴 등 수출 증대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AI 등 첨단산업의 수출지원, 국가 품질경쟁력 향상, 급증하는 공인기관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KOLAS 인정체계 개선 추진
- 유망기업 발굴-기술평가-판로-수출의 전주기 지원, 기술기준 개발, 인증·표준 기업애로 해소 등 인증규제 극복을 위한 기업 지원체계 구축
- 미래 모빌리티 등 대내외 환경 변화 대응으로 법정계량 경쟁력 강화 및 면밀한 사후관리를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 수출 1조불 시대 경신을 위해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

- 정보수집·분석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여 기술규제 대응 역량 강화
- 해외 규제당국과 기술규제 대응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불합리한 해외 무역기술장벽(TBT) 해소
 - *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기술장애요소
- 기술규제 영향평가, 3주기('25.~'27.) 범부처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시행 및 현장체감형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추진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3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24				
국제표준화활동 순위	8	8	8	8	8	7	과거 실적 및 추세와 '24년도 실적인 8위를 감안해, '30년 7위를 목표로 설정	국제표준 제안, 정책위원회 활동, 간사국 수입, 기술위원회 정회원 가입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국가별로 분석해 순위 발표	국제표준화기구(ISO) 발표자료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24	'25	'26	'27
국제표준 제안 건수	82	86	87	88	89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 운영매장수	신규	265,513	266,000	269,000	271,000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인증·표준 애로 해결 건수	211,198	222,140	215,584	217,739	219,916
국내외 기술규제 해소 협상 건수	264	264	242	250	255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초융합·초연결·초지능화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산업구조 및 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 가속화

- 표준은 단독표준(stand alone) 중심에서 제품·서비스의 융합 또는 상호운용을 위한 모듈·인터페이스 표준으로 이동 중

☐ 경제·기술 안보 확립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표준 급부상

-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국가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첨단 산업 분야 新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 자원으로 표준을 활용

* 미국 핵심신기술 국가표준화전략('23.5월), 중국 신산업 표준화 방안('23.8월), EU 표준화 전략('22.2월), 일본 표준가속모델('23.6월), 캐나다 AI표준화 전략('23.1월) 등

□ 신산업 지원을 촉진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표준화 필요

- 국내외 산업정책과 국제동향을 반영한 전략적 표준화 및 미·독 등 기술표준 강국과의 전략적 표준협력 강화

□ 불법·불량 제품으로 인한 안전 위해요소는 증가 추세인 반면, 정부의 안전관리가 선진국보다 미흡하다는 인식이 상당

- 국민의 시각에서 제도·시스템을 정비하고, 빈틈없는 제품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내실화 추진

□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기업 지원체계 마련 요구 증대

- 생성형 AI, 이차전지, 탄소 중립,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의 지속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리쇼어링·보호무역 강화 추세
- 또한,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산업 및 시장 환경이 빠르게 재편

○ 시험인증산업 SWOT 분석

<강점(Strength)> - 제조업 기반의 강한 풍부한 수요 - 광랜, 스마트폰 등 높은 IT 활용성 및 접근성 - 높은 교육수준에 따른 시험인증 잠재인력 풍부 - 가격대비 신속한 서비스 제공능력	<약점(Weakness)> - 글로벌화 역량 취약 - 글로벌 시장정보부족 - 작은 내수시장 규모 - 복수인정체제 등 제도적 비효율성
<기회(Opportunity)> - 新성장산업 시험인증수요 증가 - 시험인증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 - 글로벌 시장 개방과 교역 증대 - 국가 인지도 향상	<위협(Threat)> -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 - 국내시장 경쟁 격화 - 기술규제 강화와 자국 산업 보호 - 新산업 대응 고가장비 투자 수요

- 환경정보 검증분야 IAF-MLA 체결을 통해 KOLAS 공인검증기관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국내검증서 해외통용 기반 마련('24.11.)
- 시험인증산업은 단순한 품질 검증을 넘어 미래 혁신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뢰성 높은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산업 전반의 성장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전략적 지원이 필요

□ 해외 기술규제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국의 자국 보호무역 조치로 수출업계의 애로 가중

- TBT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무역기술장벽을 적극 해소하고, 국내 기술규제에 대한 전 주기적인 합리화를 추진

(4) 기타

□ 홈페이지

- 국가기술표준원 : www.kats.go.kr
- e-나라 표준인증 : www.standard.go.kr
- 제품안전정보센터 : www.safetykorea.kr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www.kips.kr
- 한국인정기구(KOLAS): www.knab.go.kr
- 신제품인증: www.nepmark.or.kr
- 해외인증 종합지원서비스: www.globalcerti.kr
- 다수인증 원스톱서비스: www.k-onestop.kr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www.tacci.kr
- 계량정보시스템: www.metrology.kr
- 한국표준협회 : www.ksa.or.kr
- TBT종합지원센터 : www.knowtbt.kr

(1) 주요 내용

□ 기업 기술혁신·세계시장 선점 지원을 위한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 인공지능, 양자기술, 첨단제조 등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한 국제표준 선점 추진
-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산업정책과 연계한 핵심 기술에 대한 전략적 표준화 추진
- 탄소중립·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탄소발자국, 자원효율성 평가 등 산업 부문별 탄소규제 대응 및 저탄소화 표준화 추진

□ 민간(기업, 연구기관, 단체 등) 표준 개발 활동 지원

- 기술사업화 등을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표준 개발을 연계하여 개발된 기술제품의 시장 출시·수출 지원
- 우수 기술 중소기업에 컨설턴트 매칭을 통한 표준화 동향 제공, 국제표준화 방안을 지원하는 등 기업 참여 활성화 확대
- 핵심산업 분야 품질·성능측정 등에 사용되는 표준물질 개발·보급과 고품질 데이터 등을 활용한 참조표준 사업화 지원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표준화

- 인체치수 측정 및 인체 데이터 보급을 위한 표준화
- 장애인, 디지털 소외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표준화
- 중고 거래 플랫폼 서비스 등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표준화

(2) 세부 추진계획

□ 민간주도 표준개발 체계를 확립하고, 신산업 및 지속가능사회 관련 표준화 추진

- 기업의 기술혁신 · 글로벌 시장 선점 지원 등을 위해 AI, 양자 기술, 첨단제조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지원 추진
- 기업의 표준화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의 표준화 역량 강화, R&D 중단계 표준연계 확대, KS인증제도 개선 등 기반 조성
- 생활 불편 해소, 사회적 약자 배려, 서비스 개선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표준화 추진

□ 표준전문 인력양성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강화

-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최, 찾아가는 표준교육, 자유학기제 ·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초 · 중 · 고 표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고려대 표준지식학과 확대, 기술 분야별 공과대학 융합강좌 신설, 산업계 수요기반 석 · 박사급 표준 실무형 인재 양성 추진
- 표준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전환 교육과 표준 실무자 교육과정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표준전문가 역량 강화 추진
- 범부처 참여형 KS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의 표준 업무 역량을 제고를 위한 담당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 ISO/IEC 등 국제표준회의에 의장 · 간사 · 컨비너 및 국내전문가 참가 지원을 통해 국제표준 활동 제안을 확대하고, 표준 외교를 강화하여 임원진출 확대 추진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초융합·초연결·초지능화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산업구조 및 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 가속화

- 표준은 단독표준(stand alone) 중심에서 제품·서비스의 융합 또는 상호운용을 위한 모듈·인터페이스 표준으로 이동 중
- 특히,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등 산업 이슈에서 안전, 건강, 환경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로 확장

□ 저출산·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소득 및 생활 수준 향상으로 보건, 환경 등 삶의 질 관련 관심 확대

- 의료기기, 재활용품 등 실버산업 관련 표준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산업 표준화 수요 확대 예상
- * 2026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20%), 2050년 세계 최고령 국가(37.3%) 진입 전망
-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다양한 데이터의 대량 축적으로 편리한 삶의 새로운 수단(모델) 제시 필요성 증대

□ 경제·기술 안보 확립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표준 급부상

-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국가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첨단 산업 분야 新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 자원으로 표준을 활용
- * 미국 핵심신기술 국가표준화전략('23.5월), 중국 신산업 표준화 방안('23.8월), EU 표준화 전략('22.2월), 일본 표준가속모델('23.6월), 캐나다 AI표준화 전략('23.1월) 등
- 기업 간 생존을 위한 경쟁에서부터 AI,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국가 패권까지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표준 선점 중요

□ 신산업 지원을 촉진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표준화 필요

- 국내외 산업정책과 국제동향을 반영한 전략적 표준화* 및 미·독 등 기술표준 강국과의 전략적 표준협력 강화

* 초격차 프로젝트('23.3.),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24.5.) 등

- 또한, 국가 중심에서 민간 중심의 신속·유연한 표준화 체계 마련을 위해 표준화 인프라(성과홍보, R&D 등) 구축

(4) 참고자료

□ 홈페이지 주소

- 국가기술표준원 : www.kats.go.kr
- e나라 표준·인증 포털 : <http://표준인증.kr>
- 한국표준협회 : www.ksa.or.kr

(1) 주요 내용

□ 기술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및 안전기준 정비

- (법·제도) 신기술·신수요 제품 출시 지원, 불합리한 규제 조정 등을 위한 제품안전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추진
 - 기술발전 및 시장수요에 따라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초고속 전기차 충전기* 등)의 안전성 확보 및 시장출시 확대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 * 충전속도 향상에 대한 국민의 니즈 증가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제품 위해도를 고려한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을 통해 제품안전은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규제수준은 합리화 추진
 - *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은 단계적으로 규제수준(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조정
- (안전기준) 신수요분야 제품출시 지원 및 제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정비
 - 국제표준 추세에 맞는 시험기준 부합화, 불합리한 시험방법 개정,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안전기준 도입 등 안전기준 정비 확대

□ 국민 눈높이 맞춤형 시장감시 체계 구축

- (안전성조사)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확대 및 유통시기·수요를 고려한 적기 안전성조사로 위해제품 유통 선제적 차단
- (통관단계 협업검사) 관세청과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유통을 원천 차단
- (위해제품 감시체계 강화) 위해제품 원천 차단을 위해 ①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운영매장 확대, ②온라인 불법유통제품 조사강화, ③해외리콜제품 국내 유통 차단 등

(2) 세부 추진계획

□ 제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기능 강화

- (안전성조사)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확대 및 유통시기·수요를 고려한 적기 안전성조사로 위해제품 유통 선제적 차단
 - (불법·불량제품 단속) 온라인 등 시중 유통 제품, 통관단계 수입 제품에 대한 불법·불량제품 단속을 통해 국민안전 강화
 - (리콜제품 홍보 강화) 광역·기초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과 협조체계 구축하여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학교 알림장앱을 활용한 리콜정보 알림
 - (위해제품 감시체계 강화) 위해제품 원천 차단을 위해 ①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운영매장을 확대*, ②소비자단체(6개 단체) 등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③해외리콜제품 국내 유통 차단 등
- * 시스템 도입이 법적 의무는 아니므로, 유통사와 지속적 협의 필요
- (사고조사 체계 고도화) 동일·유사 제품의 사고 조사 강화 및 사고조사와 제품 리스크평가 연계 등 리스크평가 기업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 (통관단계 협업검사) 산업부(국표원)-관세청 협업으로 국내 유통 전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 검사 실시

□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안전기준 정비

- (법·제도) 기술발전 및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해 제품안전과 규제 합리화를 위해 제품안전 관련 법령 정비 추진
- (안전기준) 신수요 제품 대응, 불필요한 시험항목 재검토, 부적합 처리기준 등 효율적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 정비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시장특성) 글로벌 생산 · 유통 확대로, 수입품이 신규 인증 획득 건수의 약 60%를 차지*하며, 그 비중도 점차 증가 추세

* '24년 신규인증(안전인증, 안전확인) 34,650건 중 해외 수입이 21,005건

- (소비 · 기술) 온라인으로 제품 구매 확대, 해외로부터 직접 구매 등 유통 경로가 변화하고 융복합·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이용도 확산

- (소비형태) 인터넷·모바일 기술발달, 신속배송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해외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사례도 증가

- (제품기술) AI · IoT 등 신기술의 제품들이 출시되거나 새로운 분야 또는 융복합 분야에서 신유형 제품들이 출현

- (위해환경) 해외의 불법 · 불량으로 인한 제품의 안전 위해요소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제품위해사고는 지속 발생

- (해외) '24년 유럽(2,597건), 중국(816건) 등 4,182건의 리콜제품이 발생하는 등 완구, 전기용품 등에서 해외의 위해제품 발생이 매년 증가

- (국내) 전기용품 · 생활용품 · 어린이 제품에 대한 위해사례 접수 건수가 '22년 이후 다소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

*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수집된 제품관련 위해사례 : ('20) 32,932 건 → ('21) 30,500 건 → ('22) 36,406 건 → ('23) 34,181건 → ('24) 13,620건

- (국민 인식) 안전 제품 검색 등을 위해 안전포털 접속 건수*는 높은 수준이나, 정부의 안전관리는 선진국보다 약하다는 인식이 상당

* 제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 일일 평균 접속 건수 : ('20) 33,729 → ('21) 50,887 → ('22) 41,990 → ('23) 49,312 → ('24) 47,964

※ 국민의 시각에서 제도 · 시스템을 정비하고, 사업자(제조수입판매자 등), 소비자와의 소통강화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한 빈틈없는 제품안전관리 체계마련을 위해 지속 개선 추진

(4) 기타

☐ 홈페이지

- 제품안전정보센터 : www.safetykorea.kr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www.kips.kr

(1) 주요 내용**□ 기업지원 강화로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 유망 수출품목 및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소 과정(인증준비-신청-심사)에서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운영
- 글로벌 인증·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신산업·신기술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수요 발굴, 시험인증 전문인력 양성 및 시험인증 인프라 고도화
- 「적합성평가관리법」 및 부정행위 조사전문기관 운영을 통한 부정성적서 유통방지 등 시험인증 분야 신뢰성·공정성 제고

□ 공인기관 성적서·인증서의 국제통용성 확보 및 신뢰도 강화

- 국내 성적서·인증서의 지속적인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해 국제 기준에 만족하는 KOLAS 메디컬·숙련도 운영기관 전환평가 추진
- 국내 KOLAS 공인기관의 적합성평가 활동 및 성적서/인증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주기적인 정기평가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 인증규제 극복을 위한 기업 지원체계 구축

- 수출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 및 신시장 개척, 내수 기업 제품의 국내시장 조기 출시 지원을 위해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
- 혁신제품의 적시 시장출시 지원 및 기업이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형 인증제도 및 기준 마련 지원

□ 차세대 계량산업 지원 및 활력 제고를 위한 법정계량 경쟁력 강화

- 계량측정산업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제도개선, 사후관리 실시 및 불법신고센터, 감시원 활동 확대를 통한 경쟁력·신뢰성 제고

- 전략적 국제협력 활동, 계량 인프라 확충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한 R&D 대응 등 차세대 계량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

(2) 세부 추진계획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기술사업화 지원

- 국내 시험인증산업 발전 및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종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추진

- (유망시험인증서비스 개발) AI, 로봇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시험인증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통해 신제품의 시장 진출 지원

* 주력산업(반도체, 자동차 등), 유망신산업(AI, 로봇 등)에 대한 서비스 개발 추진

- (다수인증 원스톱서비스 제공) 다수인증 취득 과정에서 시간/비용 절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및 기업활력을 제고 하여 기업 지원과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구축) 코로나19로 이후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시험인증 인프라 및 인증체계 구축*

* 표면 방역 생활용품(세정제, 필름 등)에 대한 항바이러스 초기 성능 시험 및 성능 지속성 검증평가 체계 기반 마련

- (해외인증 종합지원) 수출기업 맞춤 지원, 해외인증 국내 시험기반 확대, 수출기업 해외인증 역량 강화 및 성과 확산 등 종합지원 추진

-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운영 및 제도 활성화를 통한 부정성적서 유통방지 및 신속한 조사 체계 구축

- 국내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인증서의 지속적인 공신력 제고와 국제 통용성 확보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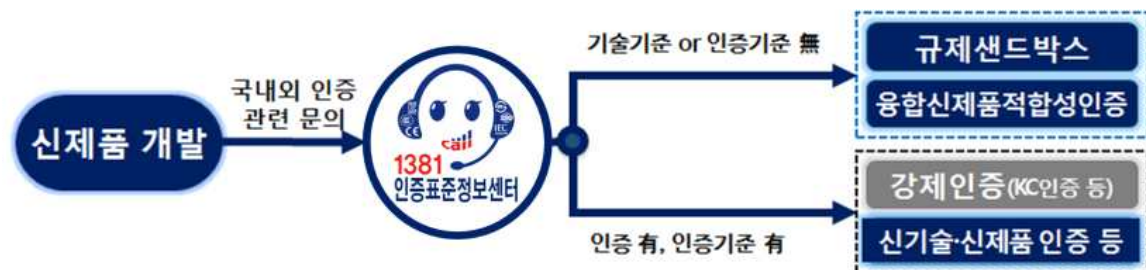
- (국제 통용성 확보) 국내 공인기관이 발행한 성적서/인증서 등이 국제 통용이 가능하도록 국제표준에 따른 지속적 관리*와 국제 인정기구(ILAC, IAF)와 국제상호인정협정 확대 및 지속가능성 대응**

* 국제표준(ISO/IEC 17025 등)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이 성적서/인증서를 신뢰성 있게 발행하고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재평가/정기검사 실시

** 환경정보 검증분야 IAF-MLA 체결 확대('24.11.)로 마련한 검증스킴 해외통용 기반을 활용, 국제적 ESG 공시규제 흐름에 대응

- (전환평가) 메디컬시험/숙련도시험운영기관의 인정기준이 되는 국제표준 전면개정에 따른 전환평가 추진으로 국제동등성 유지

- 기업 수요 맞춤 전문가 상담 및 인터넷·모바일 상담 등 “1381 정보센터” 운영 및 홍보활동을 통한 기업의 인증애로 해결



- 혁신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하여 신기술(NET)·신제품(NEP) 등 기업지원형 인증제도 운영 및 기술기준 개발 R&D 지원 등
- NET·NEP 인증제도 운영 및 신청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추진,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검토 등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관련, 수요조사를 통한 신규 대상 품목 선정 및 품질인증기준 제·개정 추진
-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제품에 대한 기준 개발 및 성능·안전성 개선 지원 추진

□ 상거래 신뢰성 강화 및 계량산업 경쟁력 확보 지원

- (법령·제도개선) 공정한 상거래 확립을 위한 계량제도 선진화
 - 계량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령 개정, 계량기 전주기 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기준 및 행정규칙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등 3건
- (면밀한 사후관리)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장 관리·감독 강화
 - 유통 계량기 및 정량표시상품 시판품조사를 통한 시장감시 강화, 소비자 감시원 활동 강화 및 불법불량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 신고·접수된 계량기 현장조사에 따른 시정조치 이후 추가 점검 및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 (대내외 환경·정책변화 대응) 계량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추진
 -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기술 변화 등 대내외 환경 및 정책 변화 대응을 위한 R&D 지원, 국제 동향 파악 및 국내·외 협력 활동 강화
- (소비자 참여 확대) 수혜자의 눈높이에 맞는 자율 계량관리 확산
 - 소비자·기업 등 정책 수혜자의 자율관리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소비자 감시원, 국민 참여형 법정단위 사용 캠페인 등 전개
- (계량산업 지원) 계량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 계량산업 경쟁력 확보 및 기반 조성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 산업 실태조사, 포상제도 등 지원 추진
 - * 지자체 계량공무원 대상 직무전문교육 및 워크숍 개최, 나라배움터 온라인 강좌 운영 등
- (지능형계량기유통관리시스템) 국민 소비생활 보호를 위한 계량정보 제공

- 지자체공무원·기업·소비자 대상 계량정보의 원활한 제공으로 행정 효율화 달성, 계량산업 선진화를 위한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 계량정보시스템이란? (www.metrology.kr)



- * 계량기 승인정보, 교육 신청 및 관리, 기술기준, 업체현황, 피해사례 등 다양한 계량정보를 제공하고, 불법·불량 계량기 온라인 신고접수·처리를 통해 소비자의 상거래 권익 보호를 추진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기업 지원체계 마련 요구 증대

- 생성형 AI, 이차전지, 탄소 중립,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의 지속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리쇼어링·보호무역 강화 추세
- 또한,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산업 및 시장 환경이 빠르게 재편
- 시험인증산업 SWOT 분석

<강점(Strength)> - 제조업 기반의 강한 풍부한 수요 - 광랜, 스마트폰 등 높은 IT 활용성 및 접근성 - 높은 교육수준에 따른 시험인증 잠재인력 풍부 - 가격대비 신속한 서비스 제공능력	<약점(Weakness)> - 글로벌화 역량 취약 - 글로벌 시장정보부족 - 작은 내수시장 규모 - 복수인정체제 등 제도적 비효율성
<기회(Opportunity)> - 新성장산업 시험인증수요 증가 - 시험인증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 - 글로벌 시장 개방과 교역 증대 - 국가 인지도 향상	<위협(Threat)> -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 - 국내시장 경쟁 격화 - 기술규제 강화와 자국 산업 보호 - 新산업 대응 고가장비 투자 수요

- 환경정보 검증분야 IAF-MLA 체결을 통해 KOLAS 공인검증기관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국내검증서 해외통용 기반 마련('24.11.)
- 시험인증산업은 단순한 품질 검증을 넘어 미래 혁신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뢰성 높은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산업 전반의 성장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전략적 지원이 필요

(4) 기타

□ 시험, 인증, 계량 등 적합성평가 관련 홈페이지 주소

- 한국인정기구(KOLAS): www.knab.go.kr
- 신제품인증: www.nepmark.or.kr
- 해외인증 종합지원서비스: www.globalcerti.kr
- 다수인증 원스톱서비스: www.k-onestop.kr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www.tacci.kr
- 계량정보시스템: www.metrology.kr

(1) 주요 내용

□ 【해외기술규제 대응】 무역기술장벽 완화로 기업 해외시장 진출 여건 개선

- (WTO) WTO회원국이 통보하거나 수출대상국이 미통보 후 도입·시행하는 기술규제를 분석, 업계전파 및 당사국과의 협상 실시

* [국정과제 37] :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 (FTA) 맞춤형 전략에 기반한 CEPA* TBT 협상 및 기체결 협정 이행 · 협력 강화를 통해 TBT 현안 해소에 효과적으로 기여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국내 기술규제 대응】 국내 기술규제 개선으로 기업활동 활성화 제고

- (사전관리)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로 불합리한 규제 도입을 예방하여 사전에 기업애로 및 행정력 낭비 방지
- (사후관리) 既 시행 중인 기술규제 중 현장중심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 기술규제영향평가('13년~), 기업애로 발굴('15년~) 및 인증제도 실효성검토('19년~)

- (상시관리) 현행 기술규정 중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기업부담 해소

* 기업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한 직접발굴 또는 시험기관(KTR, KTC 등)·협단체를 통한 기업애로 접수 후, 개선방안에 대해 소관부처 협의 실시

□ 【국내·외 대응기반 구축】 해외 기술규제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선제적 대응기반 마련 및 국내 기술규제 관리 정책 고도화

- (국제협력) 해외 TBT 질의처 및 규제당국과 양자 협의를 통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국제협력 기반 마련 및 정례화 추진
 - * 인도(BIS), 멕시코(DGN), 독일(DIN, DAKS), 프랑스(AFNOR), 우즈베크(ATR), 중동지역(GSO), 남미지역(MERCOSUR), 중앙아시아지역(EAEU), 동아프리카지역(EAC) 등
- (국내기반) 연구포럼 등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 기술규제 관리 정책 고도화 방안 마련
 - * 유사·중복 적합성평가제도 통폐합 방안 등 적합성평가제도 고도화, 신사업 성장 지원을 위한 불합리한 기술규제 적시 대응 체계 구축 등

(2) 세부 추진계획

□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통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강화

- (WTO체계) WTO 통보 또는 미통보 도입시행하는 숨은 규제를 발굴 하여 수출에 영향력이 큰 사안은 조사·분석하여 적극적으로 해소
- (FTA체계) WTO TBT 협정보다 의무범위가 확대된 수준으로 FTA TBT 협상을 추진하고, FTA 기체결국과 이행 협력 강화·확대
- (대응기반) 무역기술장벽 전문강좌, 논문대회,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획보도·SNS 채널 등 대국민 홍보 확대

□ 국내 기술규제의 전주기적 관리를 통한 규제합리화

- (기술규제영향평가) 법령 제·개정 시 신설·강화 기술규제에 대해 타 제도와 중복여부, 국제표준 부합화 등을 평가
-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각 부처 적합성평가(인증제도 등)에 대해 3년 주기로 실효성을 검토하여 폐지·통합 등 사후 정비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해외 기술규제) WTO 회원국이 통보*한 TBT 통보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4년 4,337건이 통보되어 WTO 출범 이래 최고치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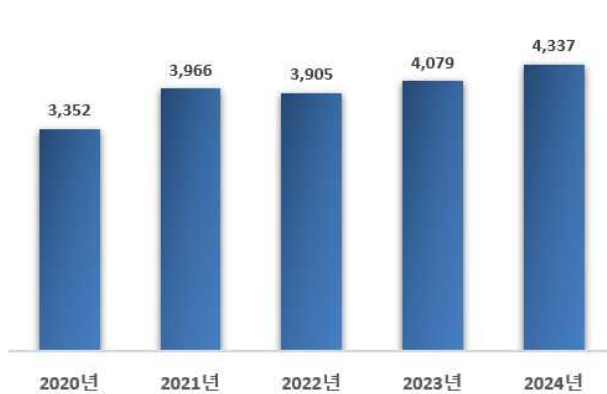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의 통보문은 1,150건으로 전체 통보문의 약 26.5%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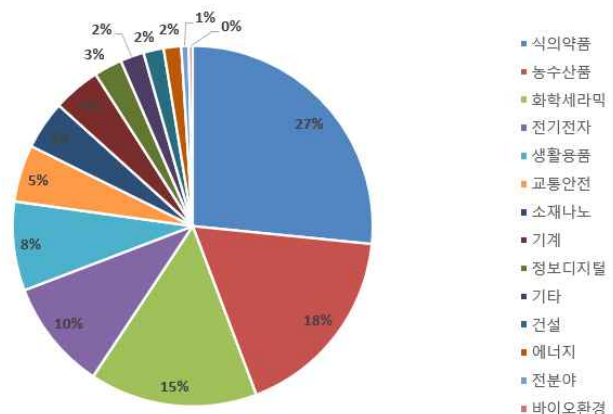
- 15대 중점국*의 기술규제 제·개정 통보가 지속 증가 추세

* 15대 중점국: 10대 수출국(美, 中, EU, 日, 베, 대만,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말련),
5대 신흥국(칠레, 사우디아라비아, 알바에미리트, 러시아, 인도)

- 미국은 에너지효율, 교통안전 관련 규제 신설·강화, 중국은 전기전자·기계 품목의 강제인증을 확대하여 기업 애로 가중



<연간 통보건수 추이>



<2024년 분야별 통보 비중>

○ TBT 대응체계 정비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역량 제고 및 기업 소통 등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무역기술장벽 적극 해소 추진

- (국내 기술규제) 기술규제는 국민안전·환경보호 등을 위해 도입되거나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으로 기업에 부담 요소로 작용
 - 28개 부처에서 2,180종의 기술기준, 246개 인증을 운영 중('25.)으로, 기업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 해소를 지속 요구
 - [사전관리]기술규제영향평가, [사후관리]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및 기업애로 발굴·개선 등 쏘주기 기술규제 합리화* 추진
- * 법적 근거: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품인증 등) 제3항('18.12.13.)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30호 '18.12.24.)

(4) 기타

- 홈페이지 : 해외 기술규제포털(www.knowTBT.kr),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